

언론의 죄와 책임

리 수 현(익산 용안천주교회 신부)

허끝 보다 붓끝이 더 무섭다. 말은 많이 하더라도 공중에 날아가 버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하긴 한치도 안 되는 허끝에서 나온 말이 사람의 살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하지만, 붓끝이나 펜끝에서 거미줄처럼 이어져 나온 글은 그대로 남아 있어 한번 죽은 사람을 두고두고 죽인다. 그러므로 글은 말보다 훨씬 더 무섭고 위협적 이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현대에 가장 신속하게, 혹은 즉각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TV이다. 이것은 시청각을 모두 동원시켜 사람의 기억 속에 뚜렷한 영상을 입력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말이나 글이 갖는 위력이나 그것들이 주는 영향은 영상 매체인 TV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진 다.

4. 19혁명도 언론 진실보도에 힘입어

우리는 말과 글과 영상 등으로 사회 일반에 대한 사실 보도와 진단 및 예측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까지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발전과 인간 발전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수행 직능을 언론이라고 하고 그 목적을 위한 공기(公器)를 언론 매체라고 부르고 있다.

언론의 활동 대상과 범위는 사회 전반이다. 인간 사회가 성립되면 거기에는 자연히 그리고 반드시 언론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그것은 상통과 공익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사회는 언론의 향방에 의하여 그 운명이 좌우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언론 중 '사자들의 양심과 의식' 여하에 따라서 사회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언론의 위력은 엄청나게 크다. 언론이 정치 권력에서 벗어나 자율성

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사회는 건전한 발전의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 만일 언론이 정치 권력과 결탁한다면 그 시너지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는 경직되고 위축되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만다.

우리는 4. 19 혁명이 바로 언론의 진실 보도와 자유 투쟁에 힘을 얻은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은 5. 16 군사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독재정권에 의하여 혼란이 잘 된 탓에 자기 사명과 구실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독재자의 폭압정치의 도구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기쁨조 노릇하는 데 정신이 없었다. 결국 사회의 귀와 눈이라는 언론 자체가 귀머거리가 되고 눈먼 장님이 되었다. 병신이 된 언론은 사회적 병폐를 만연시키고 사회 자체를 분열시키면서 국민을 좌절의 늪 속에 빠뜨리면서 국민의 힘을 속 빼버리는 악역을 도맡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올바른 사고력과 판단력까지도 흐리게 하여 바보로 전락시키는 죄를 짓기도 하였다. 우리의 언론이 정치 권력과 한 통속이 되어 권력자들의 심중을 미리 헤아려 그들의 선전부 및 비호세력으로서 부(富)와 막강한 힘을 얻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국가부도 방지 '언론'도 책임

지금 이 순간 우리 나라는 경제파탄으로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한 중증경기(重症驚氣)를 앓고 있으며, 서민들은 무서운 정리해고와 물가상승에 대한 공포중에 걸려 있다. 이에 대한 제일차적 책임은 무능한 김영삼 정권과 아무 것이나 돈되는 것은 다 먹어치우려고 무리하고 줄속

한 경영을 문어발식으로 해온 재벌 기업들에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국가 경제파탄과 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언론이며 더 정확히는 언론 재벌이다.

만일 우리 나라 언론이 어떠한 억압과 불이익 속에서도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본래의 사명과 책임을 다했다면 지금의 국가부도나 IMF 경제 실태통치라는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언론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눈을 부라리고 조사하여 사실대로 세상에 알렸다면, 문제의 해결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그러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저버리고 수십 톤의 무가치(無價紙)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장삿속에만 혈안이 되었었으니 어떻게 잘못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간파할 수나 있었겠는가!? 지금의 우리 나라 언론은 그야말로 뜻때기 시장의 장사치 언론에 지나지 않는다.

권언유착 끊고 국민언론으로

국가경제 파탄을 좌시한 언론은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이 국민에게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죄가 크다. 언론은 지금의 국가경제 비상사태에 앵무새처럼 정경유착 단절만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스스로 속죄하고 참회하면서 권언유착을 끊어버리고 진실하고 솔직한 국민언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권을 업고 천방지축 날뛰던 언론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을 속이는 언론, 해바라기성 언론, 창녀 언론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언론의 책임자들은 이 기회에 손을 떼라!



평화와인권

제 83 호

1998년 2월 10일

발행처 : 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문 만 식

· 전화)0652-76-1253 · 팩스)0652-74-7486 · 통신ID)paulmun(천.나.녹두)

· E-mail : human@kor.inp.or.kr · Homepage : http://kor.inp.or.kr/human

양심수 인권탄압 '공세적'

전주교도소, 인권유린 누적 심각

양심수 사면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주교도소에서는 양심수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지난 2월 4일, 한겨레신문 '주장'란에 '전주교도소 양심수 전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전주교도소 내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었다. 단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접견금지 해제'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혁신대오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안호영 변호사(백제종합법률사무소)가 2월 6일 재소자 접견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측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수감중인 양심수들을 이중 삼중으로 옥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없이 서신왕래조차 제한

실제로 한 재소자는 특정인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금지당했고, 제3자를 거쳐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

도 허락되지 않았다. 밖에서 이들에게 써보내지는 편지들도 함부로 먹물이 칠해지고 있다. 또 소위 '대여 허가도서목록'에 올라있는 책조차 반입이 불허되고 있다. 접견은 월 가족 2회로 제한되어 있고 가족 이외의 일반인에 대한 접견은 일체 불허되고 있다. 타 지역 교도소들이 가족 접견을 2회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인 접견도 자유로운 데 비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전주교도소, 인권 사각지대

소내 규정은 재소자를 2년 이상 독거방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심수들은 이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독방수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기수에게 시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허되고 있는데 이 또한 타 지역 교도소들과 전혀 다른 점이다. 재소기간이 오래될수록 적용 규정은 완화된다는 규정과 원칙에도 양심수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양심수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항의하며 최보경씨 등 20여명이 단식농성투쟁을 벌이는 한편 변호사를 통한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민가협, 인권선교협의회, 천주교사제단, 전북총련 등은 10일 오전 전주교도소 앞

에서 규탄시위를 열고 소내 양심수 인권탄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도소측은 단식투쟁 등 소내 상황이 외부에 전해지는 것을 차단하고 단식을 해제하는 데만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 재소자들의 요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군비축소, 협력기금증액

전북본부, 1억 모금 지정기부 '대북지원 전담기구' 설치 제안

[북한동포돕기운동 전북본부] (대표 한상열 목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 측에 북한동포돕기운동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한편 각계 각층에서 모아진 성금 1억원을 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환경남도에 지정기탁했다.

전북본부는 2일 회견에서 현정부가 "남북한 긴장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남북합의서 구체적 이행을 위한 국회 입법화', '대북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전북본부는 민간 동포돕기운동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의 부당한 간섭이 근절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대북식량지원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민간단체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문제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바로잡습니다

82호 1면 머리 "모든 양심수를..." 기사에서 세 번째 문단의 '박기평'을 '박기호'로 바로잡습니다.

[전주정의평화정보센터]가 1998년 2월부터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전북의 인권현장을 좀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독자기고] OPPA, 랩 안에 담긴 사회의식 그러나 "듣거리"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남성 8인조 댄스그룹 'OPPA'가 최근 '애국심'을 타이틀곡으로 한 첫 앨범 'Deathless Love' (불멸의 사랑)을 발표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 8명으로 이뤄진 OPPA는 멤버들이 돌아가며 보컬과 랩을 고루 맡아 실력적인 음악에 실력과 새내기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애국심'은 남다른 관심을 끈다. 이들은 이 노래에서 반전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노랫말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다 (신문기사에서도 볼 수 없었을 완전판으로).

죽어 죽어 모든 전쟁의 집행자 우리
평화를 망치는 자 / 죽어 죽어 관순
누나 만세 불러 지킨 이 나라 갈라
는 자 / 침략자야 너 미안하지 않니
하늘에서 단군 할아버지 만나 / 짝
싸게 빌어 싸싸 빌어 거기서 또 한
번 죽기 싫다면- (재미없는 부분은
중략) / 두만강 푸른 물에 수영도
하고 모두 개마고원서 스키를 타보
자 (... 중략) / 평화협상을 한다더
니 뒤로는 핵폭탄을 만들어 / 그걸
어따가 쓸려고 해 차라리 그 돈으로
잘 살아봐 (후략)

어떤가? 펑크헤어스타일의 이들이 손가락으로 북북 쳐대며(TV화면에서는 힙합댄스로 보이겠지만) 죽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뒤 구린 누군가는 오금이 저릴지도 모르겠다.

「사랑밖에 난 몰라」 류에서 최근의 「오늘밤 너를 그냥 둔다면 말도 안돼」 류에 이르기까지 순박한 사랑에서 변태적인 사랑행각에까지 이른 우리 가요의 노랫말현실을 생각하면 일견 시원스런 통쾌함까지 느껴지는 노래가 아닐 수 없다.

애국심 외에 또 다른 관심을 끄는 곡은 '세상을 등지려 하는 친구들에게 들려주고픈 우리의 노래'라는 팔

호 안의 부제가 달린 '행운아'. 좋아하는 연애인이 죽었다고 따라 죽겠다 / 사랑하다 헤어져 보고싶어서 죽겠다 / 일등 이등 떨어질 때마다 죽어야만 했었다면 / 난 난 열두 번도 더 죽었어(중략) / 자꾸 죽으려고 하는 내가 불쌍하다 (후략)

OPPA를, 타이밍을 잘 맞춰 I.M.F 시대에 애국심을 노래했고, 때아닌 애국주의로 똥똥 뭉친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가고 있는 순발력 좋은 그룹 정도로 단순히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에게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은 시기적절한 타이밍 때문이 아니라 -참고로 노파심에서 알아보니 '애국심'이라는 곡은 I.M.F 시대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해대는」, 당연하지만 지금껏 자주 접하지 못했던 모습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가 치미는 것은 그 좋다는 가사말이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발들 알아듣게 떠들어야 남녀노소 두루두루 알아먹을 것이 아닌가.

가요계의 불황 속에서도 유독 '잘 나가는 그룹'으로 유명해졌으니 잘 나가는 만큼 고민도 더 많이 해 더 강한 메시지를 띄워주길 바란다. 아 다시피 우리 충격완화요법 덕에 웬만한 메시지는 그냥 흘려버리는 데 익숙해 있으니까. 아울러 바램 한가지를 더 말한다면 장기수 석방을 위한 갱스터 랩 하나 만들어 불러줬으면..... 싶다. 오! 하지만 새로운 가수의 출현은 늘 설렘과 함께 쓸데 없는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엔 얼마나 갈까? 이름이 거창하니(O.P.P.A-ONNI POTENZA PER AVANZARE: 최고가 되기 위한 무한한 힘) 꽤 버터주려나?

(박지명, 방송작가)
292

▶ 군산미군기지 공항 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전북대책위] 1차 실무자회의

군산미군기지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아 [군산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북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하여 참가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바로 이어 아래 시간에 제1차 실무자회의를 갖는다. '전북공동대책위'는 '인상안 철회와 아울러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중장기적 사업을 행하는 모임'을 지향하고 있다.

때: 1998년 2월 16일 (월) 오후 7시
곳: 군산연합 사무실 (0654-471-5331)

▶ 전북여성운동연합 제5기 대의원총회

[전북여성운동연합]이 중앙위원회와 대의원총회를 열어 제5기 사업을 결산하고 6기 사업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정세강연회도 준비되어 있다.

때: 1998년 2월 12일 (목) 오후 1시
곳: 전북여성회관 2층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전 준 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전북은행 535-21-0027850
우체국 402297-0053040

"굴욕적 협상서명 반대"

군산미군기지 서명모임, [전북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서명 서명운동, 법적 대응도 병행

3월 7일로 협상단료가 되는 시점에서 시민모임은 군산미군기지 사용료 인상 철회 투쟁의 일환으로 시민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군 당국은 군산 미군기지 250만평 가운데 공항 시설로 2만평을 민간 사업자에 임대하여 그 사용료를 책여왔고, 97년에는 민간공항 사용료 300%인상과 유지보수비 200%인상안을 내놨다(환율인상으로 실제로는 두 배의 인상효과를 낳게 된다).

[군산 미군기지 민항 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관계부처(건교부·국방부)에 기지사용료를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이들 부서가 굴욕적인 협상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모임은 참가단체 위주로 서명작업에 들어갔으며 전주, 군산, 익산에서는 이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서명 운동을 계속해 10만 명의 서명 명부를 건교부와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모임은 법도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역의 각 사회·시민단체들에게 제안하고, 오는 14일까지 참가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0654-467-8788). 시민모임은 이어 16일에 1차 실무자회의를 열고 이달 말에 '전북공동대책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민모임은 "미군기지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항공기 이착륙 사용료를 받는 행위가 SOFA협정

(주둔군 지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공항활주로 사용료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또 "군산기지가 육군군수원지 문제와 쓰레기, 소음발생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군산 시당국에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1차 회의는 2월 16일 오후 7시 [군산연합] 사무실(0654-471-5331)에서 열리게 된다.

'세계 난민 사진전' 전주에 오다

"난민법 제정" 촉구

'세계난민사진전'이 전북예술회관에

[평화와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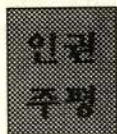
택시노동자, 어용노조 퇴진 투쟁 노조집행부 어용행각·임금협상 결과에 분노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산하 전주지역 택시노조(위원장 서영진)는 지난 1월 14일 사납금을 11,500원 인상하고 택시 요금이 오르는되는 즉시 5,000원을 추가 인상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총액 기준 임금액은 703,000원으로 체결됐다. 그러나 체결된 임금협상 내용은 사납금 인상을 대비 임금 인상율은 28%에 그친다.

민주택시연맹 전북지역본부(주)는 2월 4일 "지역노조 집행부의 어용행각으로 지역노조 소속의 22개 단위노조 중 이미 천우기업, 신한교통, 하나교통, 이화교통 등 4개사가 지역노조를 탈퇴했고 10여개 단위노조가 탈퇴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민주택시연맹 전북지역본부 건설에 전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모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또 "전택노련"은 사업주의 대변인에 불과"하며 "마땅히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6 임금협정 무효화 쟁취를 위한 전주시 택시노동자 대책위원회(준)]도 <전주지역 택시노동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1월 14일 임금협정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반노동자적 입장"이라며 노조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평화와 인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 E-mail: human@kor.inp.or.kr
· Homepage:
http://kor.inp.or.kr/human



“군비축소와 평화정착만이 남한과 한반도의 살길이다.”

조 문 익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

김대중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지 얼마 뒤 한겨레신문에 미국의 셀리그 해리슨이라는 한 학자가 '군비축소'를 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하였다. 한마디로 황당하지만 그러나 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격렬한 전쟁을 치룬 한반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했던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군비축소가 지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지나친 군비,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 가운데 하나

현재 한국의 경제과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아무래도 문어발식 경영과 상호지급보증 등을 무기로 은행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무계획적 과잉생산으로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자 자신은 물론 은행까지 무너지게 만들고, 나아가 국가마저 부도의 위기에 몰아넣은 부패 재벌들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원인을 들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군비문제이다. 얼마전 미국의 군사전문주간지 <디펜스뉴스>는 한국이 세계 제4위의 무기수입국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군사정부와 보수정치세력은 남북한 냉전대결구도를 강조하면서 안보와 관련된 각종 억압적 통제기구들을 확장시켜 왔으며,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재정구조를 고착시켜 왔다. 그 결과 매년 10% 이상씩 방위비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방위비가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그

대로 국가재정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미국중속적 무기수입 체계가 더 문제

특히 도입되는 무기의 대부분이 미국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0~94년까지 총 해외 군사교역은 80억 달러였고 이 가운데 무기 도입비는 총 46억 5천만달러이며 미국무기 도입비는 37억 4천만달러로서 해외무기 구입비의 평균 80.4%이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93년 86%, 94년 90%로서 미국무기 의존률이 더욱 높아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분단을 근거로 확장되어 온 군비부담이 외화유출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남북한의 동반군비축소가 IMF 터널을 온전히 지나게 하고 인민의 기아상태를 해결한다.

한때 한국경제가 잘나가던 때에는 과중한 군사비 부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한 현 국면에서 이러한 과도한 군사비 부담은 성장의 질곡으로 변화해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상황에서 과중한 군사비 부담은 경제회복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사회구조에서 대량실업과 해고사태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심각한 경제력의 차이(소득격차 18:1)로 인해 북한이 지출해야 하는 군사비와 '인민의 기근'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2002년까지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현재의 반으로 줄여나가자. 그래서 현재보다 2배, 3배의 사회복지

비를 만들어내자. 노동자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자.

동반군축으로 만들어지는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경제생활이든 정치활동에 있어서든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정부는 하루속히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라!

대인지뢰대책회의, 성명서 발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와 국제지뢰금지운동은 한반도 대인지뢰문제에 대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긴장상황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대전차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는 방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미 123개국이 서명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이 모두 서명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구축과 평화통일에 한걸음 다가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협약에 서명할 때까지 △4자회담의 의제로 대인지뢰문제를 제기하고 △가능한 빨리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할 의지를 밝히고 △대인지뢰금지를 위한 일정을 밝히며 △대인지뢰 수출과 생산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를 선언하고, 아울러 △대인지뢰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평화와인권

제 84 호

1998년 2월 16일

발행처 : 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 규 현

편집인 : 문 만 식

· 전화)0652-76-1253 · 팩스)0652-74-7486 · 통신ID)peacehr(천.나), 오늘(복두비비) · E-mail: human@kor.inp.or.kr · Homepage: http://kor.inp.or.kr/human

“장기수 면회보장” 약속 받아내

전주교도소장, ‘퇴진’ 등 싸움에 밀려

전주교도소 양심수와 장기수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면회금지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전북지역 사회·종교단체들의 투쟁이 '소장 퇴진' 투쟁의 물결에 밀린 교도소장의 면회보장 약속과 보안과장의 공개사과로 일단락 됐다. 이로써 전북 민가협, 인선협, 천주교사제단, 총학생회연합 등의 회원 50여명은 밤샘농성 5일째인 2월 13일 밤 9시경 전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약식 집회를 갖고 자진 해산했다.

‘면회보장’에서 ‘소장퇴진’까지

전주교도소 내 양심수와 장기수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평화와 인권 83호 참조)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된 이 지역 사회·종교단체들의 교도소 앞 농성은, 교도소측의 상식밖의 조직적 폭력 대응과 무책임한 말바꾸기 등으로, 최해룡 교도소장의 퇴진 요구로까지 발전해왔다.

지난 9일 국민회의쪽 국회의원과 사회·종교단체 대표, 그리고 교도소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최소장은 양심수와 장기수들의 이름까지 지적해가며 이들에 대한 면회를 허용한다고 약속했고, 교도소 앞 농성단은 이날 자진 해산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장기수를 면회하려 간 민가협 오경숙회장 등 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은 '어젯밤' 약속을 자기 입으로 다시 집어삼키는 최소장에 항의하다가 서무과장실에서 밖으로 강제로 끌려나왔다(이후 사건 진행과정은 2면 '싸움일지' 참조).

12일 최해룡(노동운동가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씨를 면회한 부인의 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의 소내 단식을 주도한 이유로 폭력사범 사동에 격리 수용되어 있으며, 이가 부러지고 허리에 심하게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씨가 써보내려는 일체의 서신이 교도소측에 의해 차단당하고 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보관해 왔다가 지난해 11월 전주교도소로 이감해오면서 함께 가지고 온 책 전부를, 밀줄 등 낙서가 돼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측은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최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교도소 가혹행위 사회문제화

전주교도소 양심수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내 일간지인 전북일보(김준호기자)가 전주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지나친 징벌을 폭로하는 기사를 사회면의 주요 기사로 써내내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다. 김기자는 기사에

서 "전주교도소의 경우 교도소 규율을 어겨 독방에 수감된 재소자에 대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고 수감하는 등 지나친 징벌을 가하고 있다"며 "쇠사슬은 소란 및 자해,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전주교도소측은 징벌을 받은 재소자를 쇠사슬로 묶고 보통 1주일에서 2개월여 동안 수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법·제도 개선 싸움 지속돼야

사회·종교단체들의 5일 동안의 농성은 교도소장의 장기수 등 양심수 면회보장 약속을 얻어냈지만, 이미 약속을 한번 어긴 바 있는 소장의 구두 약속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하는 점과, 소내 차별대우 등 처우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이번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한상렬 목사는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 뿐"이라며 "양심수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싸움을 이끌었던 김진화 신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률적인 싸움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 0652)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전 준 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전북은행 535-21-0027850

양심수·장기수면회 전면보장과 최혜통 전주교도소장 퇴진싸움일지

- ▷ 97년 10월 이후로 기존 허용했던 양심수면회가 불허됨. 민가협회원과 교백교회, 사제단의 면회가 거부됨
- ▷ 97년 12월 30일 인선협, 민가협, 교백교회 양심수면회 거부, 영치금 반입 거부.
- ▷ 97년 12월 31일 인선협, 양심수 접견 불허 항의시위
- ▷ 98년 1월 23일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장기수 면회거부에 항의시위
- ▷ 98년 2월초 민가협회원 양심수·장기수 면회 거부됨
- ▷ 98년 2월 2일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 농성 돌입(전주교도소 인권탄압규탄 ; 처우개선을 요구함)
- ▷ 98년 2월 9일(화)
 - 오전 10시 전주교도소 인권탄압(면허금지, 서신검열 등) 중단 요구 항의시위(150여명)
 - 10시 30분 대표단 구성 및 교도소장 면담 :면담과정에서 소장은 "절대로 안된다", "형평성 유지를 위해 안된다"고 일관되게 거부
 - 오후 1시 대표단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과 함께 성명서 발표
 - 오후 6시 30분 장영달 국회의원 교도소장 면담
 - 오후 7시 30분 장영달의원 입회 아래 "양심수 지정 3인을 2월 10일(수) 오전 10시에 면회보장"과 "1주 후에 지정 3인 면회보장" 및 "이후 기존 관행대로 면회보장" 등을 교도소장으로부터 약속받음
 - 오후 7시 50분 대표단의 경과보고 및 농성 해산
- ▷ 98년 2월 10일(수)
 - 오전 9시 40분 대표단 면회 신청
 - 오전 10시 교도소측 전달의 면회보장 약속 일방적 파기
 - 오전 10시 20분 교도소 서무과장실에서 약속 이행 요구 및 1차 소장 면담 요청 및 거부 : 전달 함께 있었던 부소장은 공무원인데도 술에 취한 채 "무슨 약속을 했냐"며 오히려 행패를 부림
 - 오전 11시 2차 소장 면담요청 및 거부
 - 오전 12시 3차 소장 면담요청 및 거부
 - 오전 12시 20분 교도관 투입, 강제 해산
 - 오후 2시 전주교도소 양심수 면회 보장 요구하며 항의농성 시작
 - 오후 6시 교도소장과 대표 2인(한상렬목사, 김진화신부) 면담
 - 오후 7시 비전향 장기수 면회 일방적 거부 및 이후 밤샘 천막 농성
- ▷ 2월 12일(목)
 - 오전 9시 10분 교도대 300여명, 기습적으로 천막을 철거하고, 플랑카드 2종 철취해감 : 이 과정에서 이를 막던 김봉술 신부의 코피가 터지고 고민영 목사가 팔이 꺾여 넘어지는 등 여러 사람이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음. 차량 훼손 : 경찰은 10일부터 주변에 페퍼포그, 사복체포조, 견인차 등을 배치하고 대기
 - 오전 12시 철거된 천막 옆에서 20여명 스킨로프를 깔고 교도소 정문을 차량으로 막고 농성
 - 오후 1시 40분 경찰, 점심식사를 하던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시킴 : 밥과 국을 뒤엎음
 - 오후 6시 30분 경찰, 농성대 텐트 강제 철거. 비박에서 밤샘 농성
- ▷ 2월 13일(금)
 - 오전 10시 경찰, 농성대 강제 연행. 학생들 훈방. 최재훈(인선협 사무국장)씨 외 3인 오후 5시 석방
 - 이후 교도소 앞 농성 계속됨
 - 오후 8시 교도소장과 대표단 면담: '장기수 면회보장'을 약속받고, '소장의 사과, 농성대에 대한 보안과 장의 공개사과'를 얻어내고 닷새째 농성을 품

신명사)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반개혁적 광인집단,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

- 총파업과 집회를 철회하며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위원장 단병호)는 보다 치밀하게 준비된 투쟁을 위하여 총파업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들인 김우중 등 전경련의 재벌총수들은 뽀뽀스럽게 기자회견을 갖고 33조원의 빚보증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골간 가운데 하나인 기획조정실은 절대로 폐지할 수 없음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파업철회를 결정하면서 재벌들의 광인(狂言)을 듣게되었는바 한국사회의 문제가 현재 닥친 긴박한 외환위기를 뚝질하는 것으로는 별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재벌들의 이러한 반개혁적 준동은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가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었는가를 확인해주는 지표이다.

특히,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는 김대중당선자 등 정치권이 민주노총의 파업철회의 의미를 오관하여 정리해 고제나 근로자파견제를 강행처리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을 충고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철회한 것이 8대 요구(재벌총수퇴진, 지주회사 설립반대,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교원·공무원노조 즉각 허용, 정리해고반대, 파견근로반대, 고용안정기금 확대, 부당노동행위 등 근절)을 철회한 것이 아니며, 8대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된 투쟁을 해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이제 김대중당선자와 정치권이 파국을 피하기 위하여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1998년 2월 13일

군산미군기지 위조지폐사건 파장 미군범죄수첩 - 한국 검·경 수사권행사 소극적

군산미군기지 안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적극적인 단독수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0일과 이달 6일 군산미군기지에서 만원권과 달러 위조지폐가 각각 다량 발견되었다. 검찰은 1월 20일 발생된 위조지폐가 미국의 복사기 전문 제작회사인 OSI의 복사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하고 용의자(한국인 10명, 미국인 10명)에 대한 지문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주도적인 초동수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오류를 범했다. 검찰은 한미행정협정과 치외법권을 이유로 초기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미군기관이 주도하여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지문 의뢰과정에서 만원권 위폐 발생일인 1월 20일 직후 한국인 용의자에 대한 지문은 다음날인 21일에, 미군용의자(10명)의 지문은 15일이나 지난 2월 5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의뢰했다.

검찰조사 결과, 발견된 위폐를 복사한 OSI사 복사기는 군산에 5대, 전부가 미군기지 안에 있는 미군의 소유물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미군이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2대와 '보안상' 공개하지 않고 있는 1대 등 3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하지 않은 채, 미국인과 한국인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 2대의 복사기만 수사대상에 올려 집중적인 지문조사를 벌여왔다. (군산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문정현·문재

곤·오충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한국인의 지문만이 현재 정밀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모임'의 문정현 신부는 13일 군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가진 규탄시위에서, "한국검찰은 미군기지라는 특수상황을 이유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미군기지 내의 복사기 사용 등 시설관리체계를 고려해 볼 때 미군소행 범죄로 추정되는 만큼 위조지폐법의 색출을 미군측에 의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라며 "미군측의 위조지폐법에 대해 한국검찰이 단독수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미군측에 대해서도 "군산미군기지사령관은 미군범죄에 대한 은폐를 중단하고 한국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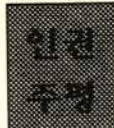
여성노동자 90%, "채용차별 겪어봤다"

전북여성노동자회, 도내 「남녀 고용실태」 설문조사

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 지난 97년 12월, 제조업·유통업·판매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도내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남녀고용평등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57.5%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막상 읽어보거나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대해 48.8%가 미혼·용모단정을 채용조건으로 적용받은 경험이 있고, 41.3%가 여자라는 이유로 낮은 직급에 채용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 ③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불평등 경험'에 대해 52.2%가 학력·경력에서 동일조건인 남자에 비해 임금차별이 있다고 대답했고, 65.9%가 성별에 따라 호봉기준이 다르다고 대답했다. 특히 미혼의 경우 호봉 기준 차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지급의 차별 중에 기본급 외의 수당지급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족수당의 경우 남성에게는 당연히 지급하나 여성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단서(이혼, 사별)조항을 두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④ '배치, 승진차별 경험'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15%가, 남성은 주로 생산·기획관리에 여성은 제품조립 업무 등 단순 보조·판매업무에만 배치한다고 대답했고, 55.6%가 승진에서 남성보다 불리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 ⑤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의 불평등 경험'에 대해서는 23.3%가 정년 차별적용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22.2%가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받거나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 ⑥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57.9%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 62.9%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이러한 휴가기간이 승진·승급·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⑦ 현재의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4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현재의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조사결과 제조업보다 유통업 분야에서 여성차별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시장화와 탈상품화를 위한 시민복지운동”

윤 찬 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위 IMF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분위기가 한껏 위축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판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장롱 속에 간직해 두었던 귀중한 금반지를 내어놓았지만 상당한 양이 어딘가에 매장(?)되어 있다. 금괴는 아직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 공연히 사람의 사연이 담긴 얘기들 돌반지와 결혼 패물을 빼앗긴 듯한 허탈감도 든다. 또한 언제 가장이 해고당할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가는 사람처럼 가족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벌써 서울 지하철에는 부랑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할 때 속 시원한 진단과 처방은 없는가? 그래서 매스컴에 등장하는 처명한(?) 학자들에게 귀 기울여 보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는 시장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것, 재벌의 책임론도 거론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제는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등 일반 서민들이 혼쾌히 받아들이기에는 모자라는 주장들이 다.

자본의 속성은 인간적인 요소들까지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왜 시장체제를 살려야 하는가? 아니, 시장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우호적이었는가? 자본주의시대의 시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5일장과 같이 정감 있고 나름대로의 인간미가 있는 시장이 결코 아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이란 필요한 물건을 찾아 서로 교환하는 소박한 시장이 아닌 것이다. 자본은 이윤이라는 아편을 먹으며 자라기 때

문이다. 이 아편 때문에 인간과 사회가 황폐화되어 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윤이라는 아편은 항상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본은 끊임없이 이윤을 찾아 국경을 포함한 모든 장벽을 부수고 모든 것을 상품화하게 된다. 인간 자체도 상품성의 논리에 따라 재단되고 처리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본과 시장이 권력의 등을 타고 인간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의 삶의 형태를 규정짓는 체제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윤은 항상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창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의 덩치가 커지면서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윤율은 줄어든다. 따라서 자본은 새로운 이윤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의 조성,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몰두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인간적인 요소들까지 상품으로 전락시키며 또한 근대 이후 형성된 민족 국가의 국경을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지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주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 역시 최대의 위기를 향해 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은 전체 지구를 상품과 자본의 신을 받드는 전당으로, 인류를 그 신도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약소한 자본들과 국가는 굴욕적인 무릎꿇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의 경쟁력 회복과 정리해고문제가 당장 중요하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의 삶의 형태를 규정짓는 체제

의 선택이다. 계속해서 시장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멸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인간다운 사회를 우선시하는 사회의 틀을 갖추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 이윤과 이익을 인간에 앞서서 절대시하는 시장논리를 병균으로 생각하자. 유기체가 약해지면 병균에 쉽게 감염된다. 간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개개인들이 물신(物神)보다는 인간을 존중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품과 시장논리의 위력을 꺾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인간에게 봉사하는 도구로 만드는 탈상품화, 탈시장화를 위해서 각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국민 개개인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비인간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는 권력과 자본에 대해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의 비인간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는 권력과 자본에 대해 싸워 나가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영국을 포함한 유럽국가들과 미국 모두 공황이나 제국주의전쟁을 겪고 나서 대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복지국가체제의 확립 등을 통하여 위기를 헤쳐 나갔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이제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부자들의 재산권보다 일반 국민의 생존권이 더욱 고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보며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관심을 집중시켜 보자.



평화와 인권

PEACE AND HUMAN RIGHTS

제 85 호

1998년 2월 23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문만식

·전화)0652-76-1253 ·팩스)74-7486 ·통신ID)peacehr(천. 나. 녹두) ·E-mail:human@kor.inp.or.kr ·Homepage: http://kor.inp.or.kr/human

[전원석방]

장기구금, 고령으로 앓고 있는 초장기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원 석방돼야 한다.

[편집자주] 민기협 양심수후원회가 매달 발행하는 '후원회소식' 76호에 실린 글을 요약 수록한다.

1998년 2월 2일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초장기수는 모두 23명이다. 1958년 체포되어 40년째 구금중인 우용각(70세)를 비롯하여 이들은 모두 최저 28년부터 최고 40년까지 지나간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장기구금에 대해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전세계가 비난했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투옥기간인 27년보다 더 오랜 기간이다.

이들은 모두 심각한 고문의 후유증과 장기간의 독거생활, 그리고 전근대적인 행형제도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 또한 50년대, 60년대에 체포된 이들은 공정한 수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채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초장기수 문제는 남북이 갈라지고 반

목과 질시를 거듭했던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기도 하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관용과 화해의 정신으로 냉전시대의 유제인 초장기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할 것이다.

1. 장기구금으로 대부분 질병 앓아

우용각씨를 비롯하여 초장기수 23명은 모두 0.75평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 현행법(행형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독거수용의 기간은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소장이 특히 독거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독거수용의 최대기간을 2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과는 어긋나게 70년 초반부터 독거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는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10명에 이르며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는 병약자·불구자가 다수이다.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위원회’(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 정기총회, 95년) 보고서 중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재소자는 교정당국에 의해 그 신념을 포기하도록 요구받는다. 재소자들이 이러한 사상전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제재를 당한다... 이러한 관행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조에 규정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른바 기존 질서를 반대하거나 반감을 나타내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알려진 수감자들에게 그와같은 견해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 사상전향제도는 애초 일제가 우리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유래를 찾을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반인도적 제도이다.

2. 장기구금·엄중독거 등 전근대적인 행형제도에 의한 비인도적 처우

23명의 초장기수들은 모두 '사상전향'(왼쪽 하단 상자글 참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재소자들을 합리적으로 구분처우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든 「수용자분류처우규칙」에서 제외, 누진처우나 가석방 등 행형상의 기본권을 박탈당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초장기수들은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도 없는 감옥살이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취업금지로 단계별 승급이 불가능해 처우완화나 가석방, 감형등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사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서신왕대와 면회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고 △수십년간 독거수용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92년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사상전향제도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3. 체포·수사과정 고문, 불공정재판

초장기수의 대부분은 범죄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으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다가 군사분계선에서 또는 고향에 도착하여 가족과 상봉하다가 체포되었으나, 북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체포된 이후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경찰과 군인에게 조사를 받았고 또한 영동포 미군 정보부대에 감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기고문, 물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 이들 모두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노사정합의 파기 법안 통과에 노동자 분노 "합의안보다 다섯배 정도 후퇴"

· 15일, 여야합의 노동관계법 통과
· 전교조, 공무원협의회 의결 안해

노동자의 대폭 희생을 무릅쓴 '노사정합의'가 합의안 수준에도 못미치게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입법화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른 제·개정을 추진했던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고용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근로자파견제 등 노사정 합의사항 중 일부가 수정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 단병호)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 강행처리는 제2의 노동법 날치기"라면서 "특히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삭제, 파견법 적용대상 확대, 공무원 직장협의회 처리유보 등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무시하고 변질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이들 법의 철폐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총력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성명을 내 "입법된 정리해고제의 1차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하고 사기꾼 한광욱 노사정위원장은 감옥에 보내자"며 민주노총이 합의를 지키라고 여론몰이한 언론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북지역본부는 "국회가 민주노총이 최종서명을 거부해 반쪽이 된 노사정 잠정합의안보다 다섯배는 후퇴한 법률을 상징하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규탄하고 이는 "기득권세력의 노동자

죽이기 작전"이며 이에 동참한 모든 세력이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번에 강행 통과된 법안 중 '기업인수·합병·양도'시까지 그 요건을 완화한 정리해고제는 노동자 대량해고·대량실업을 양산하는 법적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자파견법 또한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고 심각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노조 약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 악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영문도 모른 채 악덕업주들의 '살생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망치지 말라"

교육부, 대학신입생에 국가보안법 등 형사처벌 조항 열거 안내장 돌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람찬 대학생활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의 안내장을 돌려 건전한 사회의식을 배워야 할 대학 신입생들에게 여전히 비합리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가 모든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낸 이 글은 "잘 알지도 못한 채 일시적 충동에 따라..." '운동권 학생이 되는 과정', '한총련의 실체', '좌익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장황하게 훈계조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혁명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책자를 제작·배포" "이러한 목적의 단체에 가입 활동"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등은 국가보안법 조항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대목이다.

【행사와 동정】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교육포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96년에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대표로 구성·설치된 지방교육자치의 핵심단위다.

주제: 학교운영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 때: 2월 20일(금) 오후 2시 / 곳: 동화혁명기념관 1층 회의실 / 주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 발제: 강승규 삼례공고 학교운영위원장(우석대 교육학과 교수)

▶ (가칭) 미군 군사기지 민항사용료 인상 철회와 위폐사건 검찰공정 수사촉구 집회

때: 2월 28일(토) 오전 12시 / 곳: 미군 군사기지 앞~군산검찰청 / 주최: 군산미군기지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

▶ 번역 자원봉사자 모집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번역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언어는 제한이 없습니다.

*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전준형
국민은행 506-21-0876-764
농협 508-02-053278
전북은행 535-21-0027850

군산 미군기지서 또 위조지폐 발견

우리나라 형법도 '통화에 관한 죄' 수사권 명시

지난달 20일과 이달 6일 군산 미군기지 비행장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된 데 이어 또다시 위조지폐가 대량 발견됐다. 16일 오전 10시경 군산시 옥서면 미군기지 하사관 숙소 609동 앞 쓰레기 야적장에서 군산시 환경미화원 오창영씨(47)가 1만원권 위조지폐 5장과 20달러 짜리 위조지폐 7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군산경찰과 미군은 "위폐가 색깔이 옅고 인쇄상태가 조잡한 것으로 미뤄 컬러복사기로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성을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모임은 한국검찰이 여전히 수사권 행사에 미온적이라며 규탄성명과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위조지폐는 국가위기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전속관할권을 두어 국내외인을 막론하고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검찰의 보장된 단독수사권 행사와 군산미군기지사령관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통화에 관한 죄' 전속재판권 행사해야
한미행정협정(제22조 형사재판권 제2항 나)은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고 "통화에 관한 죄"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한국검찰이 이들 조문들을 근거로 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시민모임은 20일 군산시장을

만나 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안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사용료가 인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미군 군사기지 범죄·환경파괴 온상
시민모임은 만약 미군측이 부당하게 민항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미군기지가 있는 군산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도 이와 동등한 인상을 미군측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민모임은 먼저 '생활용수'에 대한 값을 6배 이상 인상하고, 다음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6배 인상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쓰레기 처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행장주변 소음문제'에 대해 시민모임과 시당국이 공동조사활동을 벌여 소음피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장은 시민모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모임은 오는 28일 군산미군기지 앞과 군산검찰청사 앞에서 연속적으로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일부 언론, 양심수석방 반대 발언

일부 언론이 양심수 석방을 반대하는 사실을 게재해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월 20일자 사설에서 한 신문은 "미전향 장기수, 한총련 관련자 특사실이 증거난방으로 나도는 데 대해서는 혼란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최소한 전향서라도 하나 받아두어야 특사의 명분이 선다"며 "전향공작을 재거론했다. 반면, 이들 언론사는 전두환·노태우·김현철·권노갑 등 파렴치범들의 사면 복권 및 석방에 대해서는 환영하거나 침묵했다."

양심수에게서 온 영적

-문정현 신부님께-

계절의 변화가 완연합니다. 일전에 군산에서 문신부님을 비롯해 오동동성당의 다른 젊은 신부님, 신자님들의 후의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에 와서도 신부님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사면논의가 이른바 '명망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 관심의 반의 반만 가져도 비전향 선생님들과 여성 양심인사들, 그리고 범민련과 한총련 관련 인사들의 석방운동이 질적으로 달라질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2월 10일자 한겨레신문에 민가협과 전국연협, 특히 전주교인권위원회가 선별석방에 반대하며 '장기수'와 '구속학생'을 석방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호소한 데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 다. 물론 저는 여러 가지로 경우가 달라 이번 사면은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지만 곧수감으로 투병 중이신 신인영 선생님, 수심년 씩 수감 중이신 우용국·윤용기 등의 선생님들, 북에서 오신 분도 아님데 3공 때부터(78) 구속 수감 중이신 조상록 선생님, 남성보다 몇 배 더 달맞고 초콜릿 먹고 있는 변의숙·함정희씨, 연로하신 범민련 선생님들, 그리고 순수한 한총련 애국학생들의 석방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양심인사는 전원, 무조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선순위는 있는 법이지요. 조국의 변화도 완연합니다. 올해는 모든 양심인사가 가족과 사회로 돌아가고 통일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꽃샘주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8. 2. 12. 조덕원 드림.
주소: [760-600]안동우체국 사서함 171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책과제”

김승환 (전북대법대 교수)

5년 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할 때, '문민정부'라는 용어는 언론과 논객들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노태우 정권을 6공 정권이라고 부르다가, 김영삼 정권 앞에는 아무런 숫자도 붙이지 못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른다.

어쨌든 정권은 바뀌었다. '문민정권'은 그 자체 아무 것도 해 낼 수 없는 부도정권이었던 사실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갔다. 우리의 역사에서 선거로 정권을 바꾼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다. 적어도 국민의 50% 이상에게는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인권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는 인권침해의 역사이다. 그 역사는 민족이 민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이었고, 외세가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성 없는 정권이 외세와 손잡고 민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역사이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의 본질은 보수정권이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권은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권 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공동정권이고, 공동정권 내에는 그 동안 정권의 단물을 간단없이 빨아 온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극우보수세력은 일정 부분 정권에 협조하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정권을 순치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인권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정권보다 인권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앞서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

권의 인권과제는 크게 역사의 청산, 법과 제도의 정비, 사람의 정비로 나눌 수 있다.

떨리는 일제시대, 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당시의 중요 사건들, 유신체제에서부터 가깝게는 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인권침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다. 그것을 밝혀 내고자 하는

인권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는 인권침해의 역사이다. 그 역사는 민족이 민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이었고, 외세가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사이었다.

노력들은 철저히 방해 받았고 탄압되었다. 국민대화합이라는 미명하에 광주민중항쟁의 주모자들이 모두 풀려났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광주민중항쟁에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한 짓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역사 청산은 우리 나라를 인권 후진국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키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인권 관련 법과 제도는 인간이 인간임을 확인시켜 주고, 인간의 인간성을 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그 지향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며 인류의 구성원이라는 것,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 노동자·빈민 등 사회적 약자도 인간이라는 것, 외국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서 인간성을 짓밟는 가장 전형적인 법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각종 수감시설에 갇혀 있다. 이 법에 의해서 간첩사건이 조작되었고, 양심수들이 생겨났다. 한미

행정협정은 우리가 진실로 인류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인가, 독립적인 주권국가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에의 여성할당제, 여성전담부의 설치, 호주제도를 비롯한 남녀차별 법조항의 철폐가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노동자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이다. 그

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그리고 공공부문에 서의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의 권고를 수용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OECD에 가입한 11번째 국가의 사회보장수준은 세계 100위권 미만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가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외국인의 단결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바대로 그들에게 차별이 가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우리는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교만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권력의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권력의 단물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다시 김대중 정권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국민대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 중시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다시 정권의 핵심부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들이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성과 함께 인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비된 법과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86 호

1998년 3월 2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편집인: 문만식

· 전화)0652-76-1253 ·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나.북두) · E-mail:human@kor.inp.or.kr · Homepage: http://kor.inp.or.kr/human

학원민주화 싸움 대학생 분신기도

총장, 원보전 학내비리폭로투쟁 '방화'로 호도

원광보건전문대(학장 김호병) 사회 복지학과 교수채용을 둘러싼 학내분규가 심화돼가고 있는 가운데, 학내 규정집을 복사하려 학생과에 들어갔다가 폭행당한 학생이 방화범으로 몰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이 사건이 방화가 아닌 우발적 화재이며, 학교측의 고발과 검찰의 방화혐의 구속수사가 사건의 본질과 학내비리를 감추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발적 화재가 '집단방화'로

지난 달 21일, 학교당국의 독단적인 교수채용 및 전반적인 학원의 비리적 결을 요구해오던 원보전 총동아리연합회장 이근상씨(22세)가 학생과에 학내규정집을 복사하려 갔다가 학생 처장에 의해 처장실로 끌려가 "너같은 놈은 맞아야 한다" 등의 폭언을 듣고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총학생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근상씨가 심한 폭언과 폭행에 따른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총학생회실로 들어와 플랑카드 제작용 시너를 들고 학생과로 달려갔고, 이에 놀라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뒤따라갔을 때는 이미 말릴 사이도 없이 이씨가 자신의 온몸에 시너를 뿌린

상태였다. 당황한 학생과 직원들이 난로의 석유밸브를 잠그고 난로의 불을 끄려던 중 시너에 불씨가 옮겨붙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씨는 전신에 2도의 중화상을 입었고 학생과 내부가 불에 탔다.

총학생회측은 "학장과 학교당국이 이번 화재가 돌발 총동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학생대표의 계획된 방화였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학교당국과 경찰이 2달여 동안 진행돼왔던 교수채용문제, 땅 문제 등 밀실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해온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집단방화'로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학우들을 모두 잡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측은 학사행정의 구조적 모순 철폐, 학교당국을 위한 교수채용은 전면철폐, 예정산 공개, 부당한 토지매입경위 공개 등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장 퇴진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아들 교수채용, 교수들엔 경고서한 이에 대해 원보전은 이번 사회학과 교수채용은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다고 밝혔다.

공항사용료 인성반의 및 미군기지 위조지폐범죄 수사총괄 결의대회
● 때 3월 5일(목) 오후 2시 ● 곳 ... 미군기지 정문

그러나, 18일 학생회측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학사운영이 재단과 학교측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등 비민주적인 처사로 일관해 왔으며 이번 사건은 재단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재단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김학장이 지난해 11월에 관광영어통역과 폐지과정에서 전체교수와 학생들에게 친인척 배제 원칙을 공식적으로 밝혀 놓고서도 자신의 아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학칙에는 교수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복수추천을 통해 선발돼야 하는데도 이번 사회복지학과 교수채용은 이같은 원칙이 무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왜곡 보도, 분규심화 부채질 또 학교측은 교수들에게 임용 등 비리에 대해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경고서한을 보내고 교수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회측은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앞으로 재단과 학교측의 비리와 비민주적인 요소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장퇴진운동도 전개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이번 화재사건에 일부 지방언론이 악질적인 왜곡기사를 내 물의를 사고 있다. 이 기사는 "이성없는 대학생 어이없는 방화" 제하에 "화재"를 '방화'로 총학생회 간부들이 시너를 가지고 간 것으로, 이씨가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전혀 엉뚱하게 보도해 관련 학생들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적단체구성혐의부분 무죄 선고 '혁신대오' 이적단체구성 무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의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구성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개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달 26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단, 이적단체 동조 목적 표현물을 소지한 점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유죄로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혁신대오'라는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를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 전북대 총학생회장 엄성복(28·당시 공업화학 4년)씨 등 전북대생 11명은 '혁신대오'라는 반국가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조직원을 총학생회 간부로 당선시켜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과 기무사에 적발돼 모두 구속기소됐으며(엄성복씨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이후 불구속기소), 당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조직사건이었다.

■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3항, 5항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95년 부산지법에서 위헌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도 했었다. 현재에서는 합헌 판정)

第7條 (讚揚·鼓舞等) ① 國家의 存

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 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 削除

③ 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⑤ 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文書·圖書 기타의 表現物을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賣 또는 取得한 者는 그 各項에 정한 刑에 處한다.

■ 전북대 혁신대오사건 관련자 형량

소현민, 최지훈, 주영식, 이승일 - 선고 유예 / 홍진외, 유영산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이대규, 김선미, 김동섭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유호 - 무죄. (반국가단체활동 동조 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은 각 무죄)

학생회장 매수사건 수사촉구

서남대 교수협, 관선이사파견·총장사퇴 요구

남원시 서남대 교수협회의는 이학교 총학생회장 신용목씨(25세)가 폭로한 이흥하총장(60세)의 매수 기도 사건과 관련, 지난 달 2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개혁과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교수협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이총장의 매수 기도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교육부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

은 서남대의 학사행정을 근본적으로 점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회의는 또 이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이총장은 지난해 5월 서남대·광주예술대 등 4개 대학과 3개 고등학교의 등록금을 빼돌려 개인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총장은 학생회장에게 500만원을 건네며 등록금 횡령혐의 구속사실을 입막음하려 했었다.

【행사와 동정】

▶ 전북여성정책토론회

때 : 3월 6일(금) 오후 2~5시
곳 : 동학혁명기념관
발제 : 전북여성정책추진형량및실적 (김명희 복지여성국장)
주제발표 : 전북여성정책평가 (이혜숙 정책위원)
토론 : 오후회(전 민주노동정책실장) 최원규(전북대사회복지학교수) 차중선(변호사) 최형재(시민운동연합집행위원장)
주최 : 전북여성운동연합

▶ 번역 자원봉사자 모집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번역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언어는 제한이 없습니다.

※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4-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전북 택시노동자 '민택노련' 출범 전택노련 어용성 딛고 완전월급제 확립 결의

전북의 택시노동자들의 어용노조 퇴진 투쟁 끝에 삼화, 한일, 수정, 대림, 월명, 백제, 제일, 대성, 동화, 문화, 정안 등 전북의 11개 택시노조(정읍 1개 노조, 전주·군산 각 5개 노조)가 참가하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산하, 민택노련 전북, 위원장 정광식)를 결성했다.

'98 임금협상 무효화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북본부 출범식' 이틀로 열린 지난 달 27일 집회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지난 시절 오욕의 택시역사를 청산하고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의 깃발아래 전북지역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완전월급제 쟁취와 노동해방의 새 세상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창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전북 택시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민택노련 출범의 기운은 그러나 이미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4월 군산의 7개 노조가 처음 택시노조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하기 시작했고, 다음 해 정안택시가 민주노총 가입의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이어 전북의 민주택시노조운동은 97년 '민주택시협의회'(위원장 정광식)를 출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이어 민택노련 전북은 지난 1월부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한국노총 산하, 전택노련) 전주지역 택시노조 지도부의 임금협상(본지 83호 참조)에 반발하여 민택노련 전북지역본부(준) 이름으로 '어용노조 퇴진'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왔다. 특히, 기존 노조의 1월 14일 협상에 대하여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반노동자적 작태"였으며 "택시노동자의 당연한 최대 현안인 완전월급제에 관해서 기존 노조는 뚜렷한 입장이 없어 표류해왔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선배열사들의 투쟁의 바탕 위에 택시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전국민주택시연맹 전북지역본부의 힘찬 출범을 엄숙히 선포한다. 전택노련이 설립된 지 10년의 세월동안 사업주와 결탁, 각종 이권개입을 통해서 택시노동자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리고 불친절의 대명사, 사회의 천덕꾸러기로의 택시를 만든 반노동자적 전택노련의 어용성과 모든 비민주성을 반대하며 노동자의 대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산하조직으로서 택시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천만 노동자의 주인되는 세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택시의 대시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택시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담보하는 전액관리제가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월급제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들의 의도적인 거부와 이에 편승한 몇몇 어용지도부에 의해 15만 택시노동자의 숙원인 완전월급제의 실현이 늦추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민주택시연맹 전북지역본부는 법으로 제정된 전액관리제를 어기는 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행기기에만 급급하여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전북지역 택시 사업주들의 반노동자적이고 반시민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전액관리제의 정착과 월급제의 실현을 위해 전체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장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단체협약 위반, 지입제, 도급제, 과도한 사납금으로 조합원의 피담을 갈취하는 모든 불법, 변태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북지역의 모든 조합원과 전국택시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중략...)

지난 시절 오욕의 택시역사를 청산하고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의 깃발아래 전북지역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완전월급제의 쟁취와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해방의 새 세상의 건설을 위해 총 단결, 총 투쟁, 진군 또 진군하자!

민주택시연맹민세!

노동해방민세!

1998년 2월 27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본부

시민모임, 경찰·검찰청장 고발키로

군산 경찰서장과 검찰청장이 '군산 미군기지 공항사용료 인상반대 시민모임'에 의해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시민모임은 군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위조지폐사건과 관련하여 군산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요지를 기대해왔으나 아직까지 그러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경찰서장과 검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시민모임은 검·경이 미군 1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당국의 수사요지가 미약하다고 보고 국과수의 지문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 최종적인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3월 7일 민항사용료 인상협상 최종 만료시한을 이를 앞두고 대규모 압력집회를 벌일 예정이

인권 주평

“언론의 양심수 증오병”

리 수 현 신부(용안 천주교회)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우리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은 이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바로 국민적 화합과 일치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독재체제 아래에서 오로지 분열과 불신만 조장되어 왔었다. 그것은 바로 독재자들의 통치 술수의 결과였다.

새정권자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뼈아프게 체험하였다. 국민의 가슴들은 아직도 독재자들이 자아낸 분열과 불신의 상처로 시퍼렇게 멍든 채 남아 있다.

양심수 가뭇둔 채론 국민화합 안돼

국민적 화합과 일치는 여러 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 기독교 자들과 소외된 자들 사이에, 지역과 계층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시대에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이다. 달리 말하면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들, 즉 이른바 양심수에 대한 시각과 태도 여하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화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 나라는 강제로 정권을 찬탈하고 수많은 시민을 살육했던 전두환, 노태우 같은 독재자들을 사면 복권해 준 나라이다. 사실 이 사람들만큼 이 나라의 운명과 역사에 슬픔과 어둠의 고통을 끼였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던가? 그들은 또한 엄청난 부정 축재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전혀 뉘우치는 빛도 없이 편히 자기 집

에서 호의호식하며 못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런데 자기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 슬한 세월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인간성마저 부정당하며 이 순간까지 온갖 인권 유린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양

자기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 슬한 세월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인간성마저 부정당하며 이 순간까지 온갖 인권 유린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양심수들의 석방에 대하여는 어찌 그렇게도 날카로운 악법을 들먹이며 계속 소외시키고 있는가?!

심수들의 석방에 대하여는 어찌 그렇게도 날카로운 칼날 같은 악법을 들먹이며 계속 소외시키고 있는가? 양심수들을 그대로 감옥에 묶어둔 채 진정한 민주화와 국민화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정말 믿는단 말인가? 요즈음 해바라기 속성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보수 언론의 대명사격인 D 일보와 C 일보는 정부의 양심수 석방 의지와 그 폭넓은 범위에 대하여 별떼처럼 독기서린 공격을 가하는 사실을 내놓았다. 두 일간지의 사실 내용은 서로 짜고서 쓴 것처럼 대동소이한데, 요점은 미전향 장기수와 한총련 학생들까지 석방한다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며, 정이나 그들을 석방할 양이면 특히 미전향 장기수들에게서 최소한 “전향서” 한장쯤은 받아 놓아야 할게 아니냐고 하면서 정부의 의도에 대하여 극렬히 힐난하였다. 참으로 속좁은 언론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들이 과연 그토록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들은 군사 독재자들에게 속 보일 것 다 보이면서 굴종적으로 그들을 찬양하던 얼빠진 신문들이 아니던가? 그들은 다시금 김

빠진 색깔논쟁이나 퍼면서 사회에 공안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인가? 이제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거두어야 할 때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구조 조정을 피하고 있다. 언론 재벌과 재벌 언론도 구조 조정과 함께 개혁의 칼을 대야 한다. 그들은 지금의 국가 위기 상황과 분열상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순간 가장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들은 그동안 소신이 없어 국민을 위한 뚜렷한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조작하거나 국민을

우롱하는데 급급했던 점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지금 양심수에 대한 증오병을 심하게 앓고 있다. 그들은 양심수가 석방되면 국가가 망하고 모든 것이 끝장인듯 필필 뛰며 각가지로 책망하고 있다. 하기가 그들이 일제 잔재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생래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물하고 피해망상적인 시각으로는 장사꾼 신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민의 신문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재벌과 재벌언론에 개혁칼을

이제 양심수가 전혀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새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부 언론들의 시비에 패념치 말고 한시 바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고 사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기쁨을 나누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양심수가 전혀 없는 참된 민주 사회에 살고 싶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87 호

1998년 3월 9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문만식

전화)0652-76-1253 •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 나. 녹두) • E-mail:human@kor.inp.or.kr • Homepage: http://kor.inp.or.kr/human

군산에 ‘살상용 대인지뢰’ 매설

최소 10년전 매설 - 피해사례 확인안돼 주민들 불감상태

군산시는 지난 2월 25일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군부대 철조망 전지역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정신문을 통해 밝혀, 비무장지대가 아닌 군산지역에도 대인지뢰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25일 군산시정 신문에 의하면, 공군 제 8989부대 군당국은 군부대 철조망 전지역에 살상용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지뢰매설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지뢰의 유실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접근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군부대, 지속적 경고방송

군당국은 또 군부대 철조망 전지역(철조망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살상용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산나물 채취, 산책로 이용 등산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고, “부대 철조망 지역에 접근해 지뢰를 밟아 폭발하면 최소한 발목이 절단되는 등 큰 사고가 우려된다”며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민들, 오히려 믿지 않아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공군 8989부대는 지난 1962년 미군의 미사일 기지로 창설되어 1980년 5월 17일 한국

군이 인수한 뒤 보병부대로 운용되다 다시 공군 포병부대로 전환배치된 부대다. 군산시에서 약 3Km 떨어진 야산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 바로 아래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에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김승환)에서는 이 소식을 접하고 현지조사와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 작업을 하였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뢰가 묻혀있다는 경고판 등이 있어 알고 있으나 실제 지뢰가 묻혀있다고 보다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위협용으로 한 것 같다”며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산에 수십차례 올라갔으나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군부대에 납품을 해 온 한 주민은 “철조망 주변으로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피해자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인지뢰, 반드시 제거돼야

날이 풀어져 산나물을 채취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부대에서는 매일 지뢰 위험에 관한 대민방송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에 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인권연대에서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부산의 중리산이나 포항의 봉화산 등 후방 지역에 민간인의 피해위

험만 높은 대인지뢰 매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와 군당국이 대민경고만 아니라 대인지뢰 제거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확한 진상조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폭로 재소자, 전주교도소장에 행정소송

“불법 행위 은폐 위해 긴급이송”

전주교도소가 최근 교도소내 재소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 징벌방에 수감됐던 재소자를 타 교도소로 이송해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조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수심명이 쇠사슬 등 계구에 은폐된 목인 채로 징벌방에 수감됐던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전북 일보 2월 12일자) 이후 당시 사건의 발단이었던 김씨를 지난달 23일 대전 교도소로 이송했다.

김씨의 부인인 강모씨가 당시 가혹행위에 대해 전임 교도소장 등 관련 직원 4명을 부당한 인신구속에 따른 폭행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김씨의 전주교도소 수용은 불가피한 데도 긴급 이송조치해 이같은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달 2일 전주교도소의 조치에 불복,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행정신청을 전주지법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김씨는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교도소측이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자신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만기 3개월을 남기고 대전교도소로 이송하는 위법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故 박복실(요안나) 열사 제6주기 추모식

● 때 : 3월 11일(수) 오후 7시 ● 곳 : 익산 노동자의 집 2층

“그 불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11월에 故 박복실 열사 특 거리는 6주기 추모식

얼마 전 두 명의 노동자의 부음을 들었다. 정리해고를 절대로 받아들이는 안된다며 분신한 대우조선 최대립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헌신하다 과로로 쓰러진 민주노총의 최명아씨. 우리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온 몸을 던져 일하다 위암으로 쓰러진 박복실 열사의 제6주기 추모식이 3월 11일에 있다. 6년 전의 한 노동자의 죽음과 오늘의 두 노동자의 죽음을 부른 시대상에는 어떤 변화나 차이도 찾아볼 수 없다.

故 박복실 열사의 약력

- 1971년 김제 용지중학교 졸업
- 1979년 카톨릭 노동청년회 활동
- 1981년 태창메리야스 노조위원장 당선
- 1982년 해고
- 1983년~85년 여러 곳에서 수 차례 해고당함
- 1987년 전주 노동자의 집에서 사목활동 시작
- 1990년 전북노련 지도위원 활동시작
- 1991년 위암수술 받고 투병생활
- 1992년 3월 11일 노동자 세상을 정취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살아온 박복실 동지 운명

박복실 열사는 카톨릭노동청년 활동을 하면서 억압된 노동자의 삶을 바꾸려 노력하였다. 81년에는 태창메리야스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전북지역 최초의 민주노조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 전두환 정권의 '노조 탄압이 포악해지면서 갖은 수모와 탄압을 받다 카톨릭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간부 7명과 함께 해고를 당하였다. 그 당시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어디를 가도 취직이 되지 않았다. 열사는 아세아스와니에 다니던 김덕순씨와 함께 블랙리스트 철폐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취직이

되지 않아 열사는 전주 원일택시 운수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그만두고 지역을 옮기게 되었다.

85년 군산 경성고무에 입사되었으나 다시 해고되었고 87년 전주 노동자의 집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여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시 전주지역 민주노조 건설을 헌신적으로 지원하였다. 열사는 90년 전북노련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나 91년 6월 위암수술을 받게 되었고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3월 노동자의 새 세상을 위해 온몸을 바쳐 살아온 생을 마감하였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로 이나마 기록해놓은 오늘의 노동현실이 경제난국이란 이름아래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서 6주기를 맞은 그의 추모식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국내 자본 뿐 아니라 세계 자본과의 팽팽한 싸움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지금의 노동현실에서, 전북노련 2년차 대회에서의 그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자들이여! 우리는 결코 사장들의 일회용 반창고는 되지 말자! 87년 우리는 보았다. 생산과 역사의 주인으로 일어난 노동자들의 대투쟁을.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입과 귀와 눈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이제 우리는 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출 수 없음을... 자본가의 탄압 속에 숨죽여 흐르던 노동자의 피가 노동해방의 새벽을 알리는 북소리에 일어서 꿈틀거림을 나는 본다. 그리고 그 불길에 나의 모든 힘을 바쳐 노동자의 새 세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1990.11. 전북대 교지 [황토현]에 실린 글 가운데)

[행사와 동정]

▶ 민주노총전북본부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

대 회 결 (2월 14일) 이후 2차
대 회 결 (2월 14일) 이후 2차
대 회 결 (2월 14일) 이후 2차

▶ [행동의 전화] 상담

전북 여성노동자회와 노동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1. 고용안정을 위하여 - 일·직·종·성·연·지역·공급·수요·합일·해고·노동자 권리찾기
2. 병든 노동자 회복을 위하여 - 임금과 보험, 각종 수당에서 보너스, 퇴직, 승진, 채용제일 등
3.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위하여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담
4. 평생노동권확보를 위하여 - 육아휴직과 직장내 육아휴직 상담

▶ 상담전화 0653)51-2453

▶ 백악 자원봉사자 모집

“백악문화인권연구소”는 인권향상과 보훈을 위한 활동에 동참할 백악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 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주요문의: 0652)76-1274
후원계좌: 예금주: 백악문화인권연구소
계좌번호: 912 01-0065 0000
주 회 계: 0652) 0062450
전북은행: 065 21-000000

[자료요약]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판결문 가운데 이적단체구성혐의 무죄 부분(관련 기사 본지 86호 참조)

가.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목적 단체 구성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의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리 그 특성상 조직이 비밀스럽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또한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이적목적 외에도 위 단체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중략)

(1) 먼저 조직의 간부 내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1995. 10. 초순경 공소사실과 같은 조직 결성식 및 조직 인선을 논의한 바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위 모임의 개최장소가 전북대 총학 사무실이었다는 점과(위 장소 또한 학생들에 공개적인 곳이어서 이적단체의 조직 인선을 결정하는 장소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총학생회를 장악하여 배후에서 조종하

기 위한 비밀조직이라는 “전북대 혁신대오”의 간부가 총학생회의 간부와 구성원 및 직책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이적단체 간부 인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총학생회 간부 인선을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의 간부 내정이라고 본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2) 다음으로 조직의 목적 및 규약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의한... 목적과 규약이 기재된 어떠한 문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앞서 인정한 종전 전북대 내에 있었다는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과 목적은 서로 비슷하며 그 규약은 완전히 같은 점에 비추어 1995. 10.경 과연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이라는 조직과 다른 별개의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어 위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목적 및 규약을 채택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3) 또 조직 결성식에 관하여 보건대, 1995. 10. 21. 오전에 전북대 상대 시청각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인 사실은 인정되나, ... 위와 같이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가운데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고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위 모임이 단순히 학생회 운동권 중의 한 부류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 및 일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알리는 자리가 아닌가 의문이 있다. (중략)

(4)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이 위 결성식이라는 행사 이후 계속적인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행사 이후 위 조직의 조직원들이 다시 모임을 가지면서 전북대 총학생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고도 계속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도 없어 위 행사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는 행사였다고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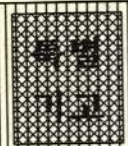
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직의 명칭이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것이나, 위 명칭으로 작성된 어떠한 문건도 나타난 바 없고, 위 시청각실의 행사 당시 그 행사가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조직의 결성식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플래카드와 같은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오직 당시 교부된 바 있는 인간증시 책자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혁신대오”라는 부분만이 있을 뿐인데, 위 “혁신대오”라는 말은 이 사건 결성식이 있기 1년전인 1994. 10. 초순경 문건에서도 위와 똑같은 내용과 함께 “우리는 불패의 혁신대오라 명하고 승리의 화신이라 명한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직 이름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학생회 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사람들 또는 그 모임이라는 취지의 보통명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가 결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도 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은 모두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의 자백 및 위 각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들만을 증거로 하여 위 이적단체 결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위 각 판결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첨부된 “인간증시” 제하의 문건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위 행사가 반국가단체활동 동조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결성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적단체인 “전북대 혁신대오”가 구성된 바도 인정되지 않는 바이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6.
재판장 판사 김용현
판사 차문호
판사 조윤희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군산의 대인지뢰를 없애자!!

조 문 익 (민주노총전북 교육선전국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운영위원)

군산에도 지뢰가!

군산에도 지뢰가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었다. '군산시정'(2월 25일자)에 의하면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군부대 철조망 전지역(철조망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살상용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지뢰매설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지뢰의 유실 가능성이 크며, 지뢰를 밟아 폭발하면 최

소한 발목이 절단되는 등 민간인의 큰 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활동가들이 지뢰가 매설된 8989부대 주변 마을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기지 주변에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이전에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부대 주변에 매설된 지뢰의 종류는 요즘은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발동으로 유명해진 '대인지뢰'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군부대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산나물 등을 채취하기 위해 군작전지대 안에 들어오지 말 것을 종용하는 방송을 주기적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전에 산불이 났을 때도 지뢰가 터지지 않았고, 실제로 지뢰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이 없어 지뢰가 있다는 말은 군부대 측에서 군부대 주변에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뢰피해가 수없이 나는 비무장지대에서도 늘상 다니던 길에서 어쩌다가 지뢰가 폭발하여 죽거나 다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제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지뢰가 없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며, 특히 군부대가 주민들에게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지뢰의 위협을 거론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군부대의 주의한기대로 8989부대 주변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산을 금과2리 속 칭 '지뢰마을'의 피해자들도 수십년 동

우리 모두가 나서서 군산 군부대 주변의 대인지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하자. 세계대인지뢰금지협약을 '전북지역지뢰금지협약'으로 만들어내자.

안 살아온 동네에서 일상생활을 계속하다가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대인지뢰!!

지뢰는 인류가 발명한 무기 가운데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이다. 얼마 전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계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의 조디 윌리엄스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군사전문가 스티븐 구스는 한국에서의 대인지뢰의 용도에 대해 "미국은 주한미군 보호나 북한 침략 저지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대인지뢰가 군사적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뢰금지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지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권력과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인지뢰는 탱크를 막을 수 없다. 오직 북한난민의 남하를 막을 뿐이다?

실제로 대인지뢰는 탱크를 앞세우고 전진하는 군대의 진군을 막을 수 없으며, 한국의 경우 전쟁의 양상이 탱크부대와 보병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면 대인지뢰는 순수한 의미의 군작전상에서는 효용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스티븐 구스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한반도에서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1백만 개의 멍렁구리 지뢰(Dumb Bumb)를 놓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스마트 지뢰를 1백만 개 이상 뿌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상은 이런 것이다. 조디

윌리엄스가 방문한 어떤 군부대의 장교는 "북한난민의 남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 듣는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냈지만 민간인의 사상은 상대방 군작전의 비용을 높이고, 심리적 위협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군사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세계 지뢰피해의 80%를 넘는 사람들이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며, 또 그 피해의 30% 이상이 어린아이들이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사람들을, 그것도 민간인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일을 자행한단 말인가?

세상 모든 무기를 없애는 투쟁을 군산의 대인지뢰를 없애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소망하는 세상은 인간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는 평화로운 세상이다. 그런 세상의 이름을 무어라 하든 형제보다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류의 꿈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은 무기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없는 세상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나서서 군산 군부대 주변의 대인지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하자. 세계대인지뢰금지협약을 '전북지역지뢰금지협약'으로 만들어내자.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88 호

1998년 3월 16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편집인 : 문만식

· 전화)0652-76-1253 ·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나.녹두) · E-mail:human@kor.inp.or.kr · Homepage:http://kor.inp.or.kr/onespark

양심수석방 '빛좋은 개살구'

김대중정권 인권 철학·실천의지 부재 다시 확인

김대중정권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양심수는 490여명 가운데 74명만이 석방되고, 수천명에 달하는 미복권자 중 500여명만 사면·복권됐다.

이날 석방에는 방북사건의 서경원·황석영·김영(하기)씨, 장기수 신인영씨, 남과간첩출신 장기수 6명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 대부분과 한총련 관련 학생들,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들, 사노맹 사건 관련자인 박기평(노해)·백태웅씨 등은 모두 석방에서 제외됐다. 또 문규현 신부 등 보안관찰법 사건 관련자들도 공소취소나 사면에서 제외됐고, 서준식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도 현재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석방된 74명의 양심수들도 대부분 만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람들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군산·전주 2개 교도소에서는 모두 7명의 양심수가 석방됐다. 그러나, 전주교도소에서 출감한 재일교포 장기수 손유형씨와 학생운동 관련자인 이종철·신성필·남승균씨 가운데 손씨를 제외한 3명이 모두 1년 미만의 형기를 남겨둔 상태다. 특히 남승균씨는 만기를 교각 10시간 앞두고 감옥문을 나왔다.

이날 장기수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석방된 손유형씨는 교도소 앞 약식집회에서 호느끼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

문을 열어 "실망 이전에 이게 뭔고 하면서 내만 나가서 되나 내 자신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비전향장기수이면서 '1급우량수'이기도 한 석달윤씨가 석방에서 제외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석씨는 발표가 있기 전 미리 석방을 확신하고 짐을 싸 영치시키는 등 희망을 버리지 않았었다.

군산교도소에서는 강희남 목사, 정양덕, 조봉호씨 등 3명이 석방됐다. 강희남 목사는 교도소 앞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신 양심수 여러분의 석방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양심수 가족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밖에서 투쟁한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히고, 의료검진을 받기 위해 전주 예수병원으로 향했다.

인권·사회운동단체들은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내 양심수 전원 석방을 다시 촉구했다.

전북민가협(회장 오경숙) 등 도내 인권단체들은 '김대중정권의 양심수 선별석방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합동 논평을 내 현정부가 "즉각 양심수 전원석방 의지를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현정부가 양심수에 관한 이렇다 할 원칙없이 광범위한 석방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생색내기식으로 숫자를 채운 석방조치가 아니었

나 의심한다"고 밝혔다(논평 2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이창복)도 논평을 통해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 및 사면과 비교해 도대체 어떤 선별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당국은 보수공안세력의 시대착오적인 반발을 의식하는 대신에 양심수와 그 가족들이 흘렸을 수많은 눈물들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라"고 권고했다.

"미군은 우리땅에서 떠나라"

전주교구 사제단, 군산 미군기지 안 기습 시위

지난 3월 9일 오후 2시경 전주교정의 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화신부) 소속 24명의 신부가 군산 미군기지 안에서 기습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신부들은 5대의 자동차로 미군기지 위병소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군산 미군기지 공항사용료 인상안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기지 안에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사제단은 "미군측과 국방부·건설교통부의 합의로 인상안이 결정되었지만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하고 '군산 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의 즉각 폐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그리고 미군이 한국 땅에서 물러갈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제단 신부들은 3시간에 걸쳐 군산 미군부대 안에서 기습 항의농성을 벌인 뒤 헌병대 부관을 통해 미군 (3면으로 이어짐 →)

도내 대량실업 전국 2위 4.2%

임금체불 관련 고소고발 폭증

전국적으로 정리해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대량 실업 사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전북의 실업률은 4.2%로 한달 사이에 1.5%가 상승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도내 경제활동인구 73만 1천명 가운데 3만 1천명이다. 이러한 도내 실업률은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한다. 또 비경제활동참가율은 93년 이후 최고치인 51.6%를 기록했다.

실업이 대량화되면서 노동관련 고소고발도 폭증하고 있다. 올들어 도내 고소고발 사건은 2월말 현재 460건으로 지난해 255건보다 무려 80.3%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체 및 영세사업장 임금체불과 관련된 건수가 전체의 88%로 400여건이나 된다. 또 부당노동행위는 29건, 부당해고가 16건으로 조사됐다.

군산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3월 5일 현재까지 사무소에 취업을 신청한 사람은 300여명이지만 이 중 16명만이 사무·전문직단순노무나 운수직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는 1·2월에만 1700여명으로 97년 전체 2400명의 70%를 넘어섰다.

도내 대학생의 순수취업률이 30% 이하(비인기학과는 10% 이하)로 대졸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기업도산까지 줄을 잇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대량 실업은 지금까지의 통계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나머지 중 경제활동인구로 잡고 있다. 이를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누는데, 무급가족노동종사자, 1주 1시간 이상 노동자, 군인, 구직활동자(일시 휴직자), 고시생 등을 모두 취업자로

간주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실업률이 실제 경기변동을 보다 늦게 반영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실직 후 1달 이상 취업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도 당국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잡고 있지만, 사실은 광범위한 '실업실망자'가 존재한다"며 "정부의 실업통계를 보면 정부가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도내 인권단체 합동논평]

현정부는 즉각 양심수 전원석방 의지를 천명하라.

1. 김대중정권은 13일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가 발표한 석방 양심수 명단에는 손유형, 강희남, 서경원, 황석영, 김하기, 황인오, 황인욱, 장기수 신인영, 70세 이상 남과 간첩 6명 등이 포함돼 있다.

2. 그러나, 최소한 247명의 전체 양심수 가운데 74명만이 선별 석방되고, 그것도 대부분 만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특히 한총련 관련 학생들과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박노해·백태웅 등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이 일체 제외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서준식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문규현신부에 대한 보안관할법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도 즉각 이루어져야 했다. 우리 인권운동단체들은 양심수는 그들이 양심수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간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점을 누차 주장해왔다. 양심수 석방에 선별석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정부에 이번 양심수 석방의 기준이 무엇이었던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현정부가 양심수에 관한 이렇다 할 원칙없이 광범위한 양심수 석방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생색내기식으로 숫자를 채운 석방조치가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김대중정권은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사면·석방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0년이라는' 정권교체와 새정권 출범을 자축하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도모하려 했다면, 비리사범인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은 석방하면서 양심수는 선별석방한 것은 자기기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대중정권은 즉시 양심수 전원석방 의지를 천명하고, 수일 안에 구체적인 추가 석방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의지가 없을 때, 양심수 가족들과 인권운동단체들은 김대중정권의 반개혁적 본질을 밝힘과 동시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98. 3. 13.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전북인권선교협의회
-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무순)

※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 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4-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하라”

익산시 교육, '인재양성'에 빼앗긴 평등교육권

평준화 해제 7년째를 맞고 있는 익산시 고등학교들의 경쟁이 심각한 병폐를 낳고 있다.

익산시 의회는 지난 1991년 5월 9일 대다수 학생과 교사 및 시민들의 절대적 반대 여론(당시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 해제 찬성 26%, 반대 72%)을 무시하고 정아무개 씨 등 23명의 연명으로 된 특정 기득권층의 청원을 받아들여 익산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하향평준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평준화 해제를 의결했다.

그러나, 7년이 흐른 현재 평준화 해제 수혜계층들이 당초 주장했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교육의 위기와 병폐만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되거나 매대식 학생유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학교 간의 상호비방, 교사들의 입시철 타학교 방문으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심각한 상태다. 전교조 익산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 방문을 마치고 대책회의까지 밤 1~2시가 되어서야 귀가하는 교사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까지 들어준 학교도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을 '일류' 고등학교로 통하는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준비반'이 운영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한 아이에게 사교육비로 한달에 7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며 입시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교조 익산지부를 중심으로 한 익산시 교사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해 빚어지고 있는 중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초등학교에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익산시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으로 학생은 상품으로, 교사는 흥정꾼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셋째, 애초 실력의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로 평준화를 해제한 지역의 학력이 오히려 평준화지역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결국 선별제도는 소수의 학력 우수자에게만 학교선택을 제한적으로 하는 성적제일주의 교육이라고 개탄하면서 교사들은 97년 12월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 실현 교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을 것을 천명했다.

현재 익산시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 실현 시민대책위원회]를 준비중이다. 한편 이런 와중에 전주에서는 오히려 평준화를 해제하지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익산시의 비평준화 해제를 위한 이번 싸움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사령관 앞으로 사제단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해방 후 최초로 전개된 미군기지 내 농성시위를 해제했다. 사제단 대표 김진화 신부는 "미군이 우리 땅에서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군기지로 항의농성을 오겠다"고 밝혔다.

군산 미군당국은 지난 97년 9월경부터 기지 안 활주로에 대한 민간항공기의 이착륙 사용료 300% 인상과 유지보수비 200%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다가 이달 초 국방부·건설교통부 등과 '군산 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개정 협상을 마무리짓고, 98년에는 인상을 동결하고 이후 점차 인상하여 2002년에는 300% 인상하기로 했었다.

작지만 큰 신문

「인권하루소식」을 아시나요?

1993년 9월 7일 창간,
주 5회 발행, 팩스로 전송,
98년 3월 13일 현재 1081호

경찰에 맞서 허리를 다친 노점상 아저씨, 교도소 내의 비인도적인 행위, 재개발지역의 철거폭력에 다친 아주머니 등 호소할 데 없는 이웃들의 아픈 사연은 주요 일간신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사건들에 언론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관련 소식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속보성'과 '지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매체로 팩스신문의 가능성을 깨달으면서 신문발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인권하루소식>은 인권만을 주요뉴스로 다루는 '일간신문'으로 자리잡아 해외를 포함해 5백여개의 단체를 독자로 확보하고 있다. 각 사회단체와 언론기관은 물론 청와대와 경찰, 안기부조차 이곳의 '독자'로 등록돼 있다.

이제 우리나라 인권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에 오히려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은 일반 언론이 외면하는 인권문제를 조명하면서 풀뿌리 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컴퓨터 통신망(하이텔·천리안 : rights)은 물론 인터넷에도 1주에 한 번씩 영문판으로 올려지고 있다. 현재 97년 상반기까지 소식을 묶은 합본호가 8호까지 나와 있고 98년 하반기 기사를 묶은 9호가 나올 예정이다.

(구독문의: 02-741-5363)

인권
주평

신정부 100대 과제 속의 사회복지

윤 찬 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대 정권들이 출범 초기에 장미빛 공약을 제시하였듯이 신정부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늘 그러하였듯이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문제는 그것의 달성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지켜보면서 감시해야 할 과제이고, 현재로서는 그 과제들을 통해 과제 선정의 진솔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략적으로 볼 때 신정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과제는 전체 과제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한다. IMF사태로 인한 긴축의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의 개선은 그 동안 사회복지계 및 노동계에서 주장해 온 내용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어 비교적 돋보이지만, 그 밖의 사항들은 기존에 제시된 정책의 재탕 또는 대선공약의 축소 등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여성·빈민 등 취약계층의 과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결정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이나 책임주체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없어 그나마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

실현 가능성 의문

이에 본 글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과제가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실직 노동자를 상상해 보자. 실업자 중 약 1~2% 정도가 30일에서 120일 사이의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 수준

의 불충분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제도의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전체 사업장의 2%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행 고용보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그나마 다행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고된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면 그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다. 현재 서울역 지하도에 양복차림의 부랑인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해 보라.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구멍!

실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인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을 통한 실업급여의 지급기한 동안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실업부조를 제공해야 한다. 실업부조를 받는 동안에도 취업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최후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빈민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마지막 급여체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가 너무 불충분하고 실업부조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생활보호는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 노동무능력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로 실직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안전망 장치는 거의 없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자인 아

동 및 청소년·장애인·노인·여성 등에 대한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에 관한 과제가 강조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경제의 침체나 공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방정부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획일적인 몇 가지 정책으로 사회복지의 목적, 더 나아가 현재의 난국타개를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정부의 100대 과제를 보면서 과거 미국의 루즈벨트 정권이 연상된다. 1929년의 대공황으로 미국 전체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루즈벨트는 공황 타개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고, 1935년 취임 직후 그 공약에 따라 시작된 것이 곧 뉴딜정책인 것이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켜 실업자를 구제하고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 강조돼야

과연 현정권이 내 건 소위 "100대 과제"가 현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과거 정권에 비해 획기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한 IMF로부터의 제약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현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모두가 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주도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89 호

1998년 3월 23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전화)0652-76-1253 ·팩스)74-7486 ·통신ID)onespark(천.나.북두) ·E-mail:human@kor.inp.or.kr ·Homepage:http://kor.inp.or.kr/onespark

도내 사립대 분규 갈수록 심화

각 대학 학생회·교수협, 비리총장 퇴진운동

원광보건전문대학(익산 소재·학장 김호병)의 학내분규(본지 86호 참조)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 총학생회는 물론 교수협의회(회장 송용은 교수)까지 사학재단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학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낮 교수협의회는 원보전 민주광장에서 '학내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비상총회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48명의 교수들은 결의문을 통해 △재단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재단 및 학장은 문제가 된 신입교수의 임용을 즉각 취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또 부당한 토지매입의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과 학장은 독단적인 학사행정운영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총학생회도 이날 학생집회를 열어 "지방사립대학의 비리와 보수화의 피해자는 결국 지방 서민들과 학생임이 자명하다"며 "학원비리 척결과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또 학원3주체(학생·교수·교직원)의 학사행정 참여와 교수채용 투명성 보장 등도 요구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들은 학교측이 지난 2월 교수 8명을 채용하면서 사회복지과에 혼자 지원한 학장 아들을 임용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32억원을 유용, 토

지매입에 사용하는 등 학내비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학장의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학장이 재임을 위한 세력 구축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현직 학장으로서 자기 자식을 교수로 채용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원보전 총학생회는 대학의 학사행정 비리와 비민주적인 요소 척결을 요구하며 겨울방학부터 98년도 신학기 개강 이후 지금까지 약 2개월이 넘게

투쟁을 계속해왔다.

한편 총장의 총학생회장 매수사건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서남대(남원 소재·총장 이용하)에서는 총학생회가 지난 3월18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총학생회는 총장 퇴진과 함께 등록금 4백억원 반환,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재단이사 전원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보안관찰자의 꿈

정순택 지음 / 한겨레신문사, 1997 / 값 7,500원

31년 5개월이나 지옥(감옥)살이를 하고 5년 11개월을 가석방으로 나온 보안관찰대상자. 1기와 2기, 3기의 보안관찰이 끝났지만 또 다시 4기 보안관찰대상자 정순택. 그는 자신의 현재를 지옥과의 단절이 아니라 지옥살이의 연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가 있을 리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저 '없다'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자부한다. "나에게는 한강과 같이 도도하게 흐르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다... 나는 지옥살이를 분하게는 여기지만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으며 아깝기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일그러진 민족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민족적 양심에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북에서 전문관료를 하다 대남정치공작원으로 남파, 피체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되어 무기징역+10년 길이의 징역을 살다 나온 그의 나이는 이미 일흔이 넘었다. 실패한 '사업'을 다시 만회할 여력이 없지만, 그에게서 '조국에 대한 과업'의 신념과 긍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보안관찰자의 꿈]은 이른바 '남파간첩' 장기수 출신 정순택의 자서전 격의 책이다. 독자는 이 책에서 선이 굵은 문체 속에 녹아있는 그의 꿈은 기질과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차별은 권보적 사회운동”을 실시할 때 사회단체를 끌어 운동전로 모색 간담회

초국적자본 저항담론 필요

김대중정권 출범과 IMF구제금융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출범한 98년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모색하는 자리가 지난 14일 전주에서 열렸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가 주관한 이번 강연에는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초청돼 IMF체제 등장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의 활동이 모색됐다.

이 처장은 김대중정권 등장은 구시대 인사 척결과 물갈이를 통해 부정부패의 핵심고리를 형성했던 인맥구조를 청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김대중정권에 대한 분석의 연장선에서 강연자는 “정권 초기 약 10개월까지가 신정부의 개혁작업에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 기간에 시민·사회단체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압박작업을 통해 개혁이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국적자본 공격에 경제구조 흔들

IMF체제에 대해 이 처장은 세계 각국을 넘나드는 초국적자본에 의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한국의 외환위기는 초국적자본이 한국경제를 장악하고 진보진영을 손보기 위해 조장한 면도 있다”며 “초국적자본은 국경 없는 투자 자유화와 금융·외환시장 개방으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강연에서 이대훈 협동사무처장은 “IMF가 요구하는 금융·외환·자본시장을 개방해 한국의 경제가 살아날 때, 되살아난 한국경제는 과연 우리 경제메카니즘에 소속된 경제일지 의문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IMF가 요구하는 경제 체질개선은 국내에 대량의 실업문제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몰락, 수출중심형 경제 구조에 대의존도를 심화시켜 대외 경제종속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한국의 재벌경제구조와 관치금융, 과도한 정부주도 경제질서 등이 경제체질을 빈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정치적 시민운동단체 구성 공감

이대훈 처장은 이러한 초국적자본의 국내경제구조 장악에 맞서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의 ‘저항의 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초국적자본을 이겨낼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사회운동세력이 초국적자본의 국내경제 장악에 저항한다는 외침만으로도 의의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전북지역에도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적 시민운동단체가 구성되어 지역운동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시민운동단체의 결성을 모색할 움직임을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두현 통신헌원·전북시민운동연합 정책실 차장>

인권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는 부족하지만 소외된 이웃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1회의 인권신문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입니다.신문을 받아보시는 독자들께서 저희의 팸방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보내드린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일립장 후원회원 가입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월 5천원 이상의 후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행사와 동정】

▶ 민주노총전북본부 새 임원 선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3월 12일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제2기 임원을 뽑았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본 부 장 : 염경석 본부장

사무처장 : 이송준 사무처장

▶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 환영예배 및 환영대회

3.13 특별사면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강희남목사 석방을 환영하고, 양심수 전원석방을 재차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때 : 3월 26일(목) 저녁 7시

곳 : 전주 성광고회 (86-0257)

주최 :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

▶ 번역 자원봉사자 모집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번역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언어는 제한이 없습니다.

21세기를 여는 전북 여성정책 토론회 구체적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을

지난 3월 6일 전북여성운동연합에서 90주년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21세기를 여는 전북여성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선자치 이후 전북 여성정책 평가>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이혜숙 전북여연 정책위원은 민선자치 이후 전북도에 여성정책담당기구가 만들어져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었고,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어 앞으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전북의 문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그 대안 또한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전북여성에 대한 상황 파악이 지역전반의 경제·복지·교육 및 인권·문화의 실무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아 명확히 파악되지 못했으며 ▲이 계획이 증산층 여성 위주로 만들어져 농민과 노인여성이 많은 전북도의 실정을 감안하지 못했고 ▲더구나 현실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여성관련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여성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행정담당자들에 대한 여성의식고양과 남녀평등의식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여성정책 각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대책을 강구하고 △여성정책담당관실과 여성회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여성단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성노동권 관련 토론자로 나온 오두희(전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실장)씨는 여성노동자들은 지금 정

리해고의 우선 대상으로 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당국은 우선 이런 부당해고를 감시하고, 비상대책기구 형식으로라도 실업자복지센터를 만들어 여성들의 취업알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여성회관의 운영을 지금까지의 취미교양 경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했다.

여성복지에 관련한 토론자로 나온 최원규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는 IMF를 맞아 모든 복지분야가 찬서리를 맞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수준만이라도 유지하기를 바라며 할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책실현에 있어 예산확보 못지 않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감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고 여성운동계는 민·관 관계에서 비판적 자세를 잃지 말기를 당부했다.

도 여성기구 담당자에서부터 각 시민단체,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여준 이번 전북여성정책 평가 토론회는 관에서마저 하지 못한 그 동안의 여성정책관련 데이터(백서)를 만들었다는 데 무엇보다 의미가 있고, 또한 토론회에서 얘기된 것들은 이후 구체적인 지

역 여성발전과제를 만들어가는 기초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실업자도 노동자”

도내, 실업자 운동 태동 조짐

실업율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실업자 운동이 태동할 조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호남사회연구회, 그리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 4개 단체는 20일 연석회의를 통해 실업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에 공감하고, 노동절을 기점으로 실업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자는 데 동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 달 27일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3월 27일에 예비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전체 기조는 실업자 양산 구조를 파헤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이창석씨는 “실업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토론회의 궁극적 목적은 실업대책 연대기구 확보라는 데 현재까지 참가단체들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27일의 예비토론회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찬영·남구현 교수, 양진규 기사연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제1회 군산 평화학교

- 4.16(목) “평화운동이란 무엇인가?” (문규현·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 4.17(금) “군산비군기지와 평화운동”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4.23(목) “지뢰·군축, 그리고 평화” (김창수·대인지뢰대책회의정책담당)
- 4.24(금) “일상 속에서 평화만들기” (최종수·군산시민모임 집행위원장)

· 곳 : 군산 오룡동성당
· 수강료 : 일반 2만원·학생 1만원
· 주 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개정을 보며

최 종 수 신부(나운동천주교회,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정의구현사제단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은 97년 8월부터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개정에 있어 미군측 공항사용료 300% 인상요구안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미군측의 인상은 1)한국인의 국방을 위해 무기한 무상으로 임대해 준 땅과 시설물에 대한 이윤행위이며 2) 지난 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미공군규정(AFI 10-1001)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천파운드당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과 이로 인한 300%의 급격한 인상(환율급등으로 실제 600% 인상)을 요구함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3)한국정부는 매해 \$4억(98년 3억 9천 9백만 달러)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주둔군지원경비란 명목으로 미군측에 지불해 왔다. 이 비용은 기지시설 유지·보수비로 지출되기에 민항 관련 활주로 사용료, 활주로 보수비와 주둔군지원경비는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하에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전국 1억여명의 땅을 미군에게 무상으로 무기한 임대해 주었다. 이 한국 땅에 대해 한국국민이 거꾸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치욕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의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과 청원운동, 그리고 20주 간 이어지는 금요시위, 4차례의 도민집회 등을 통해 전북도민과 정의구현사제단과 시민단체는 민족자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존의 1천파운드당 \$0.6에서 협정 만료일 2003년까지 \$1.7의 점진적 인상합의안은 미군측의 부당한 300%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북도민의 단합된 노력에 의한 성과이다.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은

1)한국 땅을 무기한 무상으로 쓰고 있는 미군이 한국민에게 사용료를 받는 부당함 2)한국정부가 지원하는 군산미군기지 주둔군지원경비와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함 3)미군이 주장하는 활주로 인상안의 법적인 근거와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함 4)한국 내 영토에서 미국 내의 규정(AIP 10-1101)을 강요하는 미군측의 폐단과 오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5)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을 즉각 폐기하고 한미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부당하고 불평등한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 이에 전북도민모임은 군산시에 미군 쓰레기처리비용(수거-매립-인건

이 한국 땅에 대해 한국 국민이 거꾸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치욕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300% 인상안 철회는 시민모임의 싸움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미군이 없는 날이 진정한 평화의 날이다...

인상안 철회 시민모임은 '군산미군기지 평화공원 만들기 시민모임'(가칭)으로 전환하여 미군기지가 평화공원이 되는 날까지 항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비-장비사용, 감가상각비-침출수관리비 중 수거매립 비용만을 받고 있는 부당함)과 농업용수비용(저수지에서 끌어간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정수한 농업용수비만을 내는 부당함) 인상을 군산시장 면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군산미군기지 공항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전북도민모임은 '군산미군기지 평화공원 만들기 시민모임'(가칭)으로 전환하여 미군기지가 평화공원이 되는 날까지 항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 폐기 2)군산공항 반환운동 3)군사군비 축소운동 4)미군을 상대로 군산시와 함께 미군기지 지역주민의 소송피해 소송운동 5)환경오염 감시 6)공역지 재산권 보호 7)각종 위법행위 고발 8)미군범죄 근절과 구속수사 촉구운동 9)불평등한 한미협정 개정운동 등을 통해 군산미군기지가 평화공원이 되는 날까지 항구적인 사업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을 지켜보면서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옳고 정확한 인식의 변화(남북의 분단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정책 때문, 제주 4.3 학살사건, 거창양민 학살사건, 5.18 광주시민 학살사건 등의 배후조종의 만행, 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주둔, 통일의 걸림돌은 미군이며 통일의 반대세력 역시 미제국주의, IMF 협상에서도 드러나듯이 미국은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아니다라는 사실)가 요구된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 회복과 통일을 위해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항구히 요구된다. 이 땅에서 미군이 물러가는 날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통일이며 민족의 자주권이 회복되는 날이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90 호

1998년 3월 30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숭정이성지사회관 · 전화)0652-76-1253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 나, 북두) · E-mail: human@kor.inp.or.kr · Homepage: http://kor.inp.or.kr/onespark

실업자운동은 일어날 것인가

정부·자치단체 사업주 편들기에 실업자운동 조직될 듯

3월 중 전국 실업률은 5%를 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수만도 123만명 이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재원은 없고 말만 무성할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무도 실업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는다. 현재 실업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다시금 민중들의 주머니를 털어 실업기금을 모아가겠다는 한심한 대책마저도 나오고 있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이미 노동부가 밝히고 있듯이 3월 중 실업은 이미 1백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나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실업자 가운데 28%에 불과하여 나머지 72%의 생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정부 대책은 말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실업대책은 곳곳에 한계가 많다. 정부는 실업자를 위해 한 가구당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은행 대부를 하기로 결정했다가 각 부처간 갈등과 재원마련이 힘들어져 무기한 연기될 지경이다. 애초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는 공무원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고성장·저실업의 시대에만 맞춰져 있는 현 제도가 바로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통과된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묵인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업주 편들기 정책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실업자 운동은 민중의 자발적 행동
중요한 것은 현재 실업자와 그 가족을 위한 근본적인 생계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실업대책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논의는 결국 실업자와 예비실업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어떻게 해서라도 잠재우려는 '대책'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요구를 단지 실업자들만의 요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업을 반대하는 모든 민중들의 운동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부산·경기·전북 순으로 실업을 최고

하루 10만명꼴로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전북지역의 실업문제(현재 도내 실업자수는 약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는 자치단체의 자체 계획도 없이

제1회 군산 평화학교

평화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평화를 막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새로운 평화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으로 평화학교를 엽니다.

- 4.16(목) "평화운동이란 무엇인가?" (문규현·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 4.17(금) "군산미군기지와 평화운동"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4.23(목) "지뢰·군축, 그리고 평화" (김창수·대인지뢰대책회의정책실)
- 4.24(금) "일상 속에서 평화만들기" (최종수·군산시민모임 집행위원장)

· 곳 : 군산 오룡동성당

· 수강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 주 최 : 전북 평화와인권 연대

택시노동자 생존권 투쟁 가열

전주택시, "사납금제 폐지·요금인상 반대" 투쟁

전북 택시노동자의 이중고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연맹 전북지역본부] (의장 정광식·45·전주 백제교통)은 27일 오전 11시 도 교통행정과(과장 김영삼)를 방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지도 부실로 택시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점을 추궁하고, 택시요금 인상 전에 택시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거리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나는 승객이 30% 정도 줄었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월급제 방침을 어긴 전주시 지역택시노조와 전주시 택시사업자들 간의 밀실합의로 다수의 택시노동자들에게 사납금 인상분의 추가부담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요금인상 조치는 고스란히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고, 택시회사 사장들만 뺏속을 채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장들만 배부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기본요금을 현행 1천원에서 1천 3백원으로 인상하고, 거り요금 또한 25미터당 1백원에서 215미터당 1백원으로, 시간요금은 61초당 1백원에서 52초당 1백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26일 민주택시는 4월 1일로 예정된 "택시기본요금 인상 전에 불법적인 사납금제도를 철저히 감독하여 없애라"는 요지의 성명을 냈다.

민주택시는 지난 3월 25일자로 전북도와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지난 95

년부터 시행된 택시사업 부가세 환급 조치에 대한 시행여부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진정한 바 있다. 또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 택시노동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가세분을 환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업주들이 이를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선거·지방자치 참여 공개토론

지방자치의 건전한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첫 공개 토론회가 김대중정권 출범 이후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지난 26일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주경실련 등 12개 단체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재정 확충 등 자치제도 개혁방안,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 참여 보장 방안,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 보장 등에 관한 각계의 입장이 제시됐다.

주제발제를 한 신기현 교수(전북대 정치외교학과)는 "김대중정권 출범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선거 등 지방자치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길을 자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탕감 서명운동

가난한 10억의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희년 2000년 연합' 주최로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희년 2000연합'은 세계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98년 버밍햄에서 그리고 99년 독일에서 G8 정상회담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문의:평화를 만드는여성회 02-264-8649)

【행사와 동정】

▶ 군산미군기지 시민모임의 평가와 이후 전망

3.7 인상안 타결 이후 현재의 시민모임을 해소(3.20)하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

때: 4. 15(수) 낮 12시

곳: 군산나운동성당(0654-467-8788)

주최:군산미군기지 민항활주로 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

▶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거리문화공연' 준비모임

어린이·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5월을 앞두고 '사)성폭력 예방치료 센터'에서 주관할 제1회 여성문화제를 위한 2차 준비모임

때:4. 2(목) 오후 3시

곳: 사)성폭력 예방치료 센터

교육실 (86-0257)

주최: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 번역 자원봉사자 모집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번역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언어는 제한이 없습니다.

※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전주교도소 장기수 기획 -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①

창살 안에 삶을 묻은 사람들

1. 장기수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민주·통일운동 관련
4. 일본 관련 사건
5.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6. 기획을 마치며

장기수는 장기복역 양심수를 통칭하는 말이다. 민가협을 비롯한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형법 98조 '간첩죄'를 적용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장기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옥중에는 이런 장기수가 모두 81명이 수감되어 있다. 전라북도의 전주교도소에도 이런 장기수들이 11명이나 되며, 1969년에 구속되어 현재 29년째 수감되어 있는 김창원(65세)씨를 비롯해 10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가 8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토록 오랜 세월을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가?

반공이데올로기 자극 위해 간첩조작

먼저 초장기수들이다. 이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좌익활동과 연관되었던 '빨치산 세대'와 종전 이후 70년대 초까지 북에서 남파된 '정치공작원'들이다. 민가협 발표(98.3.17)에 따르면 30세의 청년으로 감옥에 들어가 40년째 옥살이를 하는 우용각(70)씨를 비롯해 28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초장기수는 17명이나 된다.

다음으로 이른바 민주·통일운동 관련자들이다. 특히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김영삼정권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공이데올로기를 자극한 대표적인 사례다. 전주교도소에는 손병선(61세)씨 등 3명의 관련자가 수감되어 있다.

다음의 유형으로는 조작간첩이 있다. 70년대 이후 독재정권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반공이데올로기를 자극하기 위해 주요 시기 또는 정권의 위기 때마다 신문지상에 대대적인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곤 했다. 물론 이들은 거의 대부분 조작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조작간첩 사건은 다시 재일동포, 일본 관련자, 남파되었던 어부,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던 가족과 연관된 사건들로 나눌 수 있다. 70년대초에 북에서 남파되었던 '공작원'이 거의 걸려되지 않았던 데 비해 이들은 80년대 초반에 대거 만들어진다. 이들 모두는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을 당하였고, 증거라곤 본인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전주교도소에 18년째 수감되어 있는 석달윤(68세)씨는 자신은 수사기관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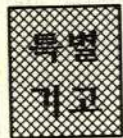
장한 남파간첩을 단 한 번 본 적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5공 정권의 고문피해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다.

전·노와 양김씨 차이 불합리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이른바 김대중정권의 지난 3.13 특별사면조처는 전·노와 양김씨의 차이를 기대하는 것이 전혀 불합리한 것임을 드러내었다. 또한 지난 2월 이 지역의 민주·사회 단체들의 전주교도소 앞 천막농성은 '양심수 전원석방'과 '차별 폐지'라는 모호한 구호를 통째로써지만 양심수지원운동의 현장성이 갖는 상대적 우월성을 증명한 사례였다. 장기수 관련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건자료와 공판기록, 가족 인터뷰, 당사자들의 편지 등이 모두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독자들 함께 우리 지역 장기수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기획물을 준비하게 되었다(다음 호에는 <초장기수들>을 실는다).

표1> 전주교도소 양심수 명단

이름	나이	수번	형량	구속일	적용법규	복역연수	수감사유
초장기수							
김창원	65	2063	무기	69. 6. 12	국보	29년	남파
5·6공 양심수							
진창식	51	2679	20년	79. 7. 20	국보	19년	행불가족
손성모	69	2011	무기	81. 2. 15	"	17년	남파
신광수	68	2053	"	85. 2. 16	"	13년	"
석달윤	68	2120	20년	80. 10. 6	"	18년	행불가족
문철태	69	2019	20년	85. 8. 13	"	13년	일본관련
최수열	34	2073	15년	87. 6. 22	"	11년	월북기도
허정길	42	2002	15년	87. 6. 00	치사	11년	6월항쟁
손병선	61	2141	무기	92. 9. 28	국보	6년	남한조선노동당
최호경	41	2150	무기	92. 9. 12	"	"	"
이경섭	33	2037	10년	92. 9. 15	"	"	"



IMF시대 인권과 '저항의 연대'

오 두 희(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은 지 100여일. 구조조정의 어두운 터널 입구를 통과하고 있는 한국사회 곳곳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실업증대, 노동비용 감소, 부의 편중, 생계비 급등, 여성과 아동의 피해, 소농의 몰락, 광범위한 환경 파괴, 보건의료체제의 악화, 교육기회의 감소, 민주적인 제도와 과정의 악화, 외채의 증가 등 IMF가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는 이처럼 생활영역의 다방면에 걸쳐 예기치 않는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재벌들과 정치권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고, IMF가 제시하는 내용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기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재벌 개혁에는 침묵하면서 국민들의 절제와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켜지만 실업자 200만명 등을 예고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IMF의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IMF로 민주주의 후퇴 우려

현재 세계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이 승리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국제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100여개의 채무국에게 무역자유화, 투자장벽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동일한 메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통해 세계를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로 재편하려 하는 제국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외채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IMF의 처방이 오히려 외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 현재 개도국이 상환한 외채 총액은 받은 차관 총액보다 훨씬 많으며, 1970년도와 비교하여 외채가 32배가 증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조정 계획은 기본적으로 외채부담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발전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는 경제신탁통치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고 IMF의 합의사항 조기 이행, 인수·합병시 정리하고 허용, 근로자 파견법 도입 등을 약속하고 이를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IMF시대에 한국정부의 정책결정은 주도권이 거의 박탈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는 세계적 고리대금업자

세계적 고리대금업자에 다름아닌 IMF의 총재 강드쉬는 '우리의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정책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IMF와 IMF의 주요 차관제공국(미국·일본·독일)은 IMF는 국제인권법의 준수 의무와 무관하며, 민주주의나 인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책임이 없고 그것은 오직 그 나라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IMF의 결정 및 집행과정은 민주주의 조직원리의 중요사항인 책임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 차관 협상은 소수 경제전문가와 고위 정치인들 간에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은 물론이고 어떠한 시민사회단체의 개입도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거 기간 중에 모든 대통령후보에게 IMF와의 협약을 준수한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대통령후보조차 세부적인 검토를 할 시간이 없이 급하게 처리했다.

이처럼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꺾은 돈의 이자를 안전하게 빨리 보상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관의 조건과 절차상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인권침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저항연대로 재협상 촉구해야

IMF도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의 다른 주체들에 대한 책임을 아울러 갖는다. 유엔의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왔을 때 유엔은 국제적 법인격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법률위원회의 해석처럼, 국제적 법인격인 IMF가 그 차관 정책을 통해 사회취약층의 피해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국제법상의 책임이 면제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모든 개발의 중심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IMF의 횡포에 대해 비판적 지식인들은 '외채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유엔에서 희년을 선포해 외채를 과감하게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계적 공동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IMF의 횡포에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저항의 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IMF의 파권적 경제주의에 맞서 시민의 참여권리 강화와 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불평등에 대한 저항의 연대를 통해 IMF 재협상을 촉구하도록 하자. 그래야만 김대중정부가 외국자본과 상대하여 협상력이 높아지며 그 결과 우리의 주권도 더 많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91 호

1998년 4월 6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순정여성지사회관 · 전화)0652-76-1253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나.녹두) · E-mail:human@kor.inp.or.kr · Homepage:http://kor.inp.or.kr/onespark

국민회의 <4.3 진상조사특위>

"레드헌트 상영 막아라"

전북대 당국 문의에 대학생 기념상영 불허입장 밝혀

도내 3개 대학에서 상영된 '레드헌트'가 경찰과 대학 당국, 그리고 교육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회의의 <4.3 진상조사특위>(위원장 김진배 의원) 등의 상영불허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주최측인 전북대 학생연대회의의 영화상영 관련자들이 전북대학교 학생과 모 직원의 말을 인용함에 따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대학당국은 북전주경찰서장의 상영불허 공문을 접수한 이후 교육부와 국민회의의 <4.3진상조사특위>에 따로 상영허가 여부를 문의했으며, 교육부와 여당 특위 모두 상영을 허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상영포기종용 경고장 보내

4.3 항쟁 50주년을 맞은 3일 낮 대학생들의 정치조직체인 원광대·우석대·전북대 등 3개 대학 '학생연대회의'가 항쟁을 기리기 위해 각각 '레드헌트'를 공개 상영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학 당국에 압력을 가하고 주최측에 경고문을 띄우는 등 상영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영화 상영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경찰이 보낸 경고문 전문 참조).

4월 1일부터 각 대학들이 [레드헌트]를 상영하겠다는 뜻을 플래카드

와 대자보 등을 통해 밝히자 경찰은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감정된 영상물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저촉된다며 '상영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대학 당국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또 이에 앞서 전북대학교의 경우 북전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형사들이 "레드헌트" 상영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학생연대회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학 당국도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이 우석대 행사준비측에 보낸 경고문>

경 고 문

- 귀 대학교에서 4.3 상영 예정인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감정된 영상물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저촉됩니다.
- 지난해에도 동 영화를 방영하여 사법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 냉철히 판단하여 상영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동 영화를 방영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1998. 4. 2

원 주 경 찰 서 장

안기부 개혁 논의 활발

'국회통제 강화' '수사권 폐지' 등 강력

북풍공작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 개혁에 대한 다양한 실천과 논의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형찬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근수)는 지난 달 25일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북풍조작 인권유린 안기부 규탄 및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원 처벌촉구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90년대 들어서 안기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피해사례 67건이 접수되어 고소·고발되었지만 단 한건도 진상규명되거나 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96년 12월 5일 안기부원 4명에게 고문을 당하던 김형찬 씨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김진균 교수(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대표)·홍근수 목사(김형찬대책위 상임대표)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북풍공작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공작의 산실인 안기부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반민주적 통치기체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할 것', '국가보안법 관련은 물론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것', '김형찬 분신사건 등 안기부 의혹사건의 진상을 철

저히 규명할 것' 등을 촉구했다. 4월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민변, 민교협,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안기부 수사권 폐지', '국회의 통제 강화' 등 안기부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근로자 가족 생활안정 우선배려" 판정

지난 96년 8월 구속되었던 익산시(주)AP 노조원 권태준 외 4명이 회사가 낸 소송에서 승소하여 구속기간 동안은 휴직으로 처리받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4월 3일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성숙된 노사관계의 전통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는 불법행위 해방 여부를 떠나 근로자 가족의 생활안정도 모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하여, 구속기간 동안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던 그동안의 관행에 새로운 해석을 내린 것으로 주목된다.

제1회 군산 평화학교

평화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평화를 막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새로운 평화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으로 평화학교를 엽니다.

- 4.16(목) "평화운동이란 무엇인가?" (문규현·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 4.17(금) "군산미군기지과 평화운동"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4.23(목) "지뢰·군축, 그리고 평화" (김창수·대인지뢰대책회의정책실)
- 4.24(금) "일상 속에서 평화만들기" (최종수·군산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시 간 : 매 강좌 저녁 7시~9시 ·곳 : 군산 오룡동성당
·수강료 : 2만원·학생 1만원 ·주 최 : 전북 평화와인권 연대

【 행사와 동정 】

▶ 전북 지역 실업 문제 해결 대책 기구 결성을 위한 간담회

광범위한 「실업자 대책 연대기구」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4월 27일 갖기로 한 "전북지역 실업 대책을 위한 토론회"의 예비 모임으로 4개 단체가 제안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때: 4. 13(월) 오후 3시
곳: 민주노총전북본부회의실 (0652-74-7486)

제안: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호남사회연구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군산 미군기지 투쟁의 이후 전망에 관한 토론회

때: 4. 15(수) 낮 12시
곳: 군산 나운동성당
* 참가여부(0654-471-5331) 고지 바랍니다.

▶ 번역 자원봉사자 모집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번역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언어는 제한이 없습니다.

*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전주교도소 장기수 기획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②-

감옥에서도 통일 위해 살겠다

1. 장기수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민주·통일운동 관련
4. 일본 관련 사건
5.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6. 기획을 마치며

동양 최대의 규모와 엄중시설을 자랑하는(?) 대전교도소에는 우용각, 최선목, 장병기씨를 비롯하여 고혈압, 폐결핵, 위장병등으로 밥알을 찢어 먹으면서도 통일의 새 날을 기원하며 살고 있는 고통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있다.

민가협에서는 20년 이상을 복역하고도 출소치 못하는 장기복역 양심수를 '초장기수'라 하며 현재 이들은 17명으로 모두 비전향수에 속하고 전부 '납과공작원'이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이미 60세를 훨씬 넘었고 평균 복역연수는 근 30년에 달한다. 이들은 장기간 엄중독거 수용과 73년부터 75년까지의 살인적인 전향공작에 의해 두 세가지 이상의 고질적인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

파행적 역사가 낳은 '간첩' 오명

이들 대부분은 해방을 전후로 하여 좌익활동을 하던 남쪽 출신자이고 남한 단독정부의 성립과 전쟁의 과정에서 월북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거의가 군사경계선을 넘자마자 체포되어 어떤 '국가전복'의 행위를 해보지도 못하고 체포되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형법상 간첩죄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장면 정권 때의 일괄 김형조치에서 제외되고,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대부분 대전·광주교도소 등에서 30~40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가족이 북에 있거나 설사 남쪽에

있다하더라도 과거 '연좌제'나 이웃으로부터의 시달림 등의 피해 때문에 관계가 단절된 무연고자들이다.

납과공작원은 '간첩죄'명으로 형을 살고 있다. 원래 '간첩'이라는 개념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호적국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민족공동체'이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이다. 지금은 정권 담당자조차 북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동반자로 선언했다. 남북한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성실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제 '간첩'이라는 개념은 파행적인 역사가 낳은 오물로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헌법정신 위배하는 전향공작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전향제도의 법적 근거는 없어졌지만, '확실했으므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는 모든 행형상의 누진처우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법무부령 제111조 수형자분류처우 규칙 제2조 1항 5호와 1957년 전향자와 비전향자의 분리 수용을 명령한 법무부의 통첩, 가석방분류심사 규칙 등이 폐지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전히 사상전향제도는 계속되고 있고, 비전향수는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갖는 전향공작적 차원에서 온갖 불이익 처우를 받고 있다. 즉, 비전향수는 그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형법상의 모든 권리, 예를 들면 석방이나 감형의 혜택은 물론 의료, 소내취업, 집회 등의 모든 처우에서 제외되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독한 순간의 치료마저 '전향'의 흥정거리가 되고 있다.

전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전향제도를 묵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김창원(전주교도소에 29년째 수감, 65세)씨를 면회한 허종현 신부(전주희망교회)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면회는 김창원씨의 28년간 수감생활 중에서 세 번째였다고 한다.

손성모씨는 이미 몇 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큰 누나와 조카가 소식을 알고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전주교도소 납과관련자 중엔 유일하게 가족과 연락이 되고 있다. 손성모씨는 한상렬 목사와 리수현 신부가 면회를 한다.

신광수씨는 초총련계로 조국에 너무나 오고싶어 관광객을 위장해 왔다가 체포되었다 한다. 교백교회 이강실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IMF난국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일로써 국가부강을 꿈꾸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전주교도소에 있는 납과관련 김창원, 손성모, 신광수 이 세분은 작년에 '북한동포돕기'에 아끼고 아끼고 영치금을 모아 각 50만원씩을 내기도 했다. 이들 비전향장기수들은 현재 일반인들은 면회가 되지 않고 있다. 그 근거 또한 말도 안되는 전향제도에 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17명의 초장기수는 흑백논리의 잣대로 구분되는 빨갱이가 아니라,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새 세상의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해 온 사람들이고 분단의 뼈저리고 냉혹한 아픔을 수십년 동안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문제는 곧 민족과 분단의 문제이다.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문제해결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은 허구일 수밖에 없고, 인권국가의 미명은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비리 앞에 학생이 죽어 가고 있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대학의 발전없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대학의 연구에는 잠시도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정신활동,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나는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중세시대 대학이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지금까지 대학발전의 정도는 국가발전의 척도이자, 국민의 의식수준을 가리키는 가능자이었다.

우리나라에도 비록 짧은 하지만, 나름대로 대학의 역사가 쌓여 가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그리고 연구진에 따라서는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대학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이 점에서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 중에서도 문제의 정도가 더 심한 것은 사립대학이다. 사립대학의 문제점은 재단의 운영과 학교운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단의 소유자가 철저한 소유주 의식을 가지고 학사와 인사 등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 전형, 사립대 문제의 핵심

최근 전라북도내 일부 사립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내분쟁도 이러한 바탕 위에서 있다. 우선 교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어느 전문대학을 보자. 이 대학은 학장이 임명하는 5명의 보직 처장과 교수 3인, 그리고 부학장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가 교수 채용을 결정한다. 교수의 인사가 교수회의 자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채용예정분야의 전공교수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의 신

규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단으로서의 학장 1인만 통제하면, 인사위원회 전체를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사위원회가 현직 학장의 아들들 교수로 채용하기로 의결했다는 데 있다. 학장과 아들이라고 해서 그 대학의 교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처음부터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는 인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맡겼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자유경쟁으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수공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 대학의 비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대학을 돈벌이의 수단쯤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교육부가 문제해결 앞장서야

다음으로 이사장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한 대학이 있다. 그 대학의 이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학생회장을 현금 5백만원에 매수하려다 실패하고 말았다. 진리와 정의를 말해야 하는 대학에서, 진리와 정의를 위한 투쟁의 가치를 가르쳐야 하는 대학에서 진리와 정의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 일을 당한 학생들의 충격은 오죽하였을까. 이사장의 드러난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사장은 자신의 측근인 재단 소유 타대학 교수가 대학원입시에 응시하자 여기에도 개입하여 불합격을 합적으로 처리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교육에 관한 사명감이 조금이라도 갖추어져 있다면,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작태는 벌어

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학의 학사행정, 인사행정을 감독하는 기관인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끝이다. 검찰과 법원의 칼날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무디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학의 비리는 결국 환경적인 비리이자, 구조적인 비리이다.

가장 큰 희생자는 학생

대학비리의 희생자들은 교수와 학생이다.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은 재단과 그 추종세력의 전횡 앞에서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궁극적인 희생자,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이다. 문제가 된 두 개의 대학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은 자신이 낸 등록금에 해당하는 혜택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교수채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우수한 교수진을 통하여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만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학교 재단에는 무드럽게, 학생에게는 냉혹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문제를 대하는 언론 역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 도내의 어떤 일간지는 학생들의 저항을 "이성없는 대학생"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비리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죽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개혁성향의 인사가 장관이 되었다는 교육부가 완곡탈태하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도덕한 사람들이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92 호

1998년 4월 13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0652-76-1253

·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 나, 녹두) · E-mail: human@kor.inp.or.kr · Homepage: http://kor.inp.or.kr/onespark

벌과금 받아내려 주민등록 말소

목적 벗어난 이용 '기본권 침해' 논란

최근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이 대출금이나 벌과금 등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만연해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하는 이유는 대출금과 카드 연체료 등을 갚지 않거나 벌과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사람을 손쉽게 찾아내기 위해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당연히 생활하는 데 불편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동사무소에 가서 현 거주지를 밝히게 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소재가 드러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말소제도 이용 새 주소 추적

관공서들도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돈을 받아내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일선 시·군·구에서는 자동차세나 주차 과태료 등 벌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시켜 달라며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 예비군 중대본부의 경우 훈련에 계속 불참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편 주민등록을 다루는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처리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 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의무자의 소재지 파악 곤란 등의 사유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비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제도도 문제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는 "주민등록말소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처도록 되어 있다"며 주민등록말소제도의 목적은 신고한 내용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카드 회사 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대출금이나 연체료 등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명백히 위법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말소당한 사람이 계약 체결·해외여행 등 사생활에서 손해를 입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으며 또 "이는 기본권 침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전주의 모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말소 의뢰가 접수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자체는 현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 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주민등록법 자체에 오히려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한 뒤 금융기관 등이 동사무소 등의 협조를 얻어 새 주소를 알아내 추적하는 점도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제1회 군산 평화학교 >

"무기 쌓인 곳에 평화 없다"

- 4. 16(목) "평화운동이란 무엇인가?" (문규현·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 4. 17(금) "군산미군기지와 평화운동"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4. 23(목) "지뢰·군축, 그리고 평화" (김창수·대인지뢰대책회의정책실)
- 4. 24(금) "일상 속에서 평화만들기" (최종수·군산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시 간 : 저녁 7시~9시 ·곳 : 군산 오룡동성당(0654-465-5715)

·수강료 : 2만원 ·학생 1만원 ·주 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익산 평준화 공청회 “성황”

고교생에서 초등학교까지 입시전쟁 내몰

지난 3월 27일 익산 국민생활관 강당에서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상임의장 이수현 신부)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5백여명의 청중이 물리는 관심 속에 열렸다.

시민대책위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교육적 병폐가 심한 현 비평준화 제도를 평준화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모아 시민 다수가 원하는 제도로의 개선을 꾀하려 합법적인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공청회 시작 시간 1시간 30분 전, 평준화제도 실현에 반대하는 이리 남성고등학교의 재단측에서 동원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자유경쟁의 시대에 평준화는 시대 역행적이며, 비평준화 상태인 현행 제도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교사들이 편해지려는 의도에서 평준화를 시행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공청회를 방해하였다.

500여 청중 평준화 폐지 요구

이후 시민대책위에서는 평준화가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대담들은 되리라 확신하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입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서명을 받아 익산시 의회, 시·도 교육청에 청원하기로 하여 지난 4월 4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시민대책위원회(창임대표 이수현 신부)의 공식적인 발대식을 하였으며 매주 수·토요일 서명작업을 5월 2일까지 꾸준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발제에서 진중호 YMCA 기획부장은 “익산지역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교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전쟁에 내몰리고 있어 가정에서

조차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쟁입시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교 “자유경쟁 역행” 주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길진 교사 대책위원장(원광여고)도 “지난 91년 시민 다수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평준화 해제를 의결하는 바람에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일교육과 밝은 교직사회·시민사회를 위해 현행 입시제도는 평준화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 시민대책위>는 익산지역의 20여개 중·고등학교 대표들로 <교사대책위>가 만들어진 뒤 이를 중심으로 익산 지역의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평준화를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성희 통신문·익산 노동자의집 사무국장)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 창립

병원노련 전북본부가 지난 4월 3일 예수병원 부설 기독교원에서 10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 창립을 결의하고 바로 창립식을 가졌다.

초대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에는 예수병원 위원장 김선숙씨가 선출되어 지역에서 산별노조의 기틀을 닦는 책임을 맡았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전국 1백여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참가한 한국 최초의 대규모 산별노조이다.

【 행사와 동정 】

▶ 전북 지역 실업 문제 해결 대책 기구 결성을 위한 간담회

광범위한 「실업자 대책 연대기구」 결성을 추진하는 한편, 4월 27일 갖기로 한 “전북지역 실업 대책을 위한 토론회”의 예비 모임으로 4개 단체가 제안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때: 4. 13(월) 오후 3시
곳: 민주노총전북본부회의실 (0652-74-7486)

제안: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호남사회연구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군산 미군기지 투쟁의 이후 전망에 관한 토론회

때: 4. 15(수) 낮 12시
곳: 군산 나운동성당
* 참가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654-471-5331)

▶ 번역 자원봉사자 모집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인권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번역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언어는 제한이 없습니다.

*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4-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전주교도소 장기수 기획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③

국가권력에 파괴당한 사람들

1. 장기수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민주·통일운동 관련
4. 일본 관련 사건
5.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6. 기획을 마치며

전주교도소에 있는 손병선(61세, 남조선노동당 사건, 무기징역)씨는 92년 9월 26일 이후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겪었다. “잠깐 할 얘기가 있다”는 안기부를 따라나선 그 길이 가족들과의 마지막 길이 되었다. 안기부에 끌려가 무려 22일 동안 강제 불법 구금되어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고문으로 끝내 안기부가 내미는 진술서를 쓰게 되었으며, 고문으로 만들어진 진술서는 그를 간첩으로 만들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했다. 그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딸 손민영은 이 사건과 관련해 7년형을 선고받았고, 평생의 동지이자 동반자였던 부인 성순희씨는 10개월 간의 수배생활 끝에 담도암으로 숨졌으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설상가상 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곧이어 며느리의 죽음을 뒤를 이었다. 이때에도 당국은 각계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불행을 0.75평의 감방 안에서 감내해야만 했다.

한 개인에게 이런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한 사건은 과연 무엇인가. 92년 대선 직전 안기부는 “해방후 최대의 조직간첩사건”이라며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했고, 국민들은 그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시 안기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의 지령으로 건설된 남조선노동당에서

중부지역당만 400여명으로 이외 경인지역당, 호남지역당, 영남지역당이 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의 지령으로 만든 “남조선노동당”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생적으로 만든 ‘민족해방 애국전선’으로 판결하였다. 결국 당시 대선정국을 들끓게 했던 “남조선노동당”이라는 말은 안기부가 만들어낸 허위였음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간첩죄를 인정받은 것은 문제의 ‘이산화(안기부 주장, 북한 서열 22위인 고위간부)’라는 인물을 만난 점을 이들이 모두 인정하였다는 것인데, 현재 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할머니 이산화’라는 인물을 여러 가지 근거있는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안기부의 사람이었으리라고 주장한다.

재판부조차 ‘노동당’ 존재 부정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울 때, 혹은 선거철에는 늘 ‘간첩단’을 위시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북풍사건들이 터진다. 우리 현대사의 정권들은 이러한 북풍없이 정권유지에 늘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97대선 북풍조작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심지어 북과 연결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안기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기강을 흐뜨리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표 1> 전주교도소 민주·통일관련 장기수 명단

이름	나이	수번	형량	구속일	적용법규	복역연수	수감사유
최수열	34	2073	15년	87.6.22	국보	11년	월북기도
허정길	42	2002	15년	87.6.00	치사	11년	6월항쟁
손병선	61	2141	무기	92.9.28	국보	6년	남한조선노동당
최호경	41	2150	무기	92.9.12	"	"	"
이경섭	33	2037	10년	92.9.15	"	"	"

그동안의 간첩(북풍)사건들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의 간첩행위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거의 없으며, 유죄판결은 전부 본인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자백은 1~3개월에 이르는 불법 감금상태에서 취조받으면서 처참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항변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기본권 파괴 사건들

조작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던 민주인사들이다. 민족과 민중을 위해 헌신한 그들은 되려 ‘빨갱이’ 혹은 ‘간첩’ 따위로 철창에 갇히게 된 것이다. 정권의 허약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인간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하고 가정마저 송두리채 파괴했던 국가권력의 심각한 인권유린.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북풍관련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었듯이, 이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과 석방을 통해 명예 회복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전주교도소에는 남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손병선, 이경섭, 최호경 세 명이 있다. 이들 가족과 친구들은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석방을 여러 방면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의 3.13사면에서 이들은 모두 제외되었다.



한총련에 대한 공안당국의 조작이라!

리 수 현(용안천주교회)

지금 한총련은 국민의 힘에 의하여 50 년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된 상황에서 김대중 새 정부의 검찰, 안기부, 경찰, 기무사 그리고 교육부 등 5 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안사법합동 수사본부의 사정없는 집중포화를 맞고서 허둥대고 있다. 그것은 지난 4월 10일 부터 12 일까지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개최하려 했던 제 6 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때문이다. 공안당국은 한총련을 애초부터 이적단체로 못박아 놓았었다. 그래서 공안당국은 이번 기회에 한총련을 완전히 와해 내지는 강제해산시킬 것을 작심하였던 터였다.

"탄압 위해 검찰이 문건 거짓 발표"
공안사법합동수사본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던 끈거는 한총련이 "현 정부를 '친미 사대정권'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를 타도하는 투쟁을 벌인다는 행동강령을 갖고 있기" (동아일보 4월 7일자 18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총련 임시의장 손준혁 영남대총학생회장은 "검찰 발표와는 달리 한총련은 2 월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현 정권을 타도하지는 구호를 내걸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배포한 적도 없다"며 "검찰이 있지 않은 일을 조작해 대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상동, 한겨레 4월 7일자 23면 참조)는 것이다.

아니게 아니라 한총련은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한총련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이 일반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한 점은 분명하다. 그것은 설득력이 약한 방향과 방식으로써 운동에 젊은 열기의 열정

만 쏟았을 뿐 성과를 높이는 데는 정성과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시민 운동단체들로부터도 외면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성 잃은 공안기관

한총련이 현재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처지라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이나 의지가 아무렇게나 왜곡 조작되고 적대시 되어서는 결코 안될

또 검찰과 경찰 역시 사회의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의 한 가닥을 이를 정도로 전혀 깨끗하지도 못한 주제에 자신들만이 애국자인 양, 민주화와 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인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 사회는 이성 잃은 공안기관의 과잉 충성과 과격한 탄압으로 썩대밭이 되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형태의 인간성 파괴와 인권 유린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일이다. 한총련이 하지도 않았던 주장이나 행동강령을 조작하여 그 조직을 무조건 이적단체로 몰아 세우며 와해 내지는 강제 해산시키려는 음모가 있다면 그러한 공안당국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용서없는 완전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무소불위의 공안당국이라는 안기부가 그동안 여론조작, 간첩조작, 북풍조작을 통하여 얼마나 어떻게 국민을 속이며 사회 불안을 조성해 왔던가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 역시 사회의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의 한 가닥을 이를 정도로 전혀 깨끗하지도 못한 주제에 자신들만이 애국자인 양, 민주화와 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인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 사회는 이성 잃은 공안기관의 과잉 충성과 과격한 탄압으로 썩대밭이 되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형태의 인간성 파괴와 인권 유린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지금 나는 이 순간에도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왜 잡히지 않고 있는가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근안을 위시한 고문 안기부 요원, 고문 검사 내지 수사관, 고문 경찰관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 검찰, 경찰, 기무사 등 공안기관에 고문 기술자, 간첩 조작기술자와 같은 인간지 말자인 더러운 찌꺼기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한, 이근안을 위시한 인간 존엄성과 인권 파괴법들이 백주에도 거드름을 피우며 수도 서울과 온 천지를 남보란듯이 활보할 것임에 틀림없다. 더 나아가서는 온갖 인권유린 행위는 끈질지게 계속될 것이다.

공안당국 학생 인권유린 안될 말

공안당국이 한총련에 대한 인식방향이냐 대응자세가 만에 하나라도 마치 해방후 약탈했던 "서북반공청년단"식의 것이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혹 시라도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학생들의 인권존은 아무렇게나 유린해도 말라. 한총련의 학생들도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잊지 말고, 그들을 포용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우선적인 책임임을 지적하고 싶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93 호

1998년 4월 20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34-1 숲정이성지사사회관 · 전화)0652-76-1253
·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 나, 녹두) · E-mail: human@kor.inp.or.kr · Homepage: http://kor.inp.or.kr/onespark

군산미군투쟁 발전방향 나와

이장희 교수, 군산 평화학교 강의에서

군산 미군기지 사용료 인상 철회투쟁의 문제점과 시사점이 제기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주최하는 '제1회 평화학교-군산'에서 이장희(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97년 9월 초 이래 군산 미군기지내 민항사용료인상 철회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투쟁이 비록 완전한 성공은 못했지만, 이 시민운동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자료 제시 중요

'군산미군기지과 평화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17일 강좌에서 이장희 교수는 철회운동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는 점 △ 향후 법적으로 미군기지 항공기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는 점 △ 한미 행정협정의 불명등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정하지는 요구는 있었지만, 주장 논거에는 법적인 정확한 접근이 부족했던 점 △ 미군이 자국 내 법규(미공군 규정: AF1 10-1001)를 자국 해외기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미군기지 반환운동으로 연결돼야

이 교수는 미군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항임을 전제하고 정확하고 객관적

인 자료 제시가 시민과 정부, 그리고 미군을 설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그 동안 군산 시민운동이 발표한 성명서와 문건이 객관성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두었다. 이 교수는 또 시민모임산하에 [평화운동자료실]을 설치해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서 군산 미군기지 사용료 철회운동의 시사점으로 △ 군산시와 시의회를 비롯하여 군산의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한 점 △ 이 운동이 불필요한 미군기지의 즉시반환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민족주권회복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는 점 △ 지역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미군시설과 기지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등 주민권리회복운동이라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이 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보다 조직화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동에 참가하는 지도급 인사를 위한 워크샵 프로그램을 통한 이론무장이 매우 필요함도 강조했다. 그리고 시민운동본부 산하에 [법적 대응 특별위원회] 및 [실태조사 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두어 보다 조직화하고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다 조직화 · 전문화돼야

이 교수의 이러한 지적들은 군산 미군기지 사용료 철회운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설득력있는 분석과 함께 이후 투쟁방향까지 조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인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온 미군기지 반환이나 주권회복 운동에 군산 시민모임 참여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제2회 인권학교 - 전주

- 4. 30(목) 세계인권선언 50주년과 우리의 인권 (서준식)
- 5. 7(목) 아동·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용교)
- 5. 14(목)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김승환)
- 5. 21(목)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전망 (곽노현)
- 5. 29(금)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와 사회복지운동 (윤찬영)

· 시 간 : 저녁 7시 · 곳 : 전주 숲정이성지사사회관(0652-76-1253)
· 주 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 주장 철회” 요구

장애인협회, 전경련 규탄집회 가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17일 오전 전경련회관 앞에서 “전경련이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전경련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장애인협회는 “산업현장이 후천적 장애인 양산의 주범임을 고려할 때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그러나 직업을 갖고 있던 장애인들이 해고 1순위 대상으로 직장에서 무차별 쫓겨나고 있다”며 “장애인 2%의 의무고용제를 실시한지 9년이 지났지만 재계의 의무고용률은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얼마전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 100대 과제를 통해 장애인의 의무고용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IMF를 빌미로 장애인 고용기피를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로 이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생존을 위한 싸움”

노동계, ‘고용안정’ ‘민중생존권’

사수 투쟁 벌이기로

민주노총이 ‘민중생존권 사수’ 투쟁으로 집중되는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 1일 제 10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중앙으로 집중하여 서울에서 열기로 하고 ‘고용안정과

민중생존권’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 부당노동행위 척결 △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법 철폐 △ 고용세 신설, 무기구입 중단 등을 통해 철저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마련 △ 공공부문 구조조정 즉각 중단 △ 월급제 실시 등 택시제도개혁 대통령 공약 즉각 이행 △ 노동자 및 양심수 전원 사면복권 △ IMF 재협상 등 아홉 가지 당면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또 4월 18일 서울, 부산, 울산, 전주 등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척결, 고용안정 쟁취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5월 1일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및 미조직 노동자, 실업자 등 약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서울에서 개최, 5-6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결의하기로 했다.

【 행사와 동정 】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실업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대안”

때: 4. 27(월) 오후 6시 30분

곳: 전주시청 회의실

(0652-74-7486)

주최: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호남사회연구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후원: KBS전주방송총국·MBC전주방송·CBS전북방송·J-TV·내일신문 전주사업부·전북도민일보사·(가칭)실업문제해결을위한공대위[추]

▶ “제1회 여성문화제” 계속

전북 여성운동 1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전북예술회관에서 계속되고 있다(4.23일까지).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한 거리문화공연(5.2 오후2시 객사 뒷뜰)

주관: 사)성폭력예방치로센터

주최: 전북여성운동연합

▶ 자원봉사자 모집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자원봉사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게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0652-76-1253).

*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4-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서울대 총학생회, 경찰서장 고발 인권단체, “법대로!” 거리캠페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운동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6일 ‘불법 불심검문’의 책임을 따져물러 관악경찰서장을 형사고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0일 서울대 주변에서 벌어졌던 불심검문과 관련, 당시 불법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진술을 모아, 이인원 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함께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이 대학로와 명동성당 입구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인권운동사랑방은 불심검문 피해접수 전화도 개설해 놓고 있다(02-741-2407). 또 오는 5월 12일 경에는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를 초청해 불심검문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인권단체와 대학생들의 불심검문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친절 불심검문’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논평을 내 “경찰이 ‘친절’을 내세우면서도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 불심검문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사안의 핵심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소속과 성명 그리고 목적과 이유에 대해 밝히고 검문을 할 수 있지만, 당해인은 답변을 강요당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 또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자료요약> 제1회 평화학교-군산 : 제 1강의 “평화란 무엇인가?”

(문규현·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대표)

1.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상태로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일상의 폭력문화는 더 심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다. 한마디로 세상은 점점 ‘평화로운 곳’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반평화적인(평화를 막는)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란 단순히 전쟁 같은 폭력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2. 평화를 막는 요인들

먼저 세계적 차원에서 동서냉전의 후신인 군사문화의 팽배와 남북갈등을 들 수 있다. 남북갈등은 자본주의 이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민족과 국가 간의 불평등한 경제적 지배종속 등 인간적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폭력의 관계이다. 사회전체 모습 뿐 아니라 사회관계, 인간관계, 인간의 삶의 꼴 자체를 규정하는 바탕들이 이미 비평화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비평화로 접철된 가정/학교/직장 등은 그 예들이다. 생태학적 차원에서도 자연을 ‘지배’하고 ‘개발’하려고만 해 점점 파괴의 길을 걷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폭력문화는 개인의 내면에까지 영향을 주어 개인에게 심리적 강박구조를 형성하고 이것은 다시 집단적인 강박관념을 조성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적대감정이나 과대망상 등이 파시즘이나 레드컴플렉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3. 평화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운동은 구조적인 반평화의 고리를 끊는 작업이다. 평화운동은 반평화적 싸이클의 고리를 끊고 그 자리에 반평화문화 대신 평화문화를 심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평화를 구축하려면 가장 먼저 분단이 해소되어야 한다. 비생산적인 무기구입 등 국방비에 정부 예산의 30%를 지출하고 있다. 국방비를 절감해 사회복지 등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

분단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등돌려 있는 남북 주민들의 화해/화합이 우선해야 한다. 현재 민족동질성회복운동으로 유효한 것 중 하나는 ‘굶주리는 북한동포돕기 운동’이 될 것이다.

평화운동은 먼저 통일을 막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운동, 군축운동, 미군기지 반환운동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평화운동은 사회 도처에 민연되어 있는 군사적 구조/군사문화를 없애는 운동의 과정에 자리잡아야 한다.

그 어떤 폭력보다도 압도적인 것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전 세계가 몸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 있는 사람만을 위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평등을 생산해내는 구조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정권이 확산되고 있고 세계의 지성인들이 다시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 거부, 국제적 고리대금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

(장기수캠페인 섭니다)

< 제1회 군산 평화학교 > 진행중입니다.

“무기 쌓인 곳에 평화 없다”

● 4.23(목) “지뢰·군축, 그리고 평화” (김창수·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 4.24(금) “일상 속에서 평화만들기” (최종수·군산시민모임집행위원장)

· 시 간 : 저녁 7시~9시

· 곳 : 군산 오룡동성당(0654-465-5715)



생산적 복지와 한풀이 복지

윤 찬 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제는 IMF를 말하는 것조차 지겹다. 그러나 어찌하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을. 그러나 그 이전부터 우리의 문제는 존재했고, IMF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며, 또한 IMF가 물러간다 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유사 이래 처음 겪는 실업대란 속에 빠져 있고 앞으로 정리해고에 의한 실업이 가증될 전망이다. 실업이란 노동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과 안전망이 극히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실업자와 그 가족들은 인간적 생존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것이다. 낭떠러지에 물려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절박하다.

생산적 복지 '신보수주의적 발상'

실업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을 갈구하고 있던 차에, 며칠 전 김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순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뭔가 획기적인 발언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는데, 대통령 스스로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인이라며 흥부전, 춘향전, 토끼전 등 고전소설을 거론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 소설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한을 품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복지는 이러한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 정상회의에 다녀온 후 급작스럽게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며 5원칙 6과제를 제시하더니, 나중에 미국 순방 중 장애인복지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루즈벨트상을 수상하였다. 우연

의 일치인가? 묘하게도 후임 대통령은 자칭 장애인이 당선되었다. 동시에 그 분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품고 있었던 대통령 자리에 대한 한을 풀게 되었다.

"생산적 복지"와 "한풀이 복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복지정책을 실시하되 국민 개인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유발시켜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적인 복지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 예산만 낭비될 뿐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음모가 서려 있는 뼈있는 얘기이다. 우리가 언제 소비적 복지라는 것을 우려할 정도로 복지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곳감 빼먹듯 놀고 먹는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랄 말로, 정말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국가복지가 발달하면 산티아고 같은 국가에 항상 손벌리고 앉아서 빈둥거리게 되는지 실험삼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결국, 생산적 복지라 함은 생존권 이념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복지국가적 이념에 반대하는 신보수주의적 발상을 현학적으로 포장한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등장한 한풀이 복지는 또 무엇인가? 김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자면, 국민들에게 나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 장기간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거나 부당하고 억울하게 실현할 수 없을 때 가슴 속에 맺히게 된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욕구를 억압하고 있는 제반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일회적인 푸닥거리로 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맺혔던 한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눈 녹듯 사라진다. 그 다음에 다시 상태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불만은 있을지언정 한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일단 목표나 욕구를 한 번 충족해 보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재벌개혁으로 복지책 마련을

사회복지는 한을 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은 인간의 인간다움에 대한 욕구 충족을 늘 위협한다. 사회복지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항상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보호망이며 안전망인 것이다.

물론, 우리사회가 워낙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많은 서민들이 한이 맺힐 정도로 인간다움을 실현해 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대통령은 이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회복지제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실업, 노령, 질병, 출산,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고 항상 불공평한 처우를 받아 온 일반 노동자들,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지금과 같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특히, 실업의 위험이 고조되고 만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재벌경제와 정격유착의 질곡으로부터 시달려 온 많은 국민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벌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사회로 환원시켜 사회복지 자금으로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이 좀 풀릴까?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94 호

1998년 4월 27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0652-76-1253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 나, 녹두) · E-mail: human@kor.inp.or.kr · Homepage: http://kor.inp.or.kr/onespark

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 인권

전주시의회 반대로 전주치매병원 건립 물건너가

전북 전주시가 효자동 옛 승마장터에 추진하던 치매요양 전문병원 건립계획이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모두 5차례나 심의에 올려진 전주 치매병원 건립문제는 사실상 오는 6.4선거에서 선출될 차기 단체장으로 넘겨지게 됐다. 또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5억 6000여만원의 국비도 반납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말로는 복지, 속으로는 시큰둥

전주시의회는 22일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98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김성태 의원 등 15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찬성17, 반대21로 부결됐다.

전주시는 완산구 효자동1가 구승마장 부지에 모두 76억 3천여만원을 들여 1천6백50평 규모(지하1층 지상4층)로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을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0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건립문제는 크게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부지 위치 선정 문제로 압축돼 왔었다.

반대 의원들은 치매병원 건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반대 이유로 IMF경제위기와 시의 재정상태 등을 들었다. 또 다수

의 의원들이 치매병원은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서 도시 외곽 등 번두리에 위치해야 좋다는 의견들을 내놴다. 이는 전주시가 '전주시 완산구 보건소, 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 '치매병원은 도시근교에 위치해야 한다'고 한 점, 그리고 "치매노인을 둔 가족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가족들이 언제든지 환자를 맡기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그래야 부양기피와 은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입장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대표의 말을 인용해 "혐오시설에 따른 주민피해와 불만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낸 전북일보를 보고 시청과 시의회로 물려나온 치매병원 부지 인접 일부 주민들도 '공기 좋고

땅값싼 데 놔두고 왜 하필 여기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시민회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전주치매병원 건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대책회의, 대표 이광철)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구승마장 부지에 전주 치매전문병원을 건립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해왔다.

"인권보다는 이권이 앞선 결과"

시의 한 관계자는 "민영 치매전문병원이 들어서면 영리추구 목적 때문에 서민 등은 치료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 대표 이광철씨는 "이번 치매병원 건립 무산은 사회복지와 노인 인권이 각종 이권에 밀려난 결과"라며 "우석재단이 실버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우석재단 소유 도내 일간지인 전북일보도 '치매병원반대'를 사적으로 정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염경형 사무국장도 "구 승마장부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시근교에 위치해 있어, 치매병원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공간이 크다"며 보이지 않는 이권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2회 인권학교 - 전주 '제1강의

"세계인권선언 50주년과 우리의 인권"

- 감사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곳 : 숲정이성지사회관(0652-76-1253) · 때 : 4.30(목) 저녁 7시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NO! MAI" 지구적 연대행동을!

다자간 투자협정 비밀리 진행, 초민족자본에 무제한

4월 14일에서 18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가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는 95년부터 작업에 들어간 다자간 투자협정 (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달 27~28일의 각료회의를 통해서 MAI를 조인할 예정으로 있다.

MAI는 초민족기업에게 투자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강력한 국제협약이다. MAI가 조인된다면 이제 초민족기업은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고 팔고 사업을 옮길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와 '자유'를 갖게 된다.

법적 강제력 가진 강력한 국제협약

IMF를 비롯한 여타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자유화 요구에 비해서 MAI는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협약으로, 각 나라의 사회 경제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I 협정은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그 정치적 타격을 보려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협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폭로하고, 이 협약에 대한 민중들의 명백한 반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반민중적 구조조정 협약 반대해야

현재 전 세계의 노동자와 민중들은 MAI에 반대하는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MF의 영향으로, 더욱 파괴적일 수 있는 MAI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제 한국에서도 IMF의 반민중적 구조조정 협약에 대한 반대투쟁과 더불어, MAI에 대해서도 전세계 민중들과 연대

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자료제공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넷뉴스). 오는 29일 낮 MAI 규탄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을 예정이다.

경찰, 총기난사 물의

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 무시 권총 7발 쏘며 추격 시장통서 검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돼 있는 범위를 넘어 총기를 휘둘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1일 전주 북부경찰서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나는 승용차를 향해 20여분 동안 실탄과 공포탄 7발을 발사해 10대 세 명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주차량에 공포탄 6발을 발사하고 뒷바퀴를 향해 실탄 1발을 조준,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당시 경찰은 112신고센터의 연락만 받고 확인절차도 하지 않은 채 도주차량에 실탄 등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총기사용과 관련, 위해를 수반했을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허용돼 있고 위해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 항거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정부, '위안부 일본 배상' 사실상 포기

21일 외교통상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3천 150만원과 민간모금액 65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아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행사와 동정 】

▷ 4. 30 노동절 전야제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한마당"

때 : 4. 30(목) 오후 6시
곳 :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앞

▷ 108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고용안정 쟁취·민중생존권 사수"

때 : 5. 1 오후 2시
곳 : 서울 종로공원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한 거리문화공연(5.2 오후2시 객사 뒷뜰)

▷ 자원봉사자 모집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자원봉사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간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4-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자료요약] 제1회 평화학교 - 군산 : "무기쌍인 곳에 평화없다"

지난호 1, 2강좌에 이어 이번호에는 나머지 3, 4강좌를 요약 소개합니다. 3강좌 "지뢰, 군축, 그리고 평화"는 김창수씨가 말을 예정이었으나, 강사사정으로 문정현(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동대표)신부가 맡아주셨습니다.

"지뢰, 군축, 그리고 평화" (문정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동대표)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인지뢰금지운동은 모범적인 평화군축운동이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는 다음 논리를 통해서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이다. 둘째, 대인지뢰금지운동은 남한민이 일방적으로 당장 대인지뢰를 제거하지는 운동이 아니다. 셋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대인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넷째, 대인지뢰는 군사적으로도 효용성이 떨어진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지뢰는 비무장지대에 매설되어 있고 정부의 관리와 통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전 중인 나라들과는 달리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무장지대가 아닌 부산 중리산, 경남 양산 원효산, 포항 봉화산, 충남 홍성 제기산 등과 같은 후방지역에서도 대인지뢰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뢰로 인해서 민간인도 피해를 보고 있다. 군산 옥구 군부대 주변에도 오래 전부터 대인지뢰가 묻혀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에 계엄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지뢰를 사용했다는 보도도 있었다(중앙일보 95년 12월 27일자).

대인지뢰금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이상으로 자리잡았고, 대인지뢰 사용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이라고 유엔을 비롯한 123개 국가가 동의했다. 더구나 군사적으로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인지뢰이다. 그런데 왜 미국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는가? 첫째, 21세기 신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둘째, 미국 국방부의 군사전략이 민간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수정되는 것을 미국 국방부가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은 북한군이 침공할 경우 진입이 예상되는 길목에 항공기로 지뢰를 대량 살포하는 작전도 수립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23개의 정부가 서명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한 정부도 서명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가 협약에 서명할 때까지 우선 △ 4사회당의 의제로 대인지뢰문제를 제기하고 △ 가능한 빨리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할 의지를 밝히고 △ 대인지뢰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평화만들기" (최종수, 군산시민모임 집행위원장)

평화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궁극적인 가치의 총합이다. 평화는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모순과 구조들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해방과정과 그 완성이다. L. Boff 신부는 평화를 불의를 거슬러 싸우는 연대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한, 기독교자들이 각대국들의 불의와 이로 인한 구조적인 모순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해방의 기쁨이 곧 평화다. 그러기에 평화를 원하는 그만큼 투쟁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통일운동은 분단극복운동이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운동의 시작은 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이고, 진정한 통일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의 반미운동은 과거 운동에 비해 너무 미약하고, 관념화되고 구호화된 운동마저도 부족하다.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적인 통일, 남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지역 군산에서 평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군기지이다. 미군기지를 우리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군산미군기지 민항 사용자 인상 철회를 위해 시민모임이 8개월 동안 투쟁했다. 투쟁하지 않았다면, '점진적 인상'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시민모임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으로 전화회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전면개정운동 △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 폐기운동 △ 군산공항 반환운동 △ 미군기지 임대기간 설정운동 △ 미군기지 임대료 징수운동 △ 미군범죄 근절과 구속수사 촉구운동 △ 환경오염 감시운동 △ 공여지 재산권 보호운동 △ 각종 위법행위와 퇴폐문화 고발운동 △ 미군을 상대로 군산시와 함께 미군기지 지역주민의 소유피해 소송운동 △ 군사군비 축소운동 △ 미군기지의 평화적 활용방안 연구 등 활동을 벌이고, 우리땅 군산미군기지를 되찾는 날까지 항구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미군이 있는 한 우리의 진정한 통일이나 평화는 오지 않는다. 군산미군기지가 반환되고 미군이 물러가는 날까지 건전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줄기차게 우리땅 찾기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장기수 캠페인은 지면사정으로 다음호부터 계속됩니다]



생산성이 아니라 삶의 가치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세상이 산다

조 문 익 (민주노동총연북본부 교육선전국장)

양지원 양이 말한다 -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숨진 어머니의 팔을 베고 열흘 가람 쓰러져 있다가 아버지에 의해 발견된 양지원 양(3)이 15일 병원에서 패혈증 등에 대한 집중치료를 받고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 ... 지원양은 14일 오전 11시반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원천2리 고모씨(50) 집 2층 셋방에서 숨진 어머니 이위숙씨(30)의 팔을 베고 탈진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장기간 출타 후 돌아온 아버지 양모씨(33·무직)에 의해 발견됐다."(동아일보 4/16)

을 부추기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지구의 자원과 자원을 남김없이 장악하려는 국제금융자본이다.

전세계적으로 40조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초국적자본 - 미국의 1년 가용예산이 7조달러 수준 - 은 '시장의 자유'라는 지상명령을 부과하며, 지구상의 모든 사물, 인류의 모든 영역에 '시장의 논리'와 '경쟁의 원리'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자율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극단적인 부(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대다수 세계 민중들

으로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류 삶에 절대적인 요소인 자연자원과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여 우리의 미래를 화색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한줌밖에 안되는' 초국적금융자본을 타도(打倒)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

IMF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그 자체에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초국적금융자본의 지배전략인 다양한 형태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관련한 쟁무간/다자간 협정들을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들은 얼마전 주한 미상공회의소 - 18일,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98년 한-미 무역-투자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 연월차유가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 경우와

IMF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여차피 인간의 생존과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다. 그 숙제는 누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가족 동반자살 소식이 정읍으로부터 들려왔고, 가정폭력이 빈발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모든 것이 IMF 지원금융 이후 생긴 변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속화시킨 것만은 사실이다. 위의 양지원 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냉정함(이웃간 무관심)과 최근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붕괴(실업과 가족파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은 절대적인 기아와 빈곤 상태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된다.

사람들은 IMF의 무서움을 이야기한다. 실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 버린 피비린내나는 생산성 경쟁의 시대에 태어난 자신의 운명은 별 수 없이 타국 또는 자국 내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 요행히 자국 내지 자신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었지만) 초국적자본의 하나의 전략일 뿐이다. 옛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하던 방식

같이,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개입을 합법화할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개별 국가의 노동·환경적 규제도 불법화할 것이다.

현재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MAI)이 다가오고 있다. IMF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여차피 인간의 생존과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다. 그 숙제는 누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다. 그렇다. 만약 우리조차 '생산성 경쟁' '국가경쟁력'에 매달려 허송세월한다면 냉혹한 역사의 여신은 '인류의 파멸'이라는 '빨간펜'을 우리에게 들이댈 것이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95 호

1998년 5월 4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0652-76-1253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나.북두) · E-mail:human@kor.inp.or.kr · Homepage:http://kor.inp.or.kr/onespark

본색 드러내는 김대중 정부

노동자·철거민 등 농성 집회장에 물대포 아니면 최루탄

김대중정부가 노동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평화집회에 최루탄을 쏘는 등 자신의 비판세력에게 노골적으로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노동현장에 공권력 투입

지난달 24일 새벽 6시경 경찰은 국민대 노동조합(위원장 조춘화)의 천막농성장에 전투경찰 1개중대를 투입해 농성자들을 전원 강제연행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노조위원장의 부당하고 철회'를 위한 농성을 진행해 왔다.

강동국 국민대 총학생회 학자극장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총 10대의 전경버스가 대기 중이던 것이 사진촬영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이 미리 병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동절 전후 공안기류 조성

또한, 108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영장 제시없이 불법적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연행이 잇따랐다. 지난달 13일 한양대 하영준(사학과 4학년) 씨가 구속된 것을 비롯해 4월달에만 20여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전국 각 지역에서 강제연행 당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현행법이거나 영장을 제시하거나 긴급체포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5월 1일 제108주년 세계노동절 집회

에서는 집회가 끝날 무렵 집회장소인 종묘공원 안으로 난데없이 경찰의 최루탄이 날아들었다. 당초 참석자들은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이기로 되어 있었다. 이날 저항은 최루탄을 난사하는 경찰에 분노한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쟁들을 집어들면서 시작했다. 한편 이날 집회가 끝난 직후, 텔레비전 뉴스에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경찰에 쟁들을 집어던지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노동부장관과 김대중대통령 등이 '노화연대' 투쟁을 엄단하겠다고 내용이 보도됐다.

이날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정부가 실업자 등 분노한 노동자들의 행동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시 학생들을 제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공간 국가보안법 탄압

한국통신 노동조합과 노동정보화사업단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은 김대중 정부의 통신인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달 13일 하영준씨와 오동진 씨

(한국통신 노동자)가 통신공간인 하이텔 게시판에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의 내용 및 각 대학 교수들의 사회과학 논문들을 올린 것을 빌미잡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은 김대중 정부에게 △ 정보통신검열을 철폐할 것 △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된 통신인 즉각 석방 등을 요구했다.

도원동 살인적 철거폭력

도원동 철거민들은 김대중 정부에 대해 가졌던 실낱 같은 희망을 치절리는 분노로 맞바꾸었다. 지난달 23일 오전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선 경찰 수백여명과 용역직원, 재개발조합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리앗(철탑망루)에 대한 강제철거가 자행됐다.

이에 앞서 3월 30일 동료 철거민 10여명과 함께 골리앗 진입을 시도하던 이범휘(61)씨와 백석호(28)씨가 용역강패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와 회염방사기 등에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뒤 병원에 후송됐다. 폭행을 당한 이범휘씨는 "나를 폭행한 건 철거강패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엉뚱하게 폭력용의자로 '대학생'들을 들먹이기도 했다.

'제2회 인권학교 - 전주' 제2강의 "아동·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

- 강사 : 이 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평론가)
- 곳 : 숲정이성지 사회관(0652-76-1253) · 때 : 5.7(목) 저녁 7시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정부, 실업 해결 의지 없다!”

전북 사회단체, 실업문제 토론회

전북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실업대책을 비판하면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저녁 (사)호남사회연구회 등 4개 단체가 '전북지역 사회적 안전망의 확장을 위하여'란 주제로 실업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종합적 민간 실업대책기구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단체들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실업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5월 둘째 주에는 단체활동가 워크샵 및 대책위 구성을 위한 본격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 상태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한 남춘호(전북대 사회학과, 호남사회연구회 연구실장) 교수는 “도의 실업대책은 이 지역에 특히 많은 잠재적 실업자와 실망 실업자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도측에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전북의 실업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남 교수는 또 “경제위기와 실업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며 “미국을 본따 노동시장유연성 제고 정책을 한국의 직무중심적 노동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나온 조문익 교육선전국장은 전북 지역 해고의 사례들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도내 H실업의 경우 종업원 7명 가운데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해고한 뒤에도 신규채용은 계속하는 ‘퇴직금 떼먹기’식 해고를 단행했고, 익산 H공업은 사원 26명 전원에게서 백지사표를 수리한 뒤 이중 선별하여 13명을 해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군산 D공업은 사원 60명 중 20명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해 17명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발

표됐다. 이와 함께 소위 호출기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삐삐해고’, ‘PC통신 해고’ 등도 폭로했다.

조 국장은 “지방정부와 지방노동부 등 관련기관의 해고억제노력은 전무한 상태”인데다 “노동자들도 ‘실업은 어쩔 수 없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민간사회운동들도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운영위원장) 교수도 정부대책을 비판했다. 빈약한 안전망, 관련 부처의 난립, 단기적 정책목표의 부재 및 왜곡, 장기적 대책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 해고를 최대한 억제할 것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과 직업전환 도모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등이 실업대책 수립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차원으로는 도와 시·군에 실업대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실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센터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실업문제는 정치적 문제”

오두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지방단체에 실질적인 실업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실업통계조차 정확히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업문제는 자본주의의 구조와 생산양식의 문제이므로 실업자운동은 노동·사회운동이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에 싸우는 과정에 위치한다”고 규정한 뒤 “따라서 실업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실업자는 재벌개혁 등 이른바 ‘국민의 정부’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사와 동정 】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결성식

지난 8개월 동안 ‘군산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반대 시민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힘찬 투쟁을 전개해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어낸 시민모임이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으로 전환하고 결성식을 갖는다.

때 : 5. 8(금) 오후 7시
(기자회견: 같은 날 오후 4시)
곳 : 군산 오룡동 성당

▷ 군산미군기지 소음피해 진단과 해결을 위한 한·일 토론회

때 : 5. 29(금)
곳 : 미정

▷ 자원봉사자 모집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자원봉사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관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321-76-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4-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법원, 가혹행위 전주교도소 손들어줘

교도소에 행정소송 재소자 패소 법원, 교도소 가혹행위엔 ‘모른체’

자신을 타 교도소로 이송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교도소측의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재소자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재판부(재판장 이보현 법원장)는 지난달 29일 전주교도소에 수감중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김대식씨(전주시 송천동)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수용자이송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혹행위에 대한 은폐목적과 검찰의 고발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이송처분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료가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이송처분은 교화 및 행형질서 확보의 필요상 적정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사기죄로 징역10월이 확정, 이달말 만기출소 예정인 김씨는 지난해 미결수 상태인 자신을 교도소측이 51일 동안 기결수 독방에 수용해 가혹행위를 일삼아 이를 문제삼자 대전으로 이송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행정신청과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전주교도소는 수심명을 쇠사슬 등 계구를 이용해 온몸을 묶은 채로 징벌방에 수감했던 사건 이후 당시 사건의 발단이었던 김씨를 대전으로 이송했었다.

김씨의 부인인 강모씨가 당시 가혹행위에 대해 전임 교도소장 등 관련 직원 4명을 부당한 인신구속에 따른 폭행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에서 김씨의 전주교도소 수용은 불가피했던 것도 교도소측의 긴급 이송조치가 재량권 남용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점이었다. [84, 87호 참조]

전주교도소 장기수 기획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려면 일본에 다녀온 것이 죄

1. 장기수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민주·통일운동 관련
4. 일본 관련 사건
5.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6. 기획을 마치며

간첩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수들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어떤 사건이라 해도 ‘조작’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사건이 거나를 막론하고 사건을 접할 때는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조작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일본은 간첩이 되기에 너무 좋은 땅?

일본관련 간첩사건은 가히 ‘조작간첩의 황금어장’이라 할만하다. 일본관련 사건은 내국인이 일본을 방문하여 친지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우연찮은 기회에 조총련계 사람을 만났다가 귀국하여 간첩이 되는 경우다. 친척이나 조총련을 만날 때 미리 조총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들이 조총련인지 아닌지도 모를 친척을 만난 것은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것이 되고, 경부고속도로가 4차선이라든지 선거가 언제 있을 것이라든지 하는 외국인이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된다. 수사기관으로서 일본에 있다는 그 공작원을 검거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나 수사기관이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거기다 친지들이 건네주는 돈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것은 공작금으로 둔갑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맘만 먹으면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은 모두 간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86년 구속)씨는 1백 5일간 고문을 당하고 무기형을 받았으나, 사건의 핵심인 일본의 전성광씨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강씨는 전혀 개인적인 친분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 사건을 판결했던 박우동 변호사는 몇 년 전 한 시사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라고 토론했다. 박우동 변호사는 “군사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강희철씨에 대한 자신의 판결이 오판이었다며 참회했다. 그러나 강희철씨는 지금도 대전교도소에서 12년째 수감생활 중이다.

간첩은 만들어진다

전주교도소에 있는 문철태(71세, 85년 구속, 무기형에서 20년으로 감형)씨의 경우,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안기부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한다. 민가협 의 자료에 의하면, 문철태씨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도입하여 3년간 영사자격으로 활동하다 조총련과 관계를 맺은 일이 있어 1981년 체포되었으나 안기부에서 그를 직원으로 삼고 역공작을 시도, 일본에서 유학하던 아들 문영석을 통해 조총련과 접촉하게 하였다. 가족들은 “몇년 전부터 안기부의 모부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취하는 것을 가족이 압압리에 알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일본관련 사건들을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로 애용했는가는 지금까지의 간첩사건 통계에서 일본관련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강연요약] 제2회 인권학교 제3강좌 : 서준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 그 의미와 '인권'의 현주소

1. 인권의 역사

인권을 말함에 있어 다음의 사실, 즉 인권 개념의 한계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 첫째, 현재와 같이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체계는 서유럽, 그것도 서유럽 근대사회에서 태어난 것이라는 점, 둘째, 인권체계는 특정한 역사 속에서 특정한 사회 세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인간의 인간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는 신분제도 하의 여러 관념은 '인권' 개념과 도저히 조화할 수 없는 것이다. 봉건적 소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면서 봉건적 특권계급의 압박에 시달려온 시민계급은 '자유'와 '평등'을 소리높이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혁명을 성공시킨 부르주아지는 '평등'을 경제적 평등이 아닌 '법 앞의 평등'으로 왜곡되며, 사상·표현·신체 등의 '자유'는 하위 규범에 의해 제약되고, 경제활동 및 재산의 '자유'는 한결같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리하여 근대 유럽사회의 인권은 자본의 재생산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인권의 근본인 '생존의 요구'는 사라지고, 그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는 형식적 표현이 절대화되어 간다. 바로 여기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자유권이 중심이고,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서양사회의 인권만이 인권이라는 인식이 발생하게 된다.

무원칙한 노동착취에서 오는 노동력 피폐현상은 계급투쟁을 격화시켰다. 따라서, 사회권의 보장 그 자체는 반(反)자본주의적인 것이 야심은 물론, 현대에 있어서 안정된 최대이윤을 위하여 불가결의 조건이다.

2. '세계인권선언'의 의의와 한계
'세계인권선언'(이하 '선언')은 적어도 '인권'은 세계적인 것이라는 점을 선언했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또한 많은 다국간 또는 2국간 조약 형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여러 나라의 헌법이나 인권과 관련된 국내법의 준비에 기초를 제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은 근대 서유럽사회가 낳은 전통적인 인권체계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언'을 헌법으로서 받아들임은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인권 개념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추상성·보편성·초(超)계급성'이다. 즉 "누구도...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혹은 "모든 사람은...의 권리를 갖는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표현형식은 실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이란 어차피 실질적인 것이 못되는, 인류사회의 '강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체념을 널리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힘으로 기능하고 있다.

질적으로 계급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처럼 거꾸로 경제적인 약육강식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면서 인권을 허구화시켜 왔다.

또한 '선언'은 "자유와 평등"이란 어차피 실질적인 것이 못되는, 인류사회의 '강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체념을 널리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힘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가입 당사국들에게 이행 의무를 지우는 '계약'으로서 결실되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에 의무를 이행케 하기 위한 '실시 조치'(measures of implement)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였다. 국제적 인권보장

의 역사에서 현재 진정 획기적인 사건은 개인 및 민간단체의 제소 허용까지도 포함하고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된 여러 가지 실시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세계인권선언'을 넘어서

'인권'은 실제로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왜소화·저차원화되면서도 보편성("모든 사람")을 표방하는 고매한 이념으로 치장돼 왔다. 우리는 '선언' 제1조 즉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아름답고도 기만적인 표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전통적 '인권'의 추상적·보편적·초계급적 형식은 '인권'이란 말에 비교적 유연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현실의 경제적·사회적 힘관계를 고려해 놓지 않고 '인권' 그 자체로서 생각할 때 '인권'은 현실을 떠난 허황된 지배의 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실의 경제적·사회적 힘관계를 적극적·실질적으로 고려해 놓고 '인권'을 생각할 때 '인권'은 현실을 반영한 정직한 개념이 될 수가 있다. '인권'은 '양날의 칼'인 셈이고 여기에 '선언'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50년. 물론 인권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시조치는 아직 충분히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점점 정교하게, 그리고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다. '평등'과 '자유'의 이념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을 허구화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강제장치)이 생기고 있다. 여기에서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이 좀 더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본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96 호

1998년 5월 11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561-162]전주시 덕진구 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0652-76-1253

·팩스)74-7486 ·통신ID)onespark(천.나.녹두) ·E-mail:human@kor.inp.or.kr ·Homepage:http://kor.inp.or.kr/onespark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결성돼

군산미군기지 반환 위해 항구적 활동 벌이기로

미군기지 내 민항기의 이착륙료 인상안 협상 문제로 출발한 군산미군기지 싸움이 '우리땅 찾기' 운동으로 위상을 잡았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등 전북지역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지난 8일 저녁 군산 오룡동상당에서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시민모임·상임공동대표 문정현, 공동대표 문용주, 한상열, 한지원)을 결성했다.

결성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모임은 "군산미군기지를 언제가 우리땅으로 찾아야 한다는 일념 아래 본격적인 주권회복 운동을 펼치고자 뜻과 행동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모여 우리땅 찾기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폐지 운동과 미군기지 임대기간 설정 운동 등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 △ 공여지 재산권 보호 문제 △ 미군범죄 문제 △ 소음피해 등 군산미군기지의 환경 문제 등 4가지의 커다란 과제를 설정하여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4개의 각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 군산미군기지가 우리땅이 되는 날까지 군산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인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결성선언문'에서 시민모임은 "군산

시민들은 88·89년 연이은 미군범죄 규탄 투쟁 등 반외세 자주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시민모임은 군산미군기지 문제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연구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대응으로 승리하는 시민모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시민모임이 발족함에 따라 [군산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소됐다. 한편 시민모임은 5월 29일 오후 4시 군산에서 일본 오키나와의 민간단체를 초청하여 <군산미군기지 소음피해 진단과 해결을 위한 한·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임금없이 더 이상 노동력 제공할 수 없다!

익산 만도기계 7일부터 파업돌입

만도기계 노동조합은 5월 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7개 지부(아산·대전·청원·평택·경주·문막·익

산) 5천여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만도기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상여금 350%, 97년분 김장상여금 15만원과 4월분 급여 등 1인당 500만원 이상, 약 5백억 원이 체불돼 있다.

익산 만도기계 노동조합(지부장 이충인)은 5개월 동안 계속되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자들의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사실상 반실업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사측이 4월 3일 노사합의한 '체불상여금 중 50%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용자를 신뢰할 수 없고 50%의 체불상여금과 4월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지부 부지부장(최 남석)은 "한라그룹 부도 이후 정몽원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은 실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노력이나 회생이 없었고, '회의개시'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자 '임금삭감'을 주장하더니 노사합의사항마저 휴지조각으로 날려버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불가피하고, 임금없이 더이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만도기계 노조는 익산노동사무소에 만도그룹 소유의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무공탁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했다.

'제2회 인권학교 - 전주' 제3강의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전망'

- 강사 : 곽 노현(한국방송대 법과대학 교수)
- 곳 : 숲정이성지 사회관(0652-76-1253) ·때 : 5.14(목) 저녁 7시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절반 이상이 98년 이후 실적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 실업급여 신청자 대상

전북지역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지역에서 인권 운동을 하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가 지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98년 들어 전주·익산·군산 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1800여명 가운데 100명(남성 78, 여성 22)을 대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행정절차와 실적 후 사회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응답자 가운데 55%가 98년 이후 실적했으며 그 사유도 휴폐업 23.0%, 정리해고 14.0%, 명예퇴직과 권고사직 등 21%이어서 현재의 실업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실업사태로 분석된다.

성별실업빈도 조사 결과 실업의 문제는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전체 여성 조사대상자 22명 중 68.2%에 달하는 15명이 98년 이후 실적자로서 남성의 53.5에 비해 훨씬 높았다.

실업자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절차가 '불편하지 않다'가 37%, '불편하다' 25%,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0%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실업자들에 대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실업 문제 해결의 효과적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78%가 '직업교육을 받음으로써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더욱이 재취직을 위한 직업훈련이 고용보험 대상자에 한정되어 있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실적 후 심정을 묻는 항목에는 '죽고 싶었다'가 17%, '현실로 받아들

이고 수긍했다'가 44%였다. 실적 후 주변의 시선에 대해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고 다수가 '냉랭하다'고 응답했다.

평준화 요구 붐물

익산 이어 군산, 교사가 앞장서

익산에 이어 군산에서도 고교입시를 평준화하자는 요구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분출하고 있다.

군산지역 고교입시 평준화 실현을 위한 교사추진위원회(평추위·위원장 김홍철, 군산 중앙고)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비평준화 제도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학교 서열화에 따른 열등감과 패배감을 안겨주며 군산지역 인재양성과 교육의 질도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밝혔다.

평추위는 이미 군산시 16개 중고등학교 교사 809명 가운데 696명(86%)으로부터 평준화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에 따르면 군산고와 군산여고 등 이른바 '명문고'의 일부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의 교사들이 현행 비평준화의 폐지를 갈망하고 있는 셈이다.

비평준화 제도의 뿌리는 깊다. 군산지역은 지난 80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 평준화를 실시했으나 학력의 하향평준화, 인재양성저해, 학생의 학교선택권 존중 등을 주장한 특정 학교와 동창회의 입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준화를 해체, 지금까지 9년 동안 비평준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다수 교사들이 보기에 지난 9년은 군산 교육에는 고난의 시절이었다. 군산지역 7개 남부 중학교의 경우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이웃 도시인 익산의 남성고등학교로 다수 전

학함으로써 사실상 '위탁교육'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또 성적에 따라 이미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가가 사실상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전무하다고 교사들은 주장한다.

평추위 김홍철 위원장은 "평준화 실현을 위해 전교조 등 30여개 지역단체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추위는 오는 14일 [평준화 실현 군산시민단체 연합회]를 꾸리기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고교입시 평준화 환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익산시 의회 이름으로 채택됨에 따라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 문제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행사와 동정 】

▷ '군산미군기지 소음 피해 진단과 해결' 한·일 토론회

때 : 5. 29(금) 곳 : 미정

▷ 전국 양심수에 60통 편지

[전북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전)]이 전국의 양심수에게 60여 통의 편지를 써보냈다. 학생들은 지난 1일이 행사를 갖고 '정치·사상 자유'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다짐한 뒤 양심수들과 서신교환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주관 [평화와 인권]은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4-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개혁방송' 축소위기

조선일보 반발 두려운 KBS 사내 안기부 고리도 한몫

KBS 사측(사장 박권상)이 <이제는 말한다>의 방송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노조집행부가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오수성 위원장은 사측의 반개혁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며 9일 현재 사측에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 6일과 7일 잇달아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개혁프로그램을 조속히 방송할 수 있도록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측은 그러나 <조선일보를 해부한다>편을 문제삼아 사전 검열을 한 뒤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과거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KBS TV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다 조선일보가 KBS 내 안기부 고리를 반격 대상으로 삼으리라는 예상도 현재 간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별제작팀장인 김철수 PD는 개혁프로그램 기획의도가 성격과 기미를 겸으로써 개혁의 초석을 놓는 데 있는 만큼 언론제별 조선일보를 다룬 2편도 기획대로 방송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 1편 <KBS - 그 굴종과 오욕의 역사>, 제 2편 <조선일보를 해부한다>, 제 3편 <광주대학살>, 제 4편 <5%의 공화국>, 제 5편 <잘못된 선택 - 삼성자동차> 등 5편의 제작이 완료되거나 제작 중이다.

<이제는 말한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일보를 해부한다>편은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의 가차명 소유 토지 등 조선일보가 지배세력의 한 축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집중 조명하는 것으로 제작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 정기수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유일한 증거 '피의자 심문조사'

1. 장기수 기획을 시작하며
2. 소장기수들
3. 민주·통일운동 관련
4. 일본 관련 사건
5.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6. 기획을 마치며

인권단체들이 분류하는 양심수 명단에는 '행방불명가족'이라는 사건명이 있다. 현재 구금중인 장기구금 양심수 60여명 가운데 다섯명은 이 사건들에 연루돼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음에는 고개를 가웃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자나 행방불명자를 가진 가족들은 그후 혈육을 만났거나 혹은 도왔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납파되었다는 사건의 장본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첩활동을 했는지는 물론 혈육을 만났는지 여부조차 의혹을 사고 있다. 조작의 의혹이 짙은 것이다.

수사기관은 월북자 및 행방불명자들이 가족을 만났을 가능성을 고문으로 확대 조작하여 기정사실로 만들어 왔고,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법 자체의 비상식적인 예매모호함과 '반공'이면 무엇이건 가능했던 경직된 사회분위기로 이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데 이용하였다.

한 예가 간첩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일가족 모두가 '삼척간첩단 사건'으로 둔갑, 12명에 이르는 가족들이 사형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월북한 것으로 알고 있던 외삼촌 진현식씨가 68년 상처입은 몸으로 갑자기 나타났을 때 김순자씨(5년 6개월 선고)와 가족들은 무척이나 놀

랐다. 진짜는 상처가 아물자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친척에게 해가 될 것 같다' "월북을 시도한다"며 집을 떠났다. 그후 아무 일도 없었다. 10년이 지난 79년 어느날 누군가 이 일을 밀고했고 '삼척간첩단 사건'이 발표됐다. 간첩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아버지와 진짜의 동생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들 12명의 가족 가운데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고, 이들이 복역했거나 아직까지 복역 중인 형기는 모두 합해 100년이 넘는다.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진창식씨는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되어 현재 19년째 구속돼 있다.

또 다른 수감자 석달윤씨는 80년 중앙정보부에 47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지금까지 징역을 살고 있다. 석달윤씨의 증언이다.

"수사관들은 나를 알몸으로 만들어 땅바닥에 누인 뒤 손과 발을 네 명의 수사관이 밟고 얼굴에 물을 붓는 물고문을 밤새 하였다... 작은 송곳으로 허반신 허벅지를 계속 찔러 피가 전신을 적셨고 상처를 치료한다면서 약명미상의 알약을 먹었는데 그 약만 먹으면 계속 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했다... 끝없는 고문 속에 '죽어나가는 것보다 징역을 살더라도 살아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봐야 한다'는 착각으로 전혀 만난 적이 없는 간첩 방망이를 만났다고 허위자백했다."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피의자 심문조사' 뿐이었다.

석달윤씨와 진창식씨 등 '행방불명가족' 관련자들은 그러나 지난 3.13 특사에서도 제외되어 만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강연요약] 제2회 인권학교 제2강좌 - 이 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평론가)

“아동·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

1. 아동/청소년 인권의 역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여기에는 사회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 "전세계 아동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워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1989년이었지만, 아동의 인권사상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인권사상은 근대 인권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것은 다시 1959년 '아동의 권리 선언'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아동을 단순한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인권이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해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을 인류의 의무라고 인정하고 있다.

'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만들어야 한다. 89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협약은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이 협약은 90년 9월 2일부터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2. 아동 인권을 위한 한국의 노력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한국정부는 3개 조항을 유보한 채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다. 유보조항은 부모와의 면접교섭 유지권(한국: 부모가 자녀를 볼 권리는 있는 반면, 자녀는 부모에 대해 권리가 없다), 입양허가(한국: 양 부모 중 한쪽이라도 허락하면 가능), 상속권보장(한국: 3심제에 의한 항소, 상고의 권리가 없다) 등인데 이 조항은 국내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제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동

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현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아동권에 관한 국제법약의 구성

아동/청소년 인권의 구성을 당사자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동/청소년은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1) 생명과 생존에 관한 권리가 필요하고, 배우는 시기이기에 2)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권리(교육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등)를 보장받아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생활

'장유유서' 문화는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 무엇보다도 아이들 스스로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엔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부모와 교사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할 수 있도록 3)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사표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4) 양육과 보호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경시되어 온 5)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

4.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하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연구, 평화가족 모임, 어린이 권리교실, 인권영상축전, 연대활동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인권침해사례 연구에서는 어린이 사

건에 대한 공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 이혼시 아동양육의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5. 아동 인권을 위한 연대활동

먼저 당사자인 아이들이 자신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조약과의 관계를 비교해보고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집단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대부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내외에서의 자치모임을 통해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다. 학급회나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반사항을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다. 학생의 인권과 복지에 관심있는 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다. 컴퓨터통신이란 가상공간을 통해서 권리운동을 시도할 수 있다. 95년 강원도 초·고등학교 최우주 군이(당시 1학년) 학교가 강제하는 모충·야간 자율학습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하이텔에 토론장이 개설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하이텔 학생복지회'가 만들어졌으며, 현재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나우누리에도 있음) 또한 무엇보다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부모와 교사에게 아동/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지킴이 같은 비정부기구의 의무적인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비정부기구는 다른 나라의 비정부기구들과 연대해서 아동인권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인권교육의 기법을 배우며, 인권활동가의 교류를 꾀할 수 있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97 호

1998년 5월 18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0652-76-1253

·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나.녹두) · E-mail:human@kor.inp.or.kr · Homepage:http://kor.inp.or.kr/onespark

‘오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규명 안된 상태 - 정부, 해결의지 전혀 안 밝혀

다시 찾아온 '오월', 5.18 광주민중항쟁 18돌을 맞는 오늘도 광주학살의 진실규명은 물론 5·6공 군사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숭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성만 열사 10주기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던 15일 중앙성당에서는 5·6공 정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의장 이창복)는 악법과 폭압기구 철폐, 책임자 처벌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20일 넘게 진행 중이다.

광주학살의 진실규명은 전두환·노태우 씨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한 예로 <5.18 광주민중항쟁유족회>는 희생자들의 날짜별, 주요지역별 사망분포를 분석하여 "광주학살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계엄군들의 성폭행 사건, 행방불명자와 암매장된 사람들,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광주의 진실은 하나 둘이 아니다.

5.18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선 우선 5.18 진실규명과 총체적 과거정산을 위한 이른바 '진실정의위

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민주주의민중통일전국연합(상임대표 이창복)은 '5.18 18주년 기념 논평'을 통해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맞는 5.18을 앞두고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5.18의 직접 피해자의 한 사람인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정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5.18 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전·노 사면을 철회하고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단행할 것', '민족민주열사와 군사독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화려한 말잔치 속 노동자에 고통전달’

금속노련, 27일 총파업 돌입하기로

‘제2회 인권학교 - 전주’ 제4강의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 강사 : 김승환(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곳 : 숲정이성지 사회관(0652-76-1253) · 때 : 5.21(목) 저녁 7시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미군기지문제, 민족주권 자세 촉구

‘군산시민모임’, 국방부에 공식요청 설명회

국방부와 건설교통부는 5월 14일 군산공항 회의실에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3일 체결된 군산미군기지 민항기 사용료 인상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상안에 대한 기초 발제를 한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산비행장의 연도별 착륙비 인상안을 민항기가 국내 군비행장을 사용하면 지불하는 1편당 평균지불비용과 비교할 때도 이번 개정 인상안은 절대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군산·전북지역 주민의 항공교통 편의 증진과 군·장 공업단지 및 무주리조트 개발 등 군산공항에 민항기의 운항 요구가 지속되는 한 적정 수준의 착륙료 지불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질의에서 “98년도 4억 달러를 미군에 주둔군 지원경비 명목으로 지불하고 활주로 유지비 명목으로 받는 활주로 사용료, 대대적인 보수시에 활주로 보수비 명목으로 25%를 부담하는 3종의 부담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민족주권의 입장에서 이후 모든 협상에 임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환경·소음 피해 조사를 통해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미국의 주장대로 기지를 미국인의 세금으로만 지었는지’, ‘사용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 5가지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민모임이 1만명 서명을 접수하고 국방부장관 앞으로 ‘군산미군기지 민항 활주로 사용에 관한 시민설명회’ 개최를 공식 요구한 뒤 이루어졌다. 시민모임은 당시 공문을 통해 <1970년 맺었던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군산공군기지 시설의 대한항공 사용에 관한 협정의 전문>과 <방위비 분담금의 내역>, <군산공항은 누가 지었고 92년 군산공항 합의각서 체결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시설개선비와 유지비, 비행기 이착륙 때마다 계산되어 받은 돈을 미공군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 <98년에 체결된 MOA 원문> 등 5가지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 중 <98년 체결된 MOA 원문의 요약본> 등 3가지 자료를 시민모임에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오는 29일 ‘군산미군기지 현안 과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6.4 지방선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내는 등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도원동 주민 또 구속

“집회 행진코스 이탈” 이유

‘도원동 강제철거’를 항의하던 전국 철거민연합 회원 2명이 거리행진 시위를 벌이던 중 강제연행되어 구속됐다. 전국철거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원동 강제철거’를 항의하는 거리행진 도중 경찰은 “행진코스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주민 8명을 연행하고 이 가운데 권명화, 김효수 씨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3일 철탑망루(일명 골리앗)가 무너질 당시 불구속으로 풀려났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족들의 항의에 대해 용산경

찰서는 “검찰 공안부에서 지시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 행사와 동정 】

▷ ‘고용·실업대책 전북 도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기자회견

때 : 5. 22(금) 오전 10시
곳 : 동학백주년기념관

▷ ‘군산미군기지 현안과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

때 : 5. 29(금) 저녁 7시
곳 : 군산시청회의실

→ [3면에서 이어짐] 제정하고, 행정정보 공개법이나 사생활 정보보호법 등을 제정해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인권기구가 관료적 국가기구로 타락하지 않도록 국내외 민간단체들과 접촉해 국가기구적 성격을 최대한 약화시켜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제인권시대의 인권과수준 노릇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의 국민인권기구 설립과정은 이러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질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원주십시오.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4-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천리마’ 이적단체 무죄

“국보법 무리한 적용에 계동”

민중노래패 ‘천리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고등 5부(판사 우의형)는 권영준, 김대성 씨 등 ‘천리마’ 단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합의 11부는 1996. 12. 6. 1심에서 권영준, 김대성 씨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총련의 강령을 수용하여 천리마 노래단을 만들어 이적단체 구성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수배 중이던 천리마 노래단 구성원 4명이 구속되어 이적단체 구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어서 이들의 선고결과도 주목된다.

수원의 다산인권상담소(소장 노정희)는 이번 판결은 검·경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IS’ 17명 국보법 구속

‘노동자 총파업 선동’ 등 이유

이동수 씨 등 ‘국제사회주의자들’ 17명이 노동자 총파업을 선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 씨 등이 5.1 노동절 집회에서 ‘지금은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91년 11월 이후 ‘국제사회주의자들’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뒤 노동정치토론회를 개최한 것 등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었다.

[강연요약] 제2회 인권학교 제3강좌 : 박노현(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1.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 위한 강력한 수단

국민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인권전담 국가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는 노동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위원회 형식으로 조직된다. 현재 호주, 캐나다, 필리핀, 남아공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현재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나라들에서 인기가 높다.

2.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호주의 국민인권기구는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는 ▶인권관련 진정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인권관련 소송에 참가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권관련 쟁점에 대해 공개조사를 통해 청문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권관련 연구 및 교육, 훈련, 홍보활동 ▶인권관련 국가법령, 정책, 관행과 관련한 대정부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위원회는 특히 차별금지영역(성, 인종, 장애자 등)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사안이 시민·정치적 권리에만 그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행사하지 못하는 점에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성장일변도의 경제제일주의에 매달려온 나라에서는 필히 사회경제적 인권을 관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새 정부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다행히 국민인권기구 설립은 새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난국을 이유로 어물쩍 미루려는 분위기가. 국민인권기구 설치의 새 대통령의 민주개혁의지를 드러내는 핵심 과제의 하나이다. 또한 지금은 경제위기를 맞아 그 어떤 때보다도 인권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기구 설치를 미루는 것은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민인권기구의 취지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실효성을 부여하지는 데 있는 만큼 선언 50주년인 올해만큼 설치하기에 좋은 해는 없다.

3.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인권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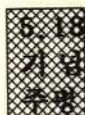
또한 일반대중이나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국민인권기구는 일차적으로 민간단체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들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 없이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를 이겨낼 정치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가 없이는 국민인권기구 역시 타락하기 쉬운 국가기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예산의 독립성 확보도 독립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가용예산과 조치가 왔다갔다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에 국민인권기구의 예산에 대해 독자성을 인정하는 문언을 넣어야 될 것이다.

다행히 국민인권기구 설립은 새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난국을 이유로 어물쩍 미루려는 분위기가. 국민인권기구 설치의 새 대통령의 민주개혁의지를 드러내는 핵심 과제의 하나이다. 또한 지금은 경제위기를 맞아 그 어떤 때보다도 인권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기구 설치를 미루는 것은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민인권기구의 취지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실효성을 부여하지는 데 있는 만큼 선언 50주년인 올해만큼 설치하기에 좋은 해는 없다.

다만 몇 가지 고려 사항은 ▶대정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인권도 관장하도록 해야 하며 ▶차별금지법을 [→ 2면에 이어짐]



그 누구도 5.18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만식(「평화와인권」 편집인)

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 핵심세력들의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5.18 대학살의 진상을 거의 밝혀내지 못하는 등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문의 임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적한 '과거청산'의 과제를 덮어버리려는 반동적 움직임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5·6공 잔당과 대신 주자들의 전·노 사면 주장이었고, 결국 사면은 김영삼 대통령 임기 안에 김대중 당선자와 공공연한 정치적 타협 하에 이루어졌다.

진실규명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전·노의 처벌과 이어진 사면은 진정한 '과거청산'을 염원하는 광주항쟁의 정신에 찬물을 끼얹었다. 5·6공 치하에서 신군부 세력이 저지른 행위와 이에 저항하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 작업은 따라서 원점에 다시 놓여진 셈이다.

그 시작은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과 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진실규명은 그 침해가 어떻게 준비되고 실행되었는가, 누가 지시하고 실행했는가,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등 해당 사건의 전체적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진실규명이 없는 처벌이나 배상은 자의와 복수로 연결되게 마련이며 진실과 악의 노력이 없는 사면은 결국 '불처벌(impunity)'이나 다름없다. 광주의 학살과 5·6공 치하 술한 정치적 살해 사건들, 거슬러 함평 양민학살, 거창 양민학살 등 한국 현대사의 각종 학살 중 어느 것 하나의 진실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불처벌'의 긴 역사적 터널을 아직도 헤매고 있는 셈이다.

악법 준비·폭압 제도 잔존

전·노가 사면된 한편에선 360여명에 달하는 양심수가 아직도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법·안기부법·보안관찰법·집시법·공무집행방해법 등 신군부에 의해 제·개정된 각종 악법과 안기부·보안사·대공분실 등 폭압 제도가 잔존하고 있다. 97년 들어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광주 망월동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5.18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지만 여전히 5.18 당시의 실종자와 암매장자 등 밝혀지지 않은 광주진실은 수수룩하다. 삼청교육대 희생자, 해직언론인, 해고노동

최근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5.18에 관한 이러저러한 자유주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조차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18주년 5.18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적 국면에 살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자, 조작간첩, 의문의 죽음 등 5·6공 치하 각종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가해자 처벌의 문제 등 과거청산의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내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는 5·6공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한 전면적 진실규명, 최대한의 관

용, 적절한 피해배상 등을 위한 진실정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현 정부가 실천하도록 싸워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한계

한편 '5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라붙는 미시여구들에게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현재 5.18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포함한 '과거청산'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에 소수 야당세력의 정권 획득을 위한 지역연합에서 출발하였고 그 세력들은 과거 군사정권과 유신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적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세력들이라는 점 등은 그가 표방하는 '개혁'의 한계를 드러내는 점들이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인 한계는 그가 전두환·노태우·김영삼을 계승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목을 광폭한 신자유주의의 칼날에 더욱 가까이 들이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과거 어떠한 역사적 경험도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면서 경제적 평등이 확대되거나 경제적 평등은 지체되면서 정치적 자유는 확대되는 사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반(反)노동자·민중 드라이브는 우리가 투쟁하지 않고서는 현 정부가 아무 것도 해주지 않을 것은 물론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조응하는 정치적 반동의 길을 가리라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

최근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5.18에 관한 이러저러한 자유주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조차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18주년 5.18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적 국면에 살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98 호

1998년 5월 25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전화)0652-76-1253
·팩스)74-7486 ·통신ID)onespark(천.나.녹.두) ·E-mail:human@kor.inp.or.kr ·Homepage:http://kor.inp.or.kr/onespark

고용실업대책 운동본부 출범

전북사회운동단체, 민중생존권 보장 등 위해 활동하기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종합적 고용실업대책기구를 발족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한국노총전북본부,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여성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노동·시민·종교·학계의 26개 단체는 22일 오전 동학혁명기념관에서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전북본부·상임공동대표 문규현·백남운·송병주·염경석·한규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개혁 등 4가지 주요의제를 설정하여 범도민적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본부는 산하에 정책위원회와 실업지원센터,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상담센터 등을 두고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전북본부는 또한 정확한 전북지역 실업자 현황 파악을 통해 지방정부의 고용 실업 대책을 촉구하고 전국 고용실업 범국민운동본부와 연대하는 한편 전북지역의 실업자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전북본부는 전북지역 실업률 및 실업

대책 행정정보공개청구활동, 지방정부의 실업대책을 촉구하는 여론 확산 사업,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 촉구 등 정책여론사업과 군축 및 재벌 개혁으로 실업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대서명활동 등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전북본부는 하반기 전북지역 실업자 대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현재의 고용위기를 불러일으킨 IMF지원금융 국면을 재벌 위주·수출의존적인 사회경제구조를 변혁해나가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전국 차원의 운동전선과 연계되는 전북지역 사회운동의 연대기로서 종합적 민간실업대책기구를 만들게 되었다"며 발족 취지를 밝혔다.

전북본부는 또한 "현재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세제를 개혁하고 국방비를 감축할 것 △전라북도 실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시급히 수립할 것 등을 우선 촉구했다.

'제2회 인권학교 - 전주' 제5강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와 사회복지운동'

- 강사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곳 : 숲정이성지사회관 (0652-76-1253) · 때 : 5.29(금) 저녁 7시
- 주최 :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요약)

전북도민의 경제활동인구 80만 중 10분의 1이 사실상 실업자인 시대! 자칭 국민의 정부는 형식적이고 실효성없는 대책으로 민중들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한 고용분담은 구호로만 그치고 노동자 민중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스스로 개혁을 포기한 채 당리당락에 빠져 심각한 민생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교, 시민, 노동, 학생 등 전북지역 사회운동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렇게 모였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는 정부에 철저한 고용 실업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은 모두 길거리로 몰아내고 누구와 더불어 경제를 희생시키려 하는가? 둘째로, 우리는 전라북도의 실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구성된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전북지역의 고용실업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1998. 5. 22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전주교도소 미전향수 접견제한

뚜렷한 기준없이 접견 제한, 생활·의약품 차입도

전주교도소가 여전히 미전향수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전주교도소를 찾은 사람은 흥근수 목사(향토교회·평화주의자 김낙중석방대책위 상임대표), 윤성식 씨(전 4월혁명연구소 소장·현 양심수 후원회 감사), 김규철 씨(김낙중대책위 운영위원장) 등 세 명이었다. 손병선 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무기수)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 가운데 그러나 윤성식 씨는 접견이 불허되었다.

교도소측은 "피접견자가 미전향수이기 때문에 성직자 외에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김규철 씨 역시 성직자가 아닌 것에 대해 최해룡 소장은 "전에 면회를 왔었고 별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억지주장을 폈다. 또 최 소장은 "손 씨의 면회를 제한하는 이유는 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소자에 대한 접견제한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과 교도행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지만 현재 교도소측은 '멋대로'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현 행행법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고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도소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제1128호에서 인용)

한편 손병선 씨를 면회한 흥근수 목사에 따르면 간염(C형)을 앓고 있는 손 씨에게 교도소측은 가족들이 차입한 약을 전달해 주지 않고 있다. 또 교도소측은 손 씨에게 치약과 칫솔도 반입시키지 않고 있다. 흥목사는 이에 대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교도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 보다"며 "전주교도소는

인권 사각지대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각지대이자 도덕과 양심·문명의 사각지대"라고 비난했다.

사상전향제도 철폐 주장

장기수 강용주 씨 20일간 단식 폭력 앞에 당당한 신념

'85년 전두환 정권 아래서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중인 장기수 강용주 씨(36)가 사상전향제도 철폐를 위해 4월 30일부터 20일 동안 옥중단식을 벌였다. 강용주 씨는 현재 안동교도소에서 14번째 복역중이다.

강용주 씨는 단식을 시작하며 보낸 편지(21일 민가협 제230차 목요일 회에서 소개)에서 "전향제도는 중세 마녀사냥, 매카시즘 하의 충성선서처럼 인간내면 세계를 짓밟는 일"이라며 "국가는 내면세계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용주 씨는 또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파괴하는 야만에 대해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전향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고문과 폭력에 무너져 내려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버린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폭력과 강제에 굴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용주 씨는 "세상은 비전향장기수가 무슨 거창한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전향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신념은 '폭력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할 양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제1130호에서 재인용)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한겨레> 창간 기념(5월 15일자)으로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사실상 '전향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도원동 폭력 축소은혜 기도

분노 속 단식투쟁 계속

24일 현재 6일째 도원동 주민들의 무기한 단식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용산경찰서가 이법취, 백석호 씨 고문방화 폭력사건 진상을 조작,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전철연)에 따르면 23일 용산경찰서 형사가 백석호 씨가 입원해 있는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 두고간 '수사진행상황통지서'에서 경찰은 "수사 결과 당시 5, 6명의 화염분사기를 맨 사람들이 100여명의 정체불명의 사람들 틈에서 썬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화염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용산경찰서는 이법취, 백석호 씨가 집단적인 테러를 당할 당시 사건현장에 수많은 직원들을 상주시켜 당시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경찰은 '5, 6명'의 신원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 썬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화염을 분사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라는 대목은 마치 백석호 씨가 화염분사기로 불을 뿜어대다가 스스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해석될 소지마저 내포하고 있다.

전철연은 "검·경찰이 이법취 씨를 집단폭행한 주범들은 대부분 풀어주고서 겨우 6명만 구속, 1명을 불구속으로 풀어주었다"며 "강제 6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백석호 씨 방화고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원동 관련 연행된 철거민과 학생들의 숫자는 140여명에 이르며 그 중 11명이 구속됐고 90여명이 불구속 입건돼 있다.

【 행사와 동정 】

▷ 군산미군기지 현안과 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때 : 5. 29(금) 저녁 7시
곳 : 군산 여성회관

▷ 전교조 결성 9돌 기념 교육개혁실천과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전북 교사대회

1부 - 기념식
2부 - 실직자 자녀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문화공연
때 : 5. 30(토) 오후 4시
곳 : 전주 시청강당

▷ 노동자 노래패 '민들레' 제1회 정기공연

때 : 5. 30(토) 오후 6시
곳 : 소리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 자원봉사자 모집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자원봉사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장 [평화와 인권]을 도와주세요.
구독문의 : 0652) 76 - 1253
후원계좌 : 예금주 문규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전주교도소 장기수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사상 때문에 갈릴 수 없다

1. 장기수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민주·통일운동 관련
4. 일본 관련 사건
5.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6. 기획을 마치며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후보)은 광주주민영방송에서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양심수 전원석방"을 얘기해 세간을 들끓게 했다. 수구보수측에서는 "불순분자들과 한 하늘에서 같이 살 수 없다"며 김대중 색깔론을 들먹였다. 한편 검찰측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단 한명의 양심수도 없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정한 우려는 민주진보인사라 믿었던 그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다. 어떤 개인의 사상이 자본주의를 신봉하던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그건 그의 자유이고 이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람들의 머리에 든 사상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양심침해'니까 찬성하지는 않지만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애매한 말로써 사실상 사상전향제도를 인정하였다. 김 대통령의 '다짐'의 형식이 무엇이든간에 (단순한 구두언급이든, 각서 또는 반성문이든) 그것은 결국 '양심과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많은 양심수들이 당국의 살인적인 전향공작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중 하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혹은 그들의 죄없음을 지켜내기 위해 전향을 거부하고 몇 십년 간을 0.75평 독방에서 혹독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의 대부분의 정치법들은 정권유지(특히 군부독재하에서)를 위해 국가 정보부에 의해 만들어진 조작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자신의 '사상과 양심대로' 행동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비극적인 분단상황은 남과 북의 정권유지에 오히려 좋은 여건을 준 셈이다.

이제 우리는 양심수들을 더 이상 감옥에 있게 해서는 안된다. 먼저 지난 과거 군부정권 하에서 솔하게 배출된 조작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과거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미래에 또다른 유사한 일들을 조장하는 것이며 이미 파괴될대로 파괴된 양심수들의 인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유린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과거청산특위'를 만들도록 외쳐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사상전향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정부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서는 안된다. 반대세력의 탄압으로 유지되는 정권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민주정부가 아닐 것이다.

사상·양심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이다. 반민주정권에서 늘 기만당해왔던 양심수들은 3·13 사면에서 또다시 정권교체를 이뤄낸 정권에서마저 기만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전면적 보장없이 양심수 석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는 김대중 정부에게 외쳐야 한다.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라! 사상전향제도를 철폐하라! 과거 조작(간첩)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강연요약] 제2회 인권학교 제4강차 · 김승환(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프라이버시권과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1.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권은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주제이다. 지난해 내무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확대하여 개인에 관한 35개의 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모아놓는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전자주민카드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만들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가가 쉽게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 보관, 통제하는 것은 사생활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 시행령은 신한국당과 자민련의 동의로 지난해 12월 날치기 통과되었으나 다행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회의에서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잠잠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여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시행이 가능하기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일제시대 조선인 전체를 감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는 주민등록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선 하루빨리 제대로 된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이 처음 등장할 때 (1888년)는 그 의미가 자기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을 권리인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보의 주체인 개인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겨를도 없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국가기관 사이에 또는 국가기관과 사적 단체 사이에 유통하는 현실을 경험하였다. 이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수집·보유·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

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1960년대)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컨트롤 하는 개인의 권리)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2.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외국 입법

세계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 (1981), 유럽사회의 개인 데이

우리에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실효성이 있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터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1981년), 미국의 프라이버시법과 컴퓨터 연결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 등이 있다. 이중 대표적으로 OECD가이드라인을 살펴 보겠다.

OECD Guidelines는 개인 정보의 수집·저장·이용에 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설정하고 있다. △개인 데이터 수집에는 제한이 있어야 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져야 하며 데이터의 주체가 인지하고 동의해야 하며 △개인 데이터는 사용되는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개인 데이터는 게시되어서는 안되며 특정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고

△데이터의 분실, 권한없는 접근, 파괴·사용·수정 또는 개시(開示)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작성, 실제사용, 방침에 대해 일반적 공개의 원칙이 있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인은 위의 원칙들을 실행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고 어겼을 경우 사법적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법

우리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994. 1. 7)이 프라이버시보호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법률은 개인에게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기에 이는 실효성없는 규정이다. 또한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국가정보원(과거의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적용을 가장 엄격하게 받아야 할 국가기관을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진정한 의미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99 호

1998년 6월 1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민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0652-76-1253
·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나.녹두) · E-mail:human@kor.inp.or.kr · Homepage:http://kor.inp.or.kr/onespark

군산, 특별법 제정운동 맞을러

<시민토론회> "미군기지 주변주민 지원운동 일환"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주최로 <군산미군기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날 29일 군산 여성회관에서 100여명의 시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제남·김용한 씨가 주발제자로, 군산시 권흥로 환경보호과장과 군산시민모임 최종수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96년 하반기에 (녹색연합 정책팀)과 (우리찾기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 준비위)가 공동으로 군산, 동두천, 평택, 부산, 대구 등 총 10개 지역 30개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군산지역에서 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음피해의 경우, 전체 지역 가운데 군산은 두 번째로 소음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며 “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미군기지주변 환경피해 실태를 기록해 이를 주한미군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평택시민모임 김용한 대표는 ‘주한미군기지 문제 해결의 현실적 대안’으로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제출했다(‘법안 초안 전문’ 상자 참조). 김 대표는

“미군기지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은 물론 미군기지가 철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군철수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초안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문과 총 17개조로 이루어진 이 법안 초안은 ‘미군기지 신설 확장 억제와 임대 계약’ ‘미군기지과 공여지의 반환’ ‘미군범죄 전담 검·경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 대표는 “이 법안이 완성되는 대로 국민서명을 받아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미군기지 철조망과 인접한 하재부락 4개 마을 대표로 나온 고종섭 이장은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의 발제에 대해 “소음피해는 풍향이나 훈련빈도에 따라 편차가 커 실제 피해는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 씨는 “일부 주민들은 폐유를 건져 팔아 생계에 보태왔다”고 말해 미군이 서해에 폐유를 방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초안)

‘전문’(前文) 요약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은 대한민국의 영역과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하였다. (중략) 그 뒤 주한미군의 범죄 등이 계속 문제되자 한미 두 나라는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66년 7월 9일 시설과 구역, 주한미군의 지위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도 살인, 강도, 강간, 교통사고, 훈련중 사고 등 주한미군의 범죄와 사고는 빈발해 왔다. 특히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미군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 미군기지 신설과 확장 등으로 토지와 가옥 등을 몇 번씩 강제 수용 당하거나 이른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미군들의 폭격훈련이나 미군기의 이착륙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와 폐유 등으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도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 조약과 협정 때문에 제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중략)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상호 이익을 보는 한미 양국가가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하며 살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전북 노동자 1차 총파업 단행

6개 사업장 4,500여명 - 노동자 위력·시민 호응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엄경석)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시한부 총파업을 벌였다. 이날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서비스 전주·군산·전북지부, 만도기계노동조합 익산지부 등 금속산업연맹 소속 5개 사업장 노조와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전북본부 등 총 6개 노조 4천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27일 오후 3시 전주시 코아백화점 앞 광장에서 노동자와 시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안정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국민회의 도지부 앞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정리하고 철폐 등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요구는 목살한 채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려 한다"며 "정부는 정리하고 제 및 근로자파견법 철폐, 실업대책 마련, 재벌해체 및 재벌총수 재산환수 등 우리의 요구에 대해 하루속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28일에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금속산업연맹 산하 5개 노조 3천 7백여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금속산업연맹 전북본부 주관으로 열린 [고용안정, 재벌개혁 및 중앙교섭 촉구를 위한 금속노동자 전북지역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는 전날 집회에 결합하지 못한 대우자동차서비스 전주공장 조합원들도 대오를 형성해 참가했다. 금속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근절하고 정리해고자·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정부와의 협상을 조만간 재개, 정리하고 철폐 등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0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7~28일 이틀에 걸친 1차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과 초합원들은 생존권 앞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성공적인 파업을 통해 자본과 권력에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동정말고 일자리를!"

군산실업연대(준), 전북 최초 실업자 조직운동

군산의 4천여 실업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군산 실업연대(준비위)'(대표 성하운·동양차체 해고노동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준비위는 지난 4월 30일 약 30여명의 실업자가 모여 출범식을 가진 이후 국민회의 군산갑지구당을 방문해 실업대책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갖는 한편 군산시청 노정계와 시정계를 방문해 역시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취로사업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군산실업연대(준)는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 및 '민주노총 군산시협의회' 등과 긴밀하게 연대하는 한편 전국적인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국민승리21 실업자동맹(준)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실업대책은 실업자 손으로 세워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실업연대(준)가 파악하고 있는 군산지역 실업자수 4천여 명은 최근 노동부와 군산시청에 구직을 신청한 숫자다. (0654-465-1316)

【 행사와 동정 】

▷ 군산노동자의집 <IMF 희망의 나눔터> 개원

'군산 노동자의 집'(대표 임연이)이 'IMF 희망의 나눔터'를 개원하고 실업자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군산노동자의집은 나눔터를 실업자 쉼터로 활용하고 나아가 노동문제 무료상담과 직업재훈련교육안내 및 실업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준비하고 있다. 군산노동자의집은 지난 10여년 동안 노동문제 무료상담과 민주노조 건설 지원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군산지역의 노동자운동 단체다. (0654-465-5715)

▷ 전북환경운동연합 (사)전북시민환경연구소 창립식 및 창립세미나

때 : 6. 2(화) 오후 2시
곳 :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강당
문의 : 0652-86-7977

▷ 자원봉사자 모집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자원봉사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약시킬것으로.
구독문의: 0652) 76-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호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북한동포 도울 시간 많지 않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민 770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시간이 많지 않다". 북한 식량난민 770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를 낸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의 지적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오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상태는 심각하며 기초의약품이 없어 쉽게 고칠 수 있는 가벼운 질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탈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95년 8월 이후 98년 3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률 및 기타 생존조건을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에서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기근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역사상 최악 기근사태 한 가족 내에서 사망률은 평균 27%에 이른다. 9세 이하 유아 및 어린이의 사망률이 37%에 이르고, 특히 3세 이하의 사망률이 50%를 넘어섰다고 이 보고서는 전한다. 60대 이상 노인 층의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도 취약계층의 두드러진 피해를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10대 이상과 50대 이하의 사망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연도별 사망률이 96년도 8.43%, 97년도 17.97%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에서 식량난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졌던 계층의 구성원들인 농민, 당원, 군인까지도 최근 들어서는 기아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들의 거주지였던 북한사회의 기초 공동체인 인민반들 또한 기아사태로 인해 점차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난민 가족구성원 중 사망자의

사망원인은 아사 36.9%, 아사와 질병 10.5%, 질병 42.6%로 나타났다. 생존해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심각한 영양실조 15.0%, 질병 24.8% 등 39.8%가 위험에 처해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식량과 의약품의 대량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올해에도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이 넘어 긴급히 행동해야"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한국정부는 물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배우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국내민간단체, 국제 NGOs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념, 사상, 종교, 민족,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만나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북한은 이제 완전히 기근시대로 바뀌었고, 작년에 빈번했던 전염병이 올해는 더욱 기승을 부려 많은 희생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동포를 위한 생명의 손길을 간곡히 요청했다.

[인권간행물] 열사회보

-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당신들은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있다"

박정희 정권 이래 91분의 열사들이 분신 등으로 자결했고 16분이 타살되었다. 그리고 옥중에서 85분이 산화하였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이 43분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사고나 병으로 운명한 분들이 87명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확인된 경우에만 한한다. 그리고 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거나 행방 불명된 296분의 열사들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대회의는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최우선의 과제로 꼽아 활동하고 있다. 진상 규명이 철저히 되지 않고서 명예회복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우느라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단지 산화해 간 열사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가두지 않는다. 더 이상 열사들이 산화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간절히 꿈꾸기 때문이다.

<열사회보>는 연대회의가 '열사의 이름으로' 매달 일구어내는 열사정신의 생생한 기록이다. 지난 5월호 <열사회보>는 유난히 두터웠다. '5월의 열사·희생자'란이 많은 페이지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과거사 심판 사례를 두 번째로 실었고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힌 동원동 현장도 취재했다. 부도사업장 이야기도 실었다. <열사회보>는 이렇게 열사정신을 실현하고 확장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투쟁의 정점에 항상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열사회보>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연대회의와 <열사회보>는 '열사의 이름으로' 투쟁한다. (02-742-3160)

[강연요약] 제2회 인권학교 제5강좌 · 문찬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와 사회복지운동

1. 사회복지의 출발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사회문제, 사회적 위험, 사회적 욕구이다.

① 사회문제

산업화와 도시화를 축으로 발달한 자본주의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분리로 인한 가족해체(노인문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등)와 농촌의 해체로 인한 도시빈민형성, 인간소외의 문제를 낳았고 이러한 사회적 양상은 국가로 하여금 시민사회에 개입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다.

② 사회적 위험

자본주의사회는 늘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실업을 비롯한 산업해체, 질병, 정년제, 가장의 사망 등이 개인의 소득중단 및 상실을 초래하여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것을 사회적 위험이라 한다.

사회적 위험은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상 내지 보장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한다.

③ 사회적 욕구

인간은 의식주와 교육, 의료, 노동 등에 대해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시장과 가족, 지역사회를 통해 충족된다. 위의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억압한다. 따라서 사회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충족을 집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① 권리와 자선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아주 쉽게 생각한다. 사회복지란 국가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자선인 양 알고 있다. 사회복지란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들로 인한 사회적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희생자인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에 대해 보상과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회는 법과 제도로써 이러한 의무를 수행

사회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 사회적 희생자인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에 대해 보상과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회는 법과 제도로써 이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해야 하는 것이다.

② 사회권과 헌법상 사회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으로 인한 공황과 실업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노동계급은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인간다운 생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권 내지 복지권이 등장하였다. 2차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에서 헌법상의 권리로 이를 승인하였다.

헌법상 사회권은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가족과 환경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이다. 그러나 현재 이 권리는 국가재정의 형편에 좌우되는 추상적 권리에만 머물러 있다.

국가는 유산계급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따른 조지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에 대해선 국가의 재정상 고려를 하지 않으면서 더욱 중요한 인간다운 생존권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고려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와 사회복지운동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제반 영역에서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는 수준이 곧 국민생활최저선 또는 국민복지최저선이다. 거기에는 소득, 의료, 고용, 주거,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 생존의 1차적 책임은 개인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국가에게 있다. 국민복지기본선의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운동은 전국단위로는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정책(교육, 의료, 주택, 고용)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지역단위에선 이와 더불어 지역에 존재하는 취약계층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운동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의 확보를 위한 운동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에서도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운동해야 한다.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지상주의에 세뇌되어 있는 관료들과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사업, 홍보사업, 실천적 사업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00 호

1998년 6월 7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0652-76-1253

·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나.녹.두) · E-mail:human@kor.inp.or.kr · Homepage:http://kor.inp.or.kr/onespark

구체적인 실천 안에서 터득한다

“지령 100호를 내며” - 문 규현(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대표)

〈평화와 인권〉이 지령 100호를 맞았다. 많은 분들이 이를 축하해 주었다. 우리는 그 분들의 따뜻한 애정에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왜냐하면, 그처럼 분에 넘친 칭찬과 격려를 들을 만큼 우리가 실천해 온 것이 대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실천은 하잘 것 없었다. 어떤 분의 지적대로 우리는 이제 겨우 신고식을 치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하려고 한다.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

그렇다. 우리 〈평화와 인권〉의 활동가들은 무엇보다도 활동가 자신의 굽힘없는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실천을 업수이 여기는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 활동가들은 '운동'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기본 원칙의 하나로 삼아온 걸로 안다. 참으로 고결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이론에 대한 무지와 몽매에 빠져있는 정세에서 '이론에 대한 실천의 우위'가 오히려 운동하는 원칙이자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평화와 인권〉이 가장 낮은 곳에 자리잡길 바란다는 한 자원봉사자의 말은 우리의 운동이 구체적인 실천의 '안쪽'에 위치하

기를 바라는 말일 것이다.

우리는 넓게 보자면 인권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단체다. 당연히 인권운동이란 뭐냐는 자문 속에 살고 있다. 어떤 인권운동을 할 것이냐는 자문이 이에 뒤따른다. 아니, 우리가 왜 이 운동을 하려느냐는 자문이 사실은 이들에 앞선다. 그러나 우리 이성은 늘 한계에 직면한다. 이러한 한계는 오히려 하늘이 준 축복이라는 생각조차 든다. 하나의 차트 안에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모두 기록해 놓아야 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답한다. 즉 우리는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의 경제와 정치가 아니라 실제 권력자여야 할 다수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의 경제와 정치를 차분하게 또는 당돌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순한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역사의 짧은 뒤를 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인권의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해관계가 화해할 수 없이 다투는 갈등과 투쟁의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다.

인간해방의 가치관을

한국사회에서 인권을 말할 때 오도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미망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진전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현재 피지배계급과 동격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초국적자본의 세계지배체제'에서 지배계급은 새로운 연대와 같은 것을 꿈꾸며 실현해가고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피할 수 없이 다수 민중의 입장에 서야 한다. 어떠한 민주적 또는 반동적 정권도 역시 민중의 입장에 서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일정한' 진전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는 김대중정권을 한도끝도 없는 반동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김대중 씨가 자신을 '인권 대통령'이라고 칭하건 말건 '인권탄압'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 터무니없이 미흡했던 암살수사면, 그리고 사상선량제도에 대한 그의 이중적인 발언에도, 학생운동에 대한 전근대적인 탄압에도, 노동·청년운동단체에 대한 초도화자전에도 그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은 '인간해방'의 가치관을 가장 구체적인 실천현장에서 구현해 갈 것을 다짐한다.

노동자 숨통 죄는 정리해고

군산 한화노동자 '생존권보장' 요구하며 상경

한화종합화학(주) 군산공장(공장장 유병화) 퇴직 노동자 30여명이 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서울 장안동 본사(대표이사 이종화) 사옥 앞에서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농성과 시위를 벌인 뒤 귀향했다.

군산에서 상경하여 피켓시위와 침묵시위 등을 전개한 노동자들은 3차례에 걸친 본사와의 면담을 통해 △ 퇴직위로금 지급 △임시직 근무 2개월을 근무연한에 포함,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월차, 연차 지급 등 크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측은 그러나 퇴직자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재할비율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해고 수순 밟기

한화 군산공장 노동자들의 싸움은 사실상 지난해 12월 회사측의 퇴직 권고로부터 시작했다. 말로만 떠돌던 '6월 구조조정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당시 회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환율상승으로 인해 앞으로 교대근무는 할 수 없고 퇴직금과 기타 수당도 보장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표를 내라"는 통보를 해왔다. 3교대 근무체제가 회사측에게는 퇴직금 인상요인이었던 것이다.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도 못받는다는 생각으로 전체 생산직 노동자 50여명 가운데 이 때 20여명이 사표를 냈다. 올해 3월에는 십수년간 청춘을 바쳐 일해온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공장이 재가동되기만을 기다리던 노동자들에게 회사측은 '전원 타공장 전출' 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퇴직을 강요했다. 전출 불응자는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이 날아왔다. 형식상 권고사

직과 전출명령이었지만 한화 노동자들에게 이것은 해고수순 밟기에 다름 아니었다. 이 때 다시 17여명이 퇴직했다. 6명은 타공장 전출이라는 비현실을 택했다. 주택문제(전세금)와 자녀교육문제는 그 중에서도 막막했다. 현재 전출자 5명이 직업훈련원에 대기상태다. 전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기정사실이었다. 평생 몸바친 회사에 2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이들에게 보장된 모든 것이었다.

권고사직에서 전출명령까지

아무런 생계대책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당시 관리직 사원들에게 회사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였다. 한화의 취업규칙에 퇴직위로금 지급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근무연한에 따른 누진제 퇴직금만이 적용될 뿐이다. 생산직 출신 노동자들은 '위로금은 한푼도 없다'는 회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퇴직위로금 차별지급과 생산직노동자 부당대우 해결을 위한 한화종합화학 군산공장 비상대책위] <군산노동자의집> 내: 0654-465-5715)를 만들어 상경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에서 독가스를 마시며 청각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소음 속에서 생계를 위해 일해왔다. 회사의 강압에 못이겨 쫓겨난 데다가 20~30년 동안 일하고도 관리직 사원들과는 달리 한푼의 위로금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반민중적 IMF 구조조정 협약 수용 반대시위

범국민운동본부 IMF협약반대

<고용, 실업대책과 재벌 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외)은 8일 낮 12시 IMF 서울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반민중적 IMF협약 강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이름으로 낸 문건에서 "IMF프로그램은 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만성적 고실업, 빈부의 격차 등을 심화시켰다"며 "한국 민중들이 IMF구조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또 "이러한 기획의 의도하는 것은 한국사회 전체를 '거대한 사슬로 묶어 세계자본주의 경제라는 퍼즐의 한 조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행사와 동정 】

▷ 지역사회 정신건강 워크숍

때: 6.13~7.18(매주 토, 총6회)
 곳: 전북대 사회대 1층 세미나실
 주최: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 (0652-270-2962)

※ 제정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주간 [평화와 인권]을 도와주세요.
 구독문의: 0652) 76 - 1253
 후원계좌: 예금주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위조지폐피의자 수사 미군협조 촉구

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 사령관에 <공개서한>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이 군산 미공군 사령관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시민모임 회원 10여명은 지난 3일 오후 군산시 옥서면 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군지휘관에게 위조지폐 피의자에 대한 수사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회원들은 이날 승용차 3대에 분승한 채로 미군기지 내 위병소를 통과해 '위조지폐범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2시간 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날 사흘째 군사훈련 중이던 미군은 시위대를 총과 차량으로 막았으나 충돌은 없었다. 한편, 군 기무대가 이날 시위내용을 취재해갔고 군산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미군과 협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시민모임은 미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위조지폐 범죄에 대한 미공군 사령관의 사과 △한국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피의자를 본국에 송환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군산 미공군 위조지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월 20일 군산시 옥서면 미공군비행장 헌병대앞 쓰레기처리장에서 환경미화원 문월태씨(51)가 1만원권 위조지폐 1백여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수차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고 군산검찰지청과 경찰이 이를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미행정협정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전주지검에서 맡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전주지검에 배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한동영 검사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물론 아직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의문사 진상규명 쟁쟁인

매주 금요일 5시 서울역광장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역에서는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1단계 대국민캠페인이 매일 진행되었다.

6월 5일 금요일부터 2단계 대국민 캠페인이 매주 금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날 공개서한 전달과 시위를 기점으로 공항사용료 인상안 타결 이후 중단된 금요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다.

- 군산 미공군 사령관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 (요약) -

군산 미공군 사령관 귀하

지난 1월20일 군산 미공군기지 내 616 빌딩 앞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한국국민과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분노하고 있다. (중략) 더욱이 위조지폐가 한국에서 통용되는 만원권이었던 것과 한차례도 아닌 수차례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점은 이미 목적 자체가 한국의 법질서를 파괴할 만한 것이었다.

(중략) 또한 한국정부의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였다는 점과 국제적인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미군 사령관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됴에도 미군 사령관은 이에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항간에 이 피의자에 대해 본국송환을 통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95년 4월 13일 서울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미군속 제임스 케이리가 실형 8개월 선고 직후 민간인 여권을 이용 미국으로 도주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형사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기에 한국의 경제를 혼란시킬 수 있는 위조지폐범은 당연히 한국에서 구속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위조지폐범은 한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군산 미공군 사령관에게 다음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1. 미공군 사령관은 위조지폐 범죄에 대해 사과하라.
2. 미공군은 위조지폐 피의자가 한국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3. 위조지폐 피의자에 대한 본국 송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만약 위 요구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자국민 보호만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군산미군기지 우리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 공동대표: 한상렬, 한지원, 염경석, 고희석, 문성주)



시대가 험악해도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윤찬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 방송사에서 매주 수요일 아침에 방영하는 "그 사람이 보고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 가족이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과 이농으로 인해 가족해체가 이루어지던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부득불 생이별을 하게 된 사람들이 주로 등장한다. 현재 주로 30~40대에 처한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 형제와의 생이별로 인한 상처와 한을 안고 살아오다가, 이제야 비로소 매스컴의 힘을 빌어 잃어버렸던 노부모와 형제들과 상봉하여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목젢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한다.

그 사람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였을 때에는 대개 10세 전후의 아동기에 있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가려 해체된 가족,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사회는 너무 무관심하였다. 살림이 어려워지거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은 골치 아픈 부산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물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야 수반되겠지만, 아이를 버리게 된다.

많은 일이다. 최근에 보고된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해 보자. 먼저, 가톨릭대학교 부설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이 주도하여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협의회가 '실직가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한 어머니의 일시 취업과 부모가출로 인하여 저녁시간에 아이들만 지

실직으로 인해 가정의 구조와 기능이 파탄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이 방치되고 유기되는 것은 실업의 비인간성을 시사해 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상황은 결국 가정에서 가장 약자인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을 파괴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나는 경우가 50%를 넘고 6%의 아동은 직접 가사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실직 후 부모의 싸움과 구타(37.5%), 부모 가출(3.9%)이 증가하였고, 5.2%의 아동이 친척집에 맡겨져 있으며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아동은 43%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방과 후 거리를 배회해야 하는 아동이 24%에 이르며, 학교에서 정서장애, 결식, 교육비 미납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70%에 이른다. 이렇게 방치된 아동들은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 유지를 심히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모 국회의원의 폭로에 의해 밝혀진 것인데, 수입약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생체 임상실험을 행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섭다. 우리가 만일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맡겨졌다고 상상해 보라. 그 아이들은 이미 인간이 아닌 것이다.

실직으로 인해 가정의 구조와 기능이 파탄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아직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이 방치되고 유기되는 것은 실업의 비인간성을 시사해 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상황은 결국 가정에서 가장 약자인 아동들의 권리와 행복을 파괴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난 1989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1년 비준하였는데,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관련 권리는 물론이러니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고, 생명권,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 노동력 착취금지 등 폭넓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아동은 각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며,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인권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면 해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든가 부모가 없는 아동이라 해서 비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령 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편집자 주] <평화와 인권> 지령 100호를 맞아 여러 분들이 격려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말씀을 「평화와 인권」은 소중하게 새기며 실천하겠습니다. (원고 실은 순서 - 도착순)

<평화와 인권> 100호 발행을 축하하며

(리수현/용안천주교회 주임신부)

평화와 인권을 담은 길그릇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우리는 불행히도 평화도 인권도 부정당하거나 유보당한 채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것들은 차라리 '사치'하고 과분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이 부재하여 갈망해 온 것이 어디 하필 거부당적 봉건시대에 절대군주제하에서 뿐이었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선포한지 반세기가 넘은 지금에 와서도 그러하지 않는가? 진정한 평화가 없었으니 인권의 보장이 있을리 없고 참된 인권이 보장되기는 커녕 부정되어 왔으니 평화가 있을리 만무하다! 바로 여기에 전북 평화와 인권 연대에서 발행해 온 <평화와 인권>의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요즘은 잡지들과 신문(주간 또는 일간)들의 홍수시대이다. 우리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수 많은 호화로운 잡지들과 신문들이 폭발적으로 발행되어 책방의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 이름들조차 다 기억할 수 없다. 그 중에 <평화와 인권>은 외형으로는 매우 초라하고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것은 '보기에 먹음직하지도 탐스럽지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지도 않는'(창 3: 6) 것이고 "능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눈길을 끌 만한 불품도 없는" (이사야 53: 2) 것이다. 길그릇 같은 보잘 것 없는 하찮은 것으로 보인다. 주간이고 보니 시간적으로는 태어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발행한 회수로는 그 100호를 내었을 뿐이니 자랑하고 축하할 일이 무엇이 있으랴!

그러나 비록 짧은 연조에 4면이라는 제한된 여백에 초라한 모습을 띄고 있지만, 그 안에 평화와 인권이란 보물을 담은 길그릇이구나! 그것이 100호를 내놓았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이 아닌가? 진리와 평화, 그리고 정의와 인권을 소리 높이고, 예언과 역사를 채워 담은 <평화와 인권>, 전주만 아니라 남한만 아니라 전 한반도에 밝게 비추이는 등불 되고 목탁되라.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 나라의 평화정착과 민주화 실현과 인권옹호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취재 홍보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킨 공(功)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대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바로 오늘의 100호 발행을 용감하게 강행해 주신 발행인과 편집인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열악한 재정과 인력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상황일 지라도 우리 민족 전체가 평화스러운 민주 사회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서로가 존중하며 사랑과 기쁨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를 아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저 개인으로서 <평화와 인권>이 더 폭넓게 꾸려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신적 재정적 뒷바침을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사랑으로 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인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거름거름 태어나거라 <평화와 인권>

(김희전/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

"평화와 인권"이 왔구나.
 숨어있는 내 양심의 옷을 벗겨 놓은 듯이
 너를 만날때에는
 언제나 나는 알몸이 되어 버린다.
 8절지 조그만 너의 가슴 속에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뭉부림 치고
 펜 끝에 찍힌 너의 진실들 읽으면
 나는 파아란 하늘 우러러 본다.

"배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
 기어이 도달해야 할 인류의 평화"
 그렇게 너의 몸이 녹아
 더듬들이 되어서 민주주의 세상을 만나겠지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운동 투사가 되고
소외된 주민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간혀있는 양심수에게는 위안의 벗이 되어주며
잘못된 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굉풍 얼어 붙은 세상을 일깨우니
너는 이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구나

백번의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다시 태어나고
걸어온 길보다
앞서 걸어가야 할 길이
더욱 고통스러워 진다 하여도
주저 않지 말고 거듭 거듭 태어나거라

너가 부여안고 달려오는
이땅의 진실과 양심들은
민주주의 뜻을 피우는 밀거름이 되어
내 가슴에 살아 남겠지

〈평화와 인권〉
오늘 또 너를 만나보자
작지만 뜨거운 너를 안아보자

가장 낮은 곳에 자리잡길

(최영선/자원봉사자)

나와 인연이 없거나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이방인으로서 머물길 바란다.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게도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방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과연 가장 진실되고 끈은 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던져주는 곳이 많지만 그중 내가 인연을 맺게 된 곳은 <전북 평화와 인권 연대>라는 곳이었다. 소식지와 함께 그곳의 활동들을 보면서 결코 불합리한 제도와 타협하지 않을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과연 이 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모순들에 대한 진보적인 문제제기와 끊임없이 마련된 고민들을 수행하는 그 곳에서 이번 100호 축하 원고청탁을 부탁받았을 때 굳이 하고 싶은 말은 외길이라 걸어왔던 이 길이 이제 가장 낮은 곳에 저항의 미학으로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100호를 축하드립니다.

싸움을 선포하는 나팔소리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와 인권〉이 100호를 맞았다는 소식이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하루소식〉을 처음 만들던 때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밥먹듯이 새운 밤이 달력을 지워나갔습니다. 하얗게 탈색되어 가는 일꾼들의 얼굴색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얼마 못갈 일을 왜 하나는 눈초리는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요란한 세상사에 묻혀버린 인권 문제와 그 주인공들은 보잘것 없는 팩스신문의 지면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인권침해로 고통받거나 또는 굴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란하거나 기분좋은 소식이 없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평화와 인권〉이 전하는 소식은 외면당한 것에 눈길을 주고 싸움을 선포하는 나팔소리여야 합니다. 100호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더 세계 더 당차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신교식일 뿐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주인인 모든 분들과 연대의 손을 굳게 잡고 싶습니다.



평화와 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01 호

1998년 6월 15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만식

· 주소: [561-162]전주시 덕진구 전북2동 1034-1 숲정이성지사회관 · 전화)0652-76-1253
· 팩스)74-7486 · 통신ID)onespark(천.나.늑.두) · E-mail:human@kor.inp.or.kr · Homepage:http://kor.inp.or.kr/onespark

IMF 협약 폐기하라

노동본부, IMF 서울사무소에 항의방문

IMF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 협약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공론화돼 가고 있다.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 : 공동대표 권영길·김진균·문정현·이창복 외) 대표단(문정현 신부 등 5명)은 지난 11일 과천 제2정부청사 IMF 서울연락사무소를 방문하여 미셸 캉드슈 총재 앞으로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앞선 오후 2시경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청사 앞에서 사전집회를 가졌다.

삶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돼야

대표단은 항의방문을 통해 "구조조정·노동력 유연화 등 IMF의 요구에 의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가 긴축정책을 실시해 실업대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MF 관계자는 "실업자 지원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IMF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에 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표단은 '한국국민의 이름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 협약의 폐기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공개서한에서 "기준의 IMF 구조조정 협약이 폐기되고 한국 민중의 삶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서는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없다"며 "IMF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전반이 이미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IMF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자본·금융시장에 대한 국가의 전통적인 통제수단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고금리와 초긴축재정을 강요하는 한편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을 재정적자를 이유로 광범위하게 민영화시키는 방식 일변도"였다고 비판하고 "IMF는 국민경제를 파괴하는 자본·금융시장 자유화와 탈규제 공세, 고금리 및 초긴축재정정책 강요, 공공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민영화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대표단은 IMF에 △ 정리해고제나 근로자파견제를 강요하며 한국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과 △ 한국에 관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민주적 민간단체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민중 저항 경고

운동본부는 이어서 "IMF는 오로지 초국적자본 및 선진자본주의국가 금리수취인들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며 "IMF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가장 큰 희생자인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

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의 방침을 계속할 경우 한국 민중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기업 매각 경제파산 초래"

전북본부, 민영화 반대성명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매각) 방침에 대해 노동자들 뿐 아니라 사회단체들도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전북본부 : 상임대표 고흥석·문규현·백남운·염경석·한규채·한상렬)는 한국통신·한국전력·철도 등 12개 국가 기간산업체를 219억 달러의 외환 확보를 위해 매각한다는 정부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는 긴급성명을 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성명서에서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매각할 때 단기적으로는 외국자본유치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간산업에서 기자재 국산화가 가로막히고 기술개발이 중단될 뿐 아니라 각종 연관산업이 파산해 이후 국가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본부는 "특히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크게 우려한다"며 "해외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